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1. 6. 28.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2021년 상반기 경제운영 성과	1
II. 향후 경제여건 평가	3
III.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5
【 완전한 경제회복 】	
1. 더 빠르고 강한 회복	7
2.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42
3.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52
【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	
1. 새 성장동력 확보	66
2.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98
IV. 2021~22년 경제전망	115
(별첨1) 2021~2022년 경제전망	117
(별첨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	118
(별첨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125

I. 2021년 상반기 경제운영 성과

◇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정책역량 총동원

1 [경제회복] 지난해 310조원 규모 지원대책 추진에 이어, 금년에도 내수·투자활성화, 수출력 보강 등을 통해 **빠르고 강한 회복 및 반등에 진력**

- * (내수) 소비증가분 특별소득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고효율가전 구매환급, 소비쿠폰 등 (투자)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신규 설비투자 세제·금융지원,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
- * (수출) 물류·출입국 등 현장애로 해소, 비대면/온라인 마케팅·플랫폼 지원, 수출금융 확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에 따른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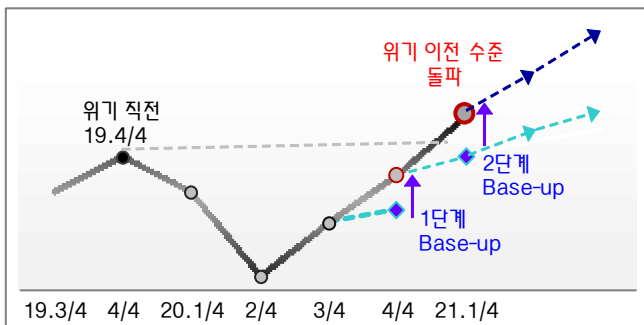
☞ **금년들어 당초 예상 및 주요국 대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가시화**

- ※ '20년은 주요국 대비 역성장폭(△0.9%) 최소화 <G20 국가중 3위>
- ▶ 글로벌 경제규모 Top10 진입 (12 → 10위, 러시아·브라질을 제치고 2단계 순위 상승)
- ▶ 1인당 GDP, 사상최초 G7 국가인 **이탈리아 추월** (한국 31,637불 > 이태리 31,288불)

1 (성장)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회복세로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중 최초로 '21.1분기에 **위기직전('19.4/4) GDP 수준 돌파**

* 성장률 시장 컨센서스/실적 : ('20.4/4) 0%대 중후반 / **1.1%** ('21.1/4) 1% 내외 / **1.7%**

GDP 성장경로 추이



경제규모 Top10 국가 '21.1/4 GDP

('19.4/4 = 100, 선진국, 신흥국)

1	미국	99.1	6	인도	102.7
2	중국	107.1	7	프랑스	95.3
3	일본	98.0	8	이태리	93.6
4	독일	95.0	9	캐나다	98.3
5	영국	91.3	10	한국	100.6

2 (수출) 1~5월 수출액은 2,484억불(+23.4%)로 **역대 최대치** 경신 < 특히, 4월 이후로는 높은 증가세 유지중 >

* 수출(%) : ('20.2/4)△20.3 (3/4)△3.5 (4/4)4.1 ('21.1/4)**12.5** (4)**41.2** (5)**45.6** (6.1~20)**29.5**

3 (고용) 3월 이후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점차 회복중**

* 취업자수 증감(만명) : ('20.4/4)△44.1 ('21.1)△98.2 (2)△47.3 (3)**31.4** (4)**65.2** (5)**61.9**

4 (대외신인도) 국제사회는 우리경제의 빠른 위기 복원력과 대외 건전성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 → **글로벌 위상 공고화**

- * 포브스('21.4.30) : “예측을 뛰어넘은 한국경제 회복세... 회의론자들은 또 틀렸다”
- * IMF('21.4.29) : “한국은 코로나19 영향을 제어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
- *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국가부도위험(CDS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② **[포용강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 보강에도 역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버팀목·버팀목+자금 지원, 공공요금·사회보험료·임대료부담 경감 등 (고용유지) 고용안정지원금, 직접일자리·공공기관 채용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 **충격이 취약계층으로 집중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격차확대를 최대한 완충**

① **(분배지표) 가계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 정책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확대되면서 5분위배율도 2분기 연속 개선**

* 가계소득 증가율(%) : ('20.1/4) 2.2 (2/4) 3.5 (3/4) 1.8 (4/4) 1.8 ('21.1/4) 0.4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19.1/4	2/4	3/4	4/4	'20.1/4	2/4	3/4	4/4	'21.1/4
시장소득(A)	13.97	11.25	11.24	10.56	14.77	14.38	13.08	11.85	16.20
처분가능소득(B)	6.74	5.74	5.76	5.83	6.89	5.03	5.92	5.78	6.30
개선효과(A-B)	7.23	5.51	5.48	4.73	7.88	9.35	7.16	6.07	9.90

② **(안전망) 고용보험·기초생활보장 등 사각지대를 꾸준히 축소**

* 고용보험 가입자(만명) : ('18.12) 1,341 ('19.12) 1,384 ('20.12) 1,408 ('21.5월) 1,426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명) : ('18.12) 174 ('19.12) 188 ('20.12) 213 ('21.5월)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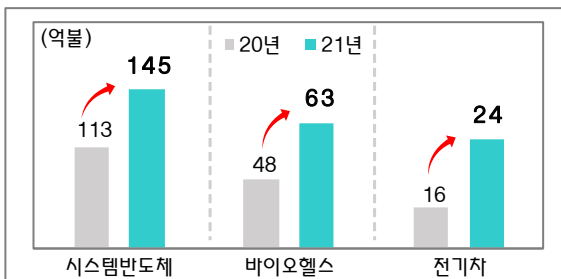
③ **[도약준비] 위기 극복을 넘어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 육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면서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제·사회 구조전환 대비에도 만전**

* BIG3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20.12>, K-뷰티 혁신 종합전략<21.1>, 청년 창업활성화 방안<21.5>,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21.1>,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21.2>,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21.3>,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21.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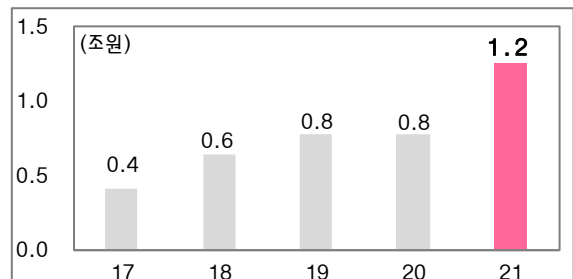
👉 **BIG3산업 및 벤처·창업 활성화 등 성과 가시화, 미래선도전략도 선제적 추진**

① **(새성장동력) BIG3 등 신산업 분야 수출이 급증하고, 벤처투자 증가세가 크게 확대('21.1분기 +61%)되는 등 제2벤처붐 지속 확산 → '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달성('20년 2위)**

BIG3산업 수출(1~5월 누적 기준)



벤처투자 금액 추이(1/4분기 기준)



② **(미래선도전략)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디지털·친환경 경제구조 전환 노력을 높게 평가**

* OECD('21.5) : 한국판 뉴딜은 투자증가를 통해 성장 제고 +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 무디스('21.1)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최고등급(144개국중 독일·스위스 등 11개국) 부여

II. 향후 경제여건 평가

◇ 하반기에도 우리경제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부문별 회복속도가 불균등(uneven)**한 가운데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이 가속화**

1 수출·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속 견인 예상

① (수출) 美·中 등 주요 교역국 경기회복세 강화, IT 및 신산업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연간 역대 최대치(약 6,075억불) 달성 전망 < 다만, 작년 기저흐름 감안시 2분기를 정점으로 증가세는 둔화 예상 >

- * '21년 성장전망(% , IMF, 작년말 → '21.4월) : (세계)5.2→**6.0** (美)3.1→**6.4** (中)8.2→**8.4**
- * 글로벌 반도체매출 전망(% , WSTS, '21.3 →6월) : ('20) 6.8 ('21°) **10.9 → 19.7** ('22) **5.6 → 8.8**
- * 수출(%): ('20.1/4)△1.9 (2/4)△20.3 (3/4)△3.5 (4/4)4.1 ('21.1/4)**12.5** (2/4°)**40** (3/4°)**17** (4/4°)**9**

② (투자) 반도체 등 IT 부문 호조에 더하여 비IT 부문도 신기술·친환경 투자 확대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 * 설비투자(전기비, %) : ('20.1/4)△1.0 (2/4) 2.7 (3/4) 2.2 (4/4) 0.8 ('21.1/4) **6.9** (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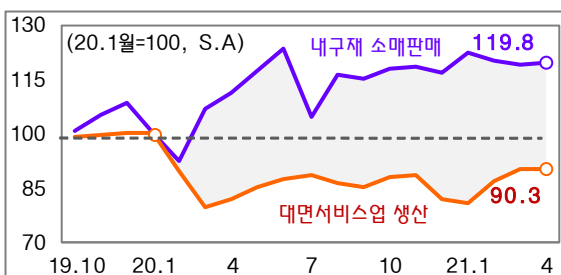
2 내수·고용은 아직 **위기충격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개선속도도 완만할** 전망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경기의 가시적 개선 제약 우려**

① (내수) 백신보급 확대 및 심리개선, 소비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대면서비스 중심 이연된 소비가 점차 분출되면서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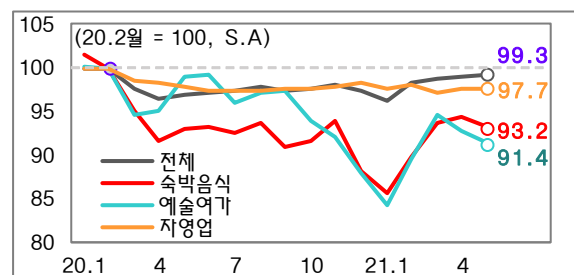
- * '21.4월 SA지수 : (서비스업 생산) 100.2 [(대면서비스업) **90.3** (여타서비스업) 103.5]
(20.1월 = 100) (소매판매) 106.6 [(내구재) 119.8 (준내구재) 107.8 (비내구재) 99.9]

- 다만, **코로나 불확실성 잔존 및 해외여행 제약** 등으로 금년중 위기 이전수준 회복은 어려운 상황<민간소비:('20)△5.0% → ('21°)+2.8%>

내구재 및 대면서비스업 생산 추이



취업자수 추이



② (고용) 민간부문 여건 개선, 정책지원 효과 등으로 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어려움 지속 우려

- * 취업자수 증감(만명) : ('20.4/4)△44.1 ('21.1)△98.2 (2)△47.3 (3)**31.4** (4)**65.2** (5)**61.9**
- * '21.5월 취업자수(SA) : (전체) 99.3 [(대면서비스업) **95.3** (여타서비스업) 102.8]
(20.2월 = 100) [(상용직) 101.3 (임시일용직) **97.2** (자영업자) **97.7**]

- 금년 고용은 상용직 중심으로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대면서비스업·자영업자 등의 회복까지는 시간 소요 예상

③ (양극화) 내수경기의 부문별 불균등 회복 및 취약계층 고용 부진 등이 시장소득 격차해소를 제약할 가능성

* 시장소득 5분위배율 : ('19.1/4) 13.97 (2/4) 11.25 (3/4) 11.24 (4/4) 10.56
('20.1/4) 14.77 (2/4) 14.38 (3/4) 13.08 (4/4) 11.85 ('21.1/4) 16.20

▪ 소득 뿐 아니라 주거·교육·돌봄·자산 등 전반적 격차확대 우려

* 순자산 지니계수(매년 3월 기준, 가금복) : ('17) 0.584 ('18) 0.588 ('19) 0.597 ('20) 0.602

③ 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대내외 리스크 요인 상존

① (소비자물가) 농축산물 수급 개선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둔화될 전망이나, 국제유가, 장마·태풍 등이 리스크로 잠재된 상황

* CPI(%) : ('20.1/4) 1.2 (2/4)△0.1 (3/4) 0.6 (4/4) 0.4 ('21.1) 0.6 (2) 1.1 (3) 1.5 (4) 2.3 (5) 2.6
- 농축수산물 2.0 3.2 10.3 11.4 10.0 16.2 13.7 13.1 12.1
- 석유류 10.4 △13.7 △10.7 △13.8 △8.6 △6.2 1.3 13.4 23.3

* '21년 CPI 전망(%) : 1.8%내외 [(1/4) 1.1 (2/4) 2대 중반 (3/4) 1대 후반 (4/4) 1대 후반]

② (자산시장) 유동성 급증에 따른 자금쏠림, 부동산·가계부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회복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④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전환도 가속화되면서 선제적·전향적 대응 절실

① (산업경쟁력) 디지털·비대면화가 앞당겨지면서 주력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긴요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 , 연평균) : ('90년대) 8.0 → ('00년대) 6.0 → ('10년대) 2.2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10년째 60%수준에서 정체, 주요국과 10~20%p 격차 유지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18년) : (韓) 62.4<'19년> (美) 79.8 (日) 69.6 (獨) 68.7 (英) 79.7 >

▪ 특히, 주요국 정부간 시장우위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신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 (美) 5.9조불 규모 3대 재건정책<American ①Rescue Plan, ②Jobs Plan, ③Families Plan> 추진('21.3)
(EU) 향후 4년간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에 955억유로 투자 추진('21.3)

* 우리 신산업 기술수준(미국=100, '20년) : (ICT·SW) 83 (소재·나노) 81 (생명·보건) 78

② (구조전환) 저탄소 경제로의 국제경제질서 변화, 인구총격 심화* 등도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

* ①인구감소(출생자 < 사망자), ②지역소멸(수도권 > 지방인구), ③초고령사회('25년~) 임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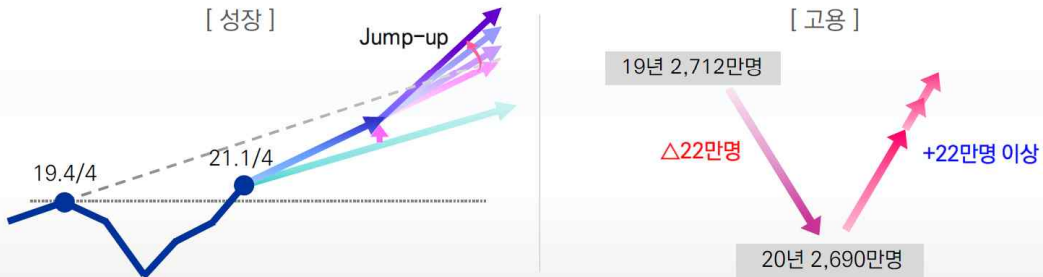
▪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규제강화*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수출·기업 자금조달 등에 부정적 영향 우려

* 美·EU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본격화, EU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글로벌 기업·금융사의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참여·ESG 투자 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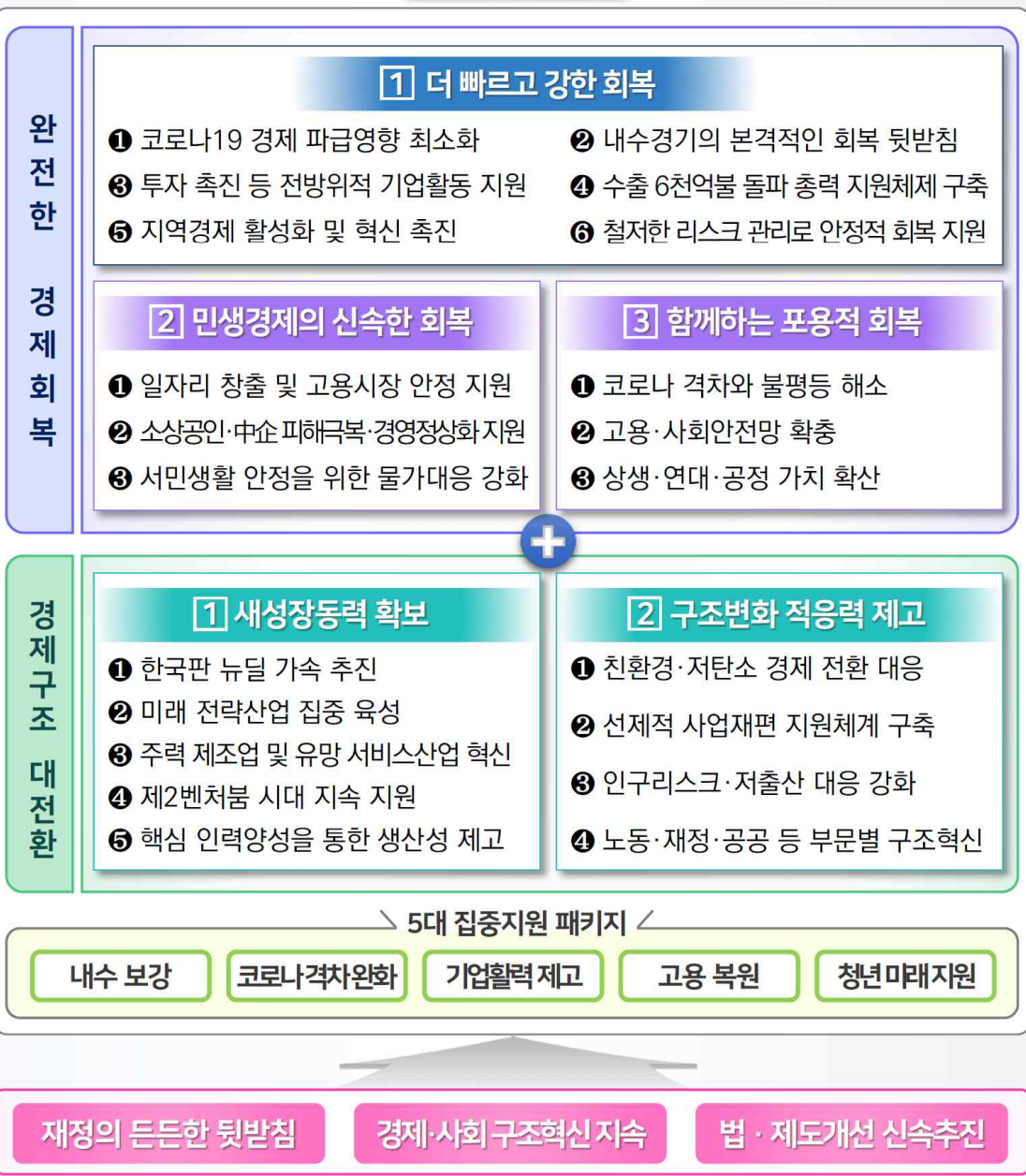
Ⅲ.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목 표

완전한 경제회복(4%이상성장 & 고용회복) +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3+2 정책방향



완전한 경제 회복

< 목 차 >

1. 더 빠르고 강한 회복	7
①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7
② 내수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뒷받침	14
③ 투자 촉진 등 전방위적 기업활동 지원	17
④ 수출 6천억불 돌파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 구축	24
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 촉진	30
⑥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회복 지원	34
2.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42
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 지원	42
②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극복 및 경영정상화 지원	45
③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응 강화	49
3.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52
①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	52
②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58
③ 상생·연대·공정 가치 확산	61

1. 더 빠르고 강한 회복

1.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① 성장세 지속, 코로나 격차해소 등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재정정책]

- ①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회복·민생 개선·격차 완화로 신속히 이어져 완전한 경제회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
 - 금년 예상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 극복 상생 3중 패키지,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하는 2차 추경 편성
 - * ①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②소상공인 피해지원, ③상생소비지원금
 - 7월초 국회에 제출하여 최대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②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예산 및 1·2차 추경 예산이 연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관리 강화
 - 연간으로도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집행을 달성을 목표로 추진
 - * 중앙재정 집행률(% , 총지출 기준) : ('18) 96.7 ('19) 97.8 ('20) 97.7
- ③ 지방재정도 중앙의 확장 기조에 맞춰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용
 - 정부 추경에 따른 대규모 교부세·교부금 증액분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

[통화정책]

-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
 -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 적기 실시

[외환정책]

-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② 코로나 대응 한시 금융지원조치 등은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① 채권시장 지원 프로그램은 기간 연장 및 지원조건 보완·정비

- 저신용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추진('21.7)하되, 매입규모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서비스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도록 운용기준 개선('21.8~)

- ▶ (등급별 한도) (현행) 중소기업: 30~200억원 → (개선) 50~250억원
 - ▶ (동계열 한도) (현행) 대: 2,500억원, 중견: 1,500억원, 중소: 800억원
(개선) 대: 4,000억원, 중견: 2,000억원, 중소: 1,300억원
 - ▶ (기업당 한도) **매출감소 중소기업**(전기대비 50% 이상)
↳ (현행) 차기 1년간 추정매출액 → (개선) 최근 3년간 매출액의 산술평균
- 저신용등급 중소기업(BB등급)**
- ↳ 제조업, 유망·특화서비스 : 매출액 기준 금액의 1/4 → 1/3
 - 그 외 업종 : 매출액 기준 금액의 1/6 → 1/4

-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산은)은 저신용회사채·CP 매입기구(SPV)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지원대상 조정*

* ①신규발행도 지원, ②신용등급 기준 완화(회사채 A→BBB 이상 / CP A2→A3 이상)

②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21.9월말 기한)는 향후 방역·실물경제·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착륙 추진

- 필요시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2조원 수준까지 보강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現 1.35조원)

※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프로그램 규모 확대(안)

	현행	확대	비고
계	1.35	2.0	
▶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산은)	0.3	0.5	- 신규자금 대출, 지분투자 등 지원
▶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기은)	1.0	1.2	- 금리인하, 원금상환유예, 이자 분할납부 등
▶ 밸류업 프로그램(신보)	0.05	0.3	- 보증 만기연장, 보증수수료 인하 등

▪ 연체채권 발생 등에 대비한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노력 강화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및 캠프 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 신청기간을 금년말까지 6개월 연장**(‘21.6월말→‘21.12월말)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조정) 적용기준을 개선¹⁾(‘21.下)하고 채무조정제도 개선 추가 검토²⁾**

- 1) (이자율) <현행> 일괄 50% 인하 → <개선> 채무과중도 등에 따라 차등화
(특례(65% 인하)대상 확대) <현행> 기초수급자 등 → <개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추가
- 2)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중 상환유예 기간 확대(현행 6개월) 등

▶ **국민행복기금 성실상환 자영업자 대상 소액대부 한도 상향(최대 2,000만원)(‘21.8)**

- * (현행) <6~12개월 성실상환> 300만원 / <12~36개월> 1,000만원 / <36개월~> 1,500만원
- (개선) <6~12개월 성실상환> 500만원 / <12~24개월> 1,000만원 / <24~36개월> 1,500만원
- <36개월~> 2,000만원

▪ 만기연장 거절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도 연계 지원

▶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사업자 햇살론’ 대환자금 지원 요건 합리화(‘21.7)**

- ‘사업자 햇살론’ 대환대출 대상 금융기관 범위 확대¹⁾ 및 금리 요건 완화²⁾

- 1) (현행)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카드사 → (개선) 상호금융·보험사 채무까지 포함
- 2) (현행) 연이율 20% 이상 고금리 채무 대상 → (개선) 연이율 16% 이상

▶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 지원 기준 완화(‘21.7)**

-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업자가 중금리대출(사잇돌대출)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 개선

- * (현행) 소득기준 판단시 최근년도 소득을 활용
↳ 연소득: 은행/상호금융 10백만원 이상, 저축은행 6백만원 이상
- (개선)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는 매출감소 이전 소득을 활용

③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와 연계하여 연착륙을 추진하되,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 은행 외화/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21.9말),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21.12말) 등

③ 차질없는 백신접종으로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 추진

- ① 11월 집단면역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백신 구매·접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피해보상 지원도 강화
 - 금년 1억 9,200만회분 도입,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 지원(2차 추정)
 - 접종 편의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공공예방접종센터를 증설(267→282개)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2차 추정)
 -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을 확대하고(2차 추정),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 치료비 지원 지속(~'21년말)
- ② 백신접종 진전 등에 따른 경제활동의 점진적 회복을 위해 백신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조정, 거리두기 개편 등 추진
 - 예방접종자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및 다중이용 시설 인원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21.7~)
 - * (1차 예방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기준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및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기준 제외(추가적용)
 - 거리두기 단계 축소(5→4단계),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 추진(7.1~)

<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내용 >

- ▶ 단계 간소화 및 전환기준 변경 : 기존 5단계 → 4단계
- * (주기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 (보조기준) 감염재생산지수(R) 등
- ▶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화
- ▶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 통해 3개 그룹으로 재분류 등
→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구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유행/인원제한	권역유행/모임금지	대유행/외출금지
적용범위		시·군·구, 시·도, 권역		권역/전국
사적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집합금지	없음	없음	없음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운영제한	없음	1그룹 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1, 2그룹 ²⁾ 22시 제한	1, 2, 3그룹 ³⁾ 22시 제한

1)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④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로의 도약(「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 발표)

[내년 초까지 국내 백신개발 추진]

① (임상시험 지원) 현재 임상중인 국내 백신이 하반기 3상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비용 집중 지원(2차 추정)

- 신속 임상 진입 및 시험기간 단축을 위해 표준임상계획서 제공, 기존 제품 비교임상 적용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운영

* 임상시험기관별 개별 IRB 승인 → 중앙IRB 통합 심사로 신속 승인 추진

② (인허가 지원) 임상시험 후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을 설치하고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 진행

* 허가시 제출자료를 개발 단계별로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수시 심사 진행

- 신속 허가체계 전환으로 허가심사기간(현행 180일 이상→40일 이내) 및 국가출하승인기간(현행 2~3개월→20일 이내)을 대폭 단축
- 백신개발 관련 '제품화 지원 밀착 상담 협의체' 운영, 백신개발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우리 백신 프로젝트' 추진(21.5~)

③ (컨소시엄 지원) 국내 mRNA 백신 등의 개발·생산 가속화를 위해 기술개발 기업-생산역량 보유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지원(21.下~)

- 핵심기술 해외도입, 원료(원부자재) 생산·확보, 생산설비 및 장비 구축(대량생산 및 완제품 공정 포함) 등 지원

④ (양산 지원) 백신실증지원센터(안동·화순 소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국내기업의 시제품(임상·비임상 시료) 생산 등 지원

- 국내 백신개발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 및 백신개발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해 백신개발 완료 전 선구매 추진*(2차 추정)

* 임상 2상 중간결과 도출 및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시 성공가능성, 유효성, 안전성 및 기업별 생산능력·제공시기·제품가격 등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글로벌 백신개발사의 위탁생산·기술이전 확대]

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원부자재 생산기반 강화

- 우수한 CMO 역량(생산능력 세계2위)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개발기업-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간 위탁생산·기술이전 촉진
- *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기술이전), 스푸트니크V (국내 제약사 컨소시엄과 위탁·기술이전) 등 3개 품목 국내생산
- 관계부처·민간합동 지원단을 구성하여 원부자재 개발·수급·통관·인허가 등 집중 지원(21.7)
- * 원부자재 24시간 신속 통관 지원, 수입 심사 시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관련 기업인 예방접종 및 자가격리 면제 심속심사 추진 등

② 글로벌 백신·원부자재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첨단투자지구 지정(산집법 개정, 9월부터 시행)을 통한 임대료·부담금 감면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확충* 추진
- * 예)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 보조금 보조율 가산 등
- R&D·시설투자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지원 확대 및 현행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한도의 최대치(50%) 적용 추진
- * (R&D 비용)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p 상향, 최대 50%(대·중견 40%) 지원, (시설투자) 공제율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 (현금지원) (現) 연구시설 투자시 50%까지 가능 → (추가) 국가전략기술 제조시설도 적용

[중장기 백신개발·생산 인프라 확충]

① (개발 인프라) 중·장기 백신개발 연구시설 등 지속 확충

- 차세대 치료제·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해 신종·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 추진
- mRNA백신 등 차세대 백신개발 추진을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 개방 확대 및 추가 구축 등 검토

② (생산 인프라) 차세대 백신 생산역량 강화 지원

- 백신개발, 긴급시 상용화 생산지원 및 mRNA 등 차세대 백신플랫폼 생산기반 구축 등을 위해 백신실증지원센터의 시제품 등 생산지원기능 확충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22)하여 대량생산 경험이 없는 벤처기업 등에 백신 플랫폼별 생산기술 지원
 - * 임상효능 평가, 품질검사 분석·검증, 시험법 마련 등 제품화 종합 컨설팅
 - mRNA 합성·편집 등 개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정관리·대량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센터 구축 검토
 - 효소·필터 등 mRNA 백신 전용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 및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현장형 인력양성 추진
- ③ (인력 양성) 차세대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임상시험 선도 인재 양성
- 임상시험 전주기 프런티어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5년간('21~'25) 전문인력 1만명 양성 추진

5 위기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료체계 확충 노력 지속

- ① 국가 필수 의료기능 및 중앙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
-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추진('21.4분기 설계착수)
 - * 응급·중증외상, 심뇌혈관, 모자보건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기능 강화
 - 국가 차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진료·임상연구·교육·위기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는 중앙감염병병원 신규 건립('21.4분기 설계착수)
- ② 지역 의료공백 등이 없도록 지역 단위 거점 의료체계 구축
-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별(70개 중진료권)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협력 활성화
 - 지방 공공의료역량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의 이전, 신·증축 및 감염 안전설비(음압병실, 공조시스템 등) 확충 등 지원
 - *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속초·충주의료원 증축 등 추진('21~)
 -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재발 등에 대비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24년)
 - * 현재 중부(충남), 호남(광주), 경북(대구), 경남권(경남) 4개소 건립 중

2. 내수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뒷받침

①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을 피해 분야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

- ①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를 위해 6대 소비쿠폰·바우처 추가 발행(2차 추정)

구분	인원	주요 내용
프로스포츠관람권 ^{신규}	100만명	-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관람권 할인
영화쿠폰 ^{신규}	167만명	- 영화관람권 1매당 6천원 지원
철도·버스 쿠폰 ^{신규}	14만명	- 철도·버스 왕복여행권 50% 할인
체육쿠폰	40만명	- 민간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료 3만원 환급
통합문화이용권	20만명	- 저소득층 문화, 체육, 관광 연 10만원 지원
농수산물쿠폰	1,100만명	- 농수산물 최대 20% 할인

- ② 소비쿠폰은 백신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 재개

- 전국민 70% 대상 1차 백신접종 완료(9월말 목표) 이후에는 온·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

< 소비쿠폰 단계적 재개 추진(안) >

- ▶ 소비쿠폰 사업을 밀집도·이동거리 등 쿠폰별 특성을 감안하여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백신접종 진전(1차 접종률 기준)에 따라 그룹별로 단계적 재개
 - ①접종률 50% →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재개, 프로스포츠관람권 개시
 - ②접종률 70% → 숙박·관광 쿠폰 재개, 철도·버스 쿠폰 개시

- ③ 취약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지도록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설(2차 추정)

< 상생소비지원금 추진(안) >

- ▶ (추진방안)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다음달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
 - ↳ (예) 2/4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 8월 153만원 사용시 캐시백 5만원
- ▶ (지급대상)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법인카드 제외) 중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 제외
- ▶ (지급한도) 1인당 30만원, 월별 10만원 한도
- ▶ (시행기간) 3개월 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검토

④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2차 추정)

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달 마지막 주(넷째주) 일요일을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혜택 제공

* ①당일 구매고객 대상 영수증 이벤트 개최(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기프트콘 등 제공)

②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③지역 전통시장별 기획행사 실시 등

※ '21.10월, 11월 2회 시범 실시 후 '22년 정례화 검토

② 방역안정과 연계한 소비행사 활성화 등 소비진작 여건 조성

① 대한민국 동행세일(6.24~7.11)은 방역여건, 새로운 유통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

② 하반기 대표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1~11.15)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소비진작 행사로 대대적 활성화 추진

▪ 중소 유통·제조업체 등 소상공인의 쇼핑행사 참여를 적극 독려

* 예)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매장 내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

▪ 행사기간 중 부처·지자체가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 등과 연계

* 예) 부산국제수산 EXPO, 광주세계김치축제, 온통대전 등 지역행사의 코세페화

▪ 자체 할인여력이 크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상 소비도 행사기간 중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

- 행사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공급물량을 3배 수준 확대 추진

* 기존 2주간 평균 발행물량(0.8조원)의 3배 수준인 2.3조원 내외 발행

-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2배 상향(5%→10%)하여 특별판매 시행

* 통상 설·추석 등 명절 계기 할인율 상향 → 하반기에는 코세페에도 적용

③ 연초부터 추진 중인 3대 소비 패키지는 하반기에도 지속 시행

▶ '21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20년 대비 5% 초과)에 10% 추가 소득공제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 연말까지 지속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사업 시행 지속(500→700억원, 既 확대)

④ 고령층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농지·주택연금 가입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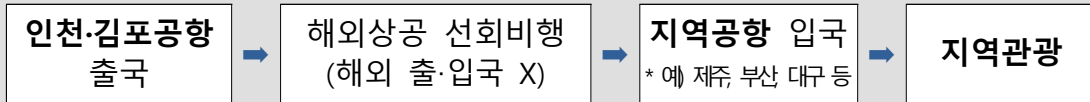
▪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65세 → 만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검토

▪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등 관련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 검토

③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활력 제고 뒷받침

- ①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을 다변화하여 내국인의 면세쇼핑과 연계한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21.8~)

- ▶ (현행) 출·도착 공항이 동일한 상품만 운영 중
- ▶ (개선) 출·도착 공항이 다른 상품 개발·출시(내국인 면세점 이용 허용)



- ②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시기는 방역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고, 철도·고속버스 할인권 판매, 각종 지역 행사 등 이벤트 연계 추진

- * 철도 : KTX포함 열차 편도 2회 이용가능 정액권(패스) 판매(12만장)
- 고속버스 : 4개 권종(3·4·5·7일권) 할인 판매(2.5만장)

- ③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안심여행 프로젝트' 추진('21.11)

- 가을 안심관광지(25선) 및 안전한 농촌여행지(30선) 선정·발표
-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현재 운영 중인 '여행예보 서비스'를 '안심관광 지킴이' 서비스로 고도화

- * (현행) 예상혼잡도·날씨 등 제공 → (개선) 실시간 혼잡도(11월), 대화형 챗봇 서비스('22년~)

- ④ 새로운 비대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한 '차박' 관련 제도 정비

- * 지역불편 해소 등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예:관광진흥법 등)

④ 방한 관광의 단계적 재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 ①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 버블 (여행안전권역)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관광 부분 재개

- * 상대국가, 방역당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 운영계획 확정('21.7)

- 협약 체결국가 등을 대상으로 트래블 패스 시범사업도 추진

- * 예방접종증명서·PCR 음성확인서 등 각종 방역증명 서류를 디지털 형태 등으로 저장확인

- ② 위기 이후 관광산업의 본격적인 회복·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코로나19 시대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 수립('21.7)

3. 투자 촉진 등 전방위적 기업활동 지원

(1) 투자 회복흐름 뒷받침

①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확충

①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 트랙으로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21.下~'24)

- 국가전략기술은 ①반도체, ②배터리(이차전지), ③백신 3대 분야로 구성
- 3대 분야 세부기술(안)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21.7)

*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시스템/소재·부품·장비 부문을 포함하되, 지원실효성을 위해 초기 양산시설 투자대상 기술을 포함하는 등 기술수준을 조정

<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6	8	16	4

②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확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③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 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집중 지원('21.下~'23)

* 「K-반도체 전략」에서 발표한 '1조원+ α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대상·규모 확대

- ▶ (지원내용) 시설자금 용자(설비 신·증설에 한정)
- ▶ (지원조건) 금리 우대 최대 1.0%p 감면 / 대출기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 (재원)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산은) 등 활용

② 110조 투자 프로젝트 신규사업 발굴 및 신속 집행 추진

[기업투자 프로젝트 28조원]

① 하반기 9.2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 추가 발굴 추진

* '21년 18조원 발굴 목표 중 현재까지 8.8조원 발굴

- 투자지원 카라반·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투자애로 해소 지원

< 상반기 주요 신규 발굴 프로젝트 >

- ▶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2조원),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1.4조원), 충북 등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설(1.1조원), 창원 철도차량공장 터널공사(0.1조원) 등

< 하반기 신규발굴 후보과제(예시) >

- ▶ A사 LNG시설 건립(1.5조원) : 시설조성 관련 관계기관 이견 조정
- ▶ B사 연구개발센터 건립(0.1조원) : 부지확보 절차 가속화 지원

② 既발굴 프로젝트 중 6건(10조원 규모)은 하반기 중 순차 착공 지원

프로젝트	투자액	하반기 추진계획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1.6조원	▶ 토지보상 착수/착공
화성 국제테마파크	4.6조원	▶ 테마파크 기획사 선정, 관광단지 지정 등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	1.8조원	▶ 건축허가 및 착공
데이터센터(3개소)	1.4조원	▶ 건축 등 인·허가 절차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	0.5조원	▶ 용지분양, 산단 입주 지원
e-커머스 물류센터(2개소)	0.2조원	▶ 인·허가, 산단 용지분양 등

[민자사업 투자 17.3조원]

① 하반기 중 6.4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 지속 추진

* '21년 13.8조원 발굴 목표 중 현재까지 7.4조원 발굴

- 그린스마트스쿨, 완충저류시설 등 既발굴 유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분야 신유형 사업*도 적극 발굴

* 그린캠퍼스, 디지털 박물관, 스마트그린 산단 등

- 민간투자사업 참여유인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검토('21년말 → '23년말(부가가치세)·'24년말(취득세))

* ①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②기부채납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② 집행목표 3.5조원 중 잔여 1.9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 보상자금 先투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의 신속한 이행 독려

* 사업시행자가 사업 보상비 선지급 → 주무관청은 준공전까지 보상자금 예산확보지급

[공공기관 투자 65조원]

- ① 공공기관 투자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투자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투자집행점검회의 매월 개최)하고 집행애로도 적극 해소

* '21년 5월까지 23.7조원(36.6%) 집행완료 <상반기 53%이상 집행 목표>

< 하반기 주요 공공기관 투자 사업 >

- ▶ (도로공사)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21년 예산 1.5조원, 총사업비 6.6조원)
- ▶ (한수원) 신고리5,6호기 원전건설('21년 예산 1.0조원, 총사업비 8.6조원)
- ▶ (철도공단) 이천~문경 철도건설('21년 예산 0.4조원, 총사업비 2.5조원)

- ② 정책 사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재무건전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 시행

- 신속예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절차를 명시하고, 원활한 예타 조사 수행을 위해 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절차를 신설('21.8)
 - 대주단 참여확정 해외사업¹⁾ 및 대외 경제정책 추진 사업²⁾ (예: 개도국 지원사업) 등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 1) '재원조달 가능성' 지표 사전 가중치 설정(7~8% → 10%), AHP 평가 시 우대
 - 2) 신남방사업 등의 경우 AHP 평가 시 공공성 지표 중 '정책성' 세부지표 우대
 - 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은 재무안정성(10~20%) 평가시 감점
- * 공공기관 재무상태 '매우미흡' 수준

③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하여 추진
 - 해당 분야 超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촉진, 인재양성 등 종합 지원방안 마련
 - ▶ (지원대상)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 산업·기술 및 개별 프로젝트
 - ▶ (지원내용) R&D, 인허가 특례, 규제 완화, 재정·금융·인프라 등 종합 지원
 - 인재양성의 경우 산업별 전문인력 양성 방식과 개별 프로젝트 맞춤형 인력양성 방식을 병행
 - ▶ (협력모델) 특화단지 조성, 수요-공급기업 등 대·중소 상생 유도 및 지원 우대
 -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기술 등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

④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 강화

- ① (대상 확대) 전략적 국내 유치 필요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 확대('21.7, 유턴법 시행령 개정 등)
 -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신성장산업(조특법), 국내공급망 안정품목(산업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적용 배제
 - * (현행)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25% 이상)하는 경우에 국내복귀 인정(개선) 첨단기술, 신성장산업, 국내공급망 안정품목은 청산·양도·축소 요건 미적용
 - 기존에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았던 기업도 10년 이상 경과시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현재는 중복지원 금지)
- ② (세제·임대료 지원) 유턴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감면혜택도 마련
 -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연장(조특법 시행령 개정)
 - * (기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날로부터 1년 내 → (개선) 2년 내
 - 유턴기업이 외국인투자단지(비수도권)에 입주할 경우 투자규모·고용효과 등에 따라 국가소유토지 등 임대료 75~100% 감면('21.6~)
- ③ (입지 지원) 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 입주요건 완화
 -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시 수출액 비중(매출액 대비) 기준 요건*을 완화('21.7,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
 - * (현행) 중소/중견/대 30/40/50% → (개정) 중소/중견/대 20/30/30%
 -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우선 입주 지원('21.下)
 - * 국내복귀 이전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 50% 이상
 - 유턴기업을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추가*('21.6,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 * 경제자유구역법 목적·정의규정에 유턴기업 활성화 관련 내용 명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발전계획 수립 시 유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포함 등
 -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유턴기업에 대해 조성원가 이하 분양 및 전용용지 입주 허용('21.9)
 - * (현행) 외투기업만 허용 → (개선) 유턴기업 등 추가

5 SOC 투자 적기 집행 등 건설투자 보완 노력 지속

- ① (도로) 신도시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기존 간선도로망 기능을 보완하는 노선을 지속 발굴
 - 적격성이 확보된 민간투자사업은 후속 절차 신속 추진
 - * 사상~해운대(신설), 평택~시흥(확장) 고속도로 → 연내 제3자 공고 추진
 - 적격성 조사중인 사업(6건) → (정책타당성 등 AHP 확보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 신규 교통망 확충 외, 기존 노선 병목구간 해소·요금인하 등 다양한 목적을 고려한 신규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추진
- ② (철도) GTX-A('23년말), 신안산선('24년말), 신분당선 신사~강남('22년상) 등 공사 중인 사업의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 철저
 - GTX-B('21년 RFP 고시), GTX-C('21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계획 중인 민자사업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속히 착공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사업 중 추진 가능한 신규 민자사업도 지속 발굴
- ③ (항만)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 및 노후·유휴 공간 활용도 제고
 -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조사(~'21.12), 울산신항 방파제 착공('21.9) 등 신항만 개발 지속 추진
 - 노후한 중소 항만공간을 지역주민의 여가·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항만 재생사업 추진방안' 마련('21.12)
- ④ (생활SOC) 성과 확대를 위해 복합화 사업 추진 가속화·내실화
 - 3기 신도시 학교공원('21.下 지구계획 수립),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복합화 사업모델 다각화
 - 생활 SOC로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재산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원
 - * 예) 국가가 舊 파출소 부지 등 일상생활 공간에 근접한 유휴 국유재산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가 생활 SOC 개발 추진

(2) 규제혁신 등 기업부담 적극 완화

① 후속 법령개정 등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성과 가속화

- ① 지난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후속 법령정비까지 조속히 마무리

< 분야별 후속 법령개정 추진 과제(예시)>

분야	주요 내용
ICT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전원관리시스템(전기용품 안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원격제어를 통해 복구하는 안전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S 기반 애플미터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S 기반 애플미터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택시 서비스 다양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택시발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합승이 가능하도록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산업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미용실 서비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영업장에 다수 사업자(미용사)가 입주, 미용설바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형 정수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으로 모듈별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
금융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신용카드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이 소프트웨어형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신용보증기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토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확대

- ②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방지¹⁾를 위한 법령 정비 지속²⁾

1) 특례 종료 전 사업자가 법령정비를 요청하고 정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임시허가로 전환

2) 산업·금융·지역특구·스마트도시 등 개정안 국회 既통과(~20.5), 하반기 시행 예정

③ 모빌리티·바이오헬스 분야 등 규제샌드박스 추가 도입(‘21.12)

* (현행) 6개 분야(ICT·산업·금융·지역특구·스마트도시·R&D특구) 운영중
(개정) 2개 분야(모빌리티·바이오헬스) 추가

④ 규제샌드박스 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규제신속확인 제도 활성화¹⁾, 탄력적 실증특례제도 운영²⁾ 등 기업부담 완화 추진(‘21.12)

1) ①공무원 적극행정을 위해 면책 부여 ②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신청기업
이의신청권 보장 ③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 공개

2) 단기간 테스트가 가능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기간단축을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 유도

2 경제반등의 주역인 기업 등 민간 부문의 氣 살리기에 매진

①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활력을 높여 경기 회복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남은 정부 임기동안 기업·경제계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

-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정례 개최(분기별 1회), 현장 방문,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수립시 반영

* 예) 대한상의 주관으로 기업부문을 포함,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6.7~9.24) 추진

② ‘K-반도체 전략’(‘21.5)과 같이 업계 건의·애로사항 등에 기반한 산업·부문별 도약 지원방안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마련·발표

* 예) 해운, 배터리(2차전지), 조선, 자동차, 벤처분야 등

3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파 노력 지속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21.1~)를 통해 혁신·중소기업·지역 등 주요 테마별 현장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 추진

- 현장규제·애로해소 채널을 일원화하고 소주기적(접수-해결-사후관리) 밀착 관리 및 현장 소통 강화

- 하반기 중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

* (8월) 공공기관 규제 → (10월) 지방기업 → (12월) 창업·중소기업

4. 수출 6천억불 돌파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 구축 <무역규모 사상 최대치 달성>

(1) 수출 호조세 지속 지원

①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

- ①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21.5~),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20.12~) 운영 등 범정부 비상대응체제 지속 가동
- ② 화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 (월2회→월4회, ‘21.7~)하고 중소화주 전용 항공적재 공간 확보(‘21.7~)
- ③ 중소·중견기업 화주를 중심으로 선적공간 확보 등 지원
 -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화주에 우선 배정(‘21.7~)
 - * 임시선박: 美서안항로 투입 선박의 중소·중견화주 선적비중을 50→60%이상으로 확대
정기선박: (美서안) 380TEU/주, (美동안) 50TEU/주, (유럽) 50TEU/주
- ④ 운임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물류비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2차 추정)하고, 물류비 지원한도 2배 상향(기업당 1천만원 → 2천만원)
 - 중소·중견 화주들이 금년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으로 운임상승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21.7~)
 - * 중소·중견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국적선사와의 장기운송계약 선복량 확보 및 운임지원(운임의 20% 바우처 지원)
 - 중소 수출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 지원(‘21.7~)
 - ▶ (용자용도) 수출이행에 필요한 해상/항공 물류비(운임)
 - ▶ (용자규모) 총 200억원(기업당 3천만원 한도)
 - ▶ (지원조건) 금리 연 1.5% / 용자기간 3년(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 코로나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워진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 예산 등을 기업 해상운임 지원에 활용(420여개社, 기업당 5백만원)

⑤ 해양진흥공사의 리스사업을 통해 40피트 컨테이너 4.3만개를 7월까지 공급하고 추가 발주(21.4)한 1.7만개도 하반기 적기 공급

▪ ‘컨’ 박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컨’ 박스 신규확보 지원 추진(21.7~)

* 중소기업 수요를 감안하여 사업규모 확정(19~21.7월까지 HMM 15.3만대, 28만TEU 지원)

⑥ 물류적체 해소를 위한 신속통관 지원¹⁾, 선적지연에 따른 불이익 방지²⁾, 세정지원³⁾ 등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강화(21.6~)

- 1) 수출기업 희망 장소에서 검사 실시, 우수업체에 대한 수출검사 생략
- 2) 적재이행기간 연장신청 자동 승인, 수출신고 취하시 행정제재 면제
- 3) 납기연장, 분할납부 지원 확대, 수출용원재료 즉시환급, 관세조사 유예

② 수출금융 124.5조원 공급 등 수출기업 부담 경감 지원

① 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신산업 분야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수출금융 124.5조원 집중 지원

* (수은) K-뉴딜 SME 크레딧라인(21.下 2,000억원) 등 뉴딜기업 신속·우대 지원 (무보) 시스템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 보험한도 확대(최대 2배), 보험료 할인(최대 20%)

< 기관별 공급 계획 (단위: 조원) >

구분	수은	무보	신보	기보	중진공	합계
연간	72.1	167.0	13.0	3.2	0.5	255.8
하반기	37.4	78.3	7.0	1.6	0.2	124.5

② 무보 무역보험·보증 만기연장 조치 및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프로그램(5종)* 운영기한을 3개월 연장(21.6→21.9월말)

* 신규 유동성 대출, 금융보증 우대, 중소기업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 긴급경영자금 대출, 수출실적 기반 대출 프로그램 등 5개 프로그램

③ 코로나 지속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를 감안하여 자유무역지역·경자구역 내 입주기업 임대료 30% 감면 6개월간 연장(21.6월말→12월말)

④ 농축산물(63개 양허관세품목)¹⁾ 제조 가공업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조건부 허용²⁾(21.12)

- 1) 국가 간 가격 차가 상당해 수입 시 관세 부과하는 품목(쌀, 보리, 마늘 등)
- 2) 입주 조건: ①전량수출 ②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③보세사 채용 등

③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백신 우선접종 지원

- ①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격리의무 면제¹⁾, 백신 우선접종 지원²⁾ 등 출입국 관련 애로해소 노력 지속
 - 1) 계약체결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출국한 기업인 등은 입국시 14일 격리의무 면제
 - 2)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기업인에 백신 우선접종(2~3분기)
- ②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를 코로나 진정시까지 지속 운영
 - * 출입국 관련 정보 종합 제공, 격리면제·전세기이용 등 관련 업무 원스톱 지원

④ 유망 스타트업·소상공인·일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 ① (스타트업)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및 현지화 지원
 -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간 기술협력,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을 추진하는 '수출 선도모델' 100개 발굴('21.11~)
 - * 벤처·스타트업 관련 민간전문가, 스타트업 육성기관 등을 중심으로 선도모델선정위원회 구성 → 글로벌기업 협력수요 등을 토대로 선정
 - 스타트업 新수출 모델별로 현지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수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21.8~)
 - * K-스타트업센터(KSC, 싱가포르·스톡홀름·헬싱키·뉴델리·시애틀 등 7개소)에서 시행
- ②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선정하는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제도' 신설('21.下, 판로지원법 개정)
 - 하반기 중 500여개 수출유망 소상공인을 시범 지정하고, 글로벌 역량진단·자금지원 우대*·해외 마케팅 등 연계 지원
 - * 지역신보 특화보증 신설 : (보증규모)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보증료) 0.3~0.5%p 감면
- ③ (일반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기술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기술교류 지원 강화
 - 해외진출 지원펀드(약 0.4조원*) 운용사 및 해외VC 등을 대상으로 자사물 운영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IR 개최 지원('21.10, 중진공)
 - * 글로벌펀드('21, 중기부 2,000억원), 수출혁신펀드('21, 무역협회 1,500억원 신설) 등
 - 3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신설('21.下)하고, 해외 기술 수요·협력기관과 상담회 개최 등 지원('21년 30여회)

5 해외 투자개발 사업 등 수주 활성화 지원

- ① 금년 수주목표(300억불) 달성을 위한 지원강화 및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마련(21.7)
 - 인프라 개발경험이 풍부한 공기업이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등 개편
 - 민자사업(PPP)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혼합금융 패키지*를 확대하고, 수은 특별계정, 경험증진자금 등 활용도 제고

* EDCF·경험증진자금(EDPF)·수출금융 등 결합,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유자
- ②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1단계 조성 목표 (1.5조원 목표 / 現 1.1조원 조성)를 신속히 달성하고, 하반기 투자 가속화
- ③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수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제공하는 「(가칭)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연내 1단계 구축 완료)
 - * 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해건협), 해외건설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건설기술연) 등

(2) 국제협력 등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1 메가 FTA 추진 등을 통한 아·태지역 경제협력 확대

- ① (메가 FTA)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RCEP¹⁾ 후속조치 이행과 CPTPP²⁾ 가입 검토 등 양대 메가 FTA 적극 추진
 - 1) RCEP : ASEAN 10개국과 韓·中·日·호·뉴 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2) CPTP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RCEP)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절차(국내영향평가 및 협정문심사 → 대통령 재가 → 국회 비준동의 順)를 하반기 중 마무리

* (발효요건)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 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비준 후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 기탁시 60일 후 발효(비준국에 한해 효력)

 -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4대 분야(국영기업, 수산보조금, 위생검역, 디지털통상) 국내 제도 정비방안 마련 및 후속조치 추진

- ② (양자 FTA)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의 FTA 체결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既체결 FTA 개선·보완도 지속
 -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주요국과 신규 FTA 체결·발효 가속화

- ▶ (신남방) 한-인니 CEPA 발효, 한-캄보디아 FTA 서명 등 추진
- ▶ (신북방) 한-우즈벡 FTA 협상진전 및 한-몽골 EPA 협상개시 여건 조성
- ▶ (중남미)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지속 추진

- 문화콘텐츠·바이오 등 신성장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시장 개방 및 지적권 보호·투자규범 강화 등 추진

② 주요 거점국과의 양자 경제협력 강화

- ① (미국) 한미 정상회담(21.5) 성과 등에 기반하여 백신·공급망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협력 강화

* ①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②핵심산업 공급망 협력, ③첨단 과학기술 협력, ④기후 변화 대응 공조, ⑤인적교류 활성화 등

-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확대된 對美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후속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속 점검

*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G),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한미 공급망 협의채널 등

- ② (중국) 한중 문화교류의 해(21~22년)를 계기로 문화콘텐츠·관광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그린뉴딜 분야 제3국 공동진출 추진

- ③ (신북방)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등을 통해 협력성과 가시화 도모

* (러)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우즈벡)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등

- (러시아) 하반기 고위급 경협채널을 가동하여 '한러 상호교류의 해 기념사업¹⁾ 및 9개다리 행동계획 2.0²⁾ 등의 성과 창출 추진

1) 양국 각 160여개 사업 추진 및 30대 공동브랜드 사업 중점 추진

2) 에너지 철도인프라, 조선 항만항해 농림수산 보건 투자 혁신플랫폼 문화관광분야협력추진

- (우즈벡)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21.1월 개시), 주요 인프라 사업 EDCF 지원* 등 주요 경제협력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 기본약정(F/A) 한도 확대(18~20억불→21~2310억불)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 ④ (신남방) 「신남방정책 플러스*」에 기반한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

* 일방향적 경협관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보건·의료, 교육·문화교류 등 상호 호혜적 사업 집중지원 (한-아세안 정상회의(20.11) 계기 발표)

- 수도이전 사업(인나), 사회주택단지 건설(베트남) 등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주요국 협력 관계 심화
- 산업기술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합의) 구축 등 고위급채널 합의사항 이행

③ 국제협력에 기반한 해외진출 지원 확대

① (EDCF 제도 개선) EDCF 지원효과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EDCF 고도화 방안」('21.5)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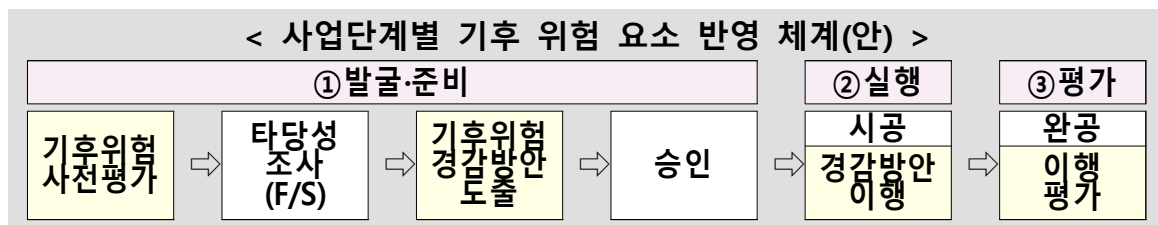
* 지원조건(금리, 상환/거치기간) 개선, 예비 환경사회영향평가 도입, 사후관리체제 개편 등

② (그린 ODA) 개도국 저탄소경제 전환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 발굴·지원을 확대¹⁾하고 녹색의제²⁾ 선도 추진

1) 그린 ODA 비중을 '25년까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평균 수준까지 확대 목표
↳ 그린 ODA 비중 현황('15~'19년 약정 기준) : (한국) 19.6%, (OECD DAC) 28.1%

2) P4G, G7 논의 후속조치로 UN 총회('21.9), G20('21.10), COP 26('21.11) 등 주요 정상회의 계기 그린뉴딜 논의 주도

- (유상) EDCF 지원과정 전반에 기후변화 대응을 내재화하고, 탄소저감 등 기후변화 완화 관련 사업 확대 추진



- (무상) 3대 분야별* 대표사업 및 지역별 맞춤형 사업 발굴 확대 및 글로벌 녹색기후 파트너십 강화 추진

* ① 온실가스 저감(기후변화 완화), ② 기후적응력 향상(기후변화 적응), ③ 교차(완화 및 적응)

③ (대내외 협력 강화) 유·무상 융합형 사업 및 혁신적 금융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MDB 협조유자의 지속적 확대 추진

* (융합 사업) 단일 사업에 대해 유·무상 공동으로 발굴·시행·완공 후 사후관리 실시 (금융협력 사업) 수원국이 특정 이행조건 달성시 유상차관을 무상지원으로 전환

- '정부-기업 ODA 협의회' 구성, 기업과 ODA 협력전략 공동 수립 등을 통해 기업사회공헌(CSR)과 ODA 연계 활성화도 병행

④ (지원 다변화) 개도국 개발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금융 기법*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에 직접 투자하는 개발금융 기반 구축

* 지분투자, 융자, 메자닌, 보증 등을 활용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 촉진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등 위기지역 회복 지원

- ① 주요 위기 지역의 경기·고용 회복세가 보다 공고해질 때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속 운영

* 상반기 5개 지역(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지정 연장(~'23.5)

- ② 조선업 회복의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복귀 지원·신규인력 유입 촉진의 “2-Track 인력보강” 추진

- ▶ (숙련인력 복귀 지원) 중소형조선소 설계지원에 퇴직 설계인력 활용,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운영(조선협회, '21.8 시범운영→'22년 본격 운영) 등
- ▶ (신규인력 유입 촉진) 채용연계교육 인원 확대(600→1,200명) 및 한시 훈련수당 신설(2차 추경),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체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

- ③ 지역산업 위기 등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긴급지원, 대체산업 육성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 추진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국회 계류 중

② 지역균형 뉴딜 확산 가속화

-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이 본격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주력산업·경제특구 등을 활용하여 지역성장 거점 집중 육성

-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지방 투자기업 대상 설비투자 보조금 우대(+3~+10%p)('21.1~)
-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적용되는 균형발전지표를 보완·개선하고 적용대상 사업 추가 발굴

* 실태진단(~7월) → 지표활용 적용방법 개선(10월) → 지표활용사업 발굴(~12월)

- 「'21년 지역산업진흥계획」('20.12)에 따라 개편된 48개 시·도별 주력산업에 금년 중 총 0.3조원 지원

- 경자구역 內 지역뉴딜 등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21.10~)

* 경자구역별 특화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 및 발전계획 수립('21.下)

②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애로 해소노력 지속

-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현재 10%)를 상향하여 지역 뉴딜사업 등에 대한 투자여력 확충('21.下)
- 지역균형뉴딜 분야에서 선정된 지자체 우수사업*을 대상으로 특별교부세(3분기) 및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 배정('21.8)
 - * 지자체 공모(3~4월 / 252개 사업 접수) → 심사 및 경진대회(~6월) → 인센티브(3분기)
-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원, '20.11월 既 조성) 및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24년까지 0.5조원 조성 목표) 등을 통해 지역 유망기업 투자 강화
 - * 지자체·지역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펀드로 지역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등 투자
-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뉴딜사업 관련 규제 발굴·개선 지속
 - * 규제 발굴 및 규제개선 협의(행안부 및 중앙부처)를 통해 84건을 발굴하여 24건 개선 추진(5월말 기준) → 하반기 추가 규제발굴·개선

③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既 발표 주요대책을 착실히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23개 프로젝트 공정 집중 관리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1년 예산

지원기관		지원내용	예산(억원)
계			7,474
SOC	기본설계 마무리	▪ 세종-청주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13건	1,739
	착공소요 반영	▪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 등 6건	2,516
R&D		▪ 특화산업 R&D 실증·사업화 등 4건	3,219

-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4개 과제를 하반기에 추가 착공하여 6개 과제(총사업비 3.4조원) 모두 연내 착공되도록 지원
 - * (既착공) 동해선 단선 전철화('20.12), 국도위험구간(농소-외동, '21.4)
 - (연내착공) 서남해안 관광도로, 영종도-신도 평화도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등
-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과제(총사업비 19.2조원)는 연내 기본·실시 설계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
 - * (기본계획 완료) (6월) 평택-오송 2복선화 (12월) 석문산단, 대구산업선, 남부내륙철도, 충북선철도 고속화, 옥정~포천선, 새만금 신공항
 - (기본설계 완료) 제2 경춘국도('21.下), (기본·실시설계 완료) 산재전문 공공병원('21.下) 등

[혁신도시 활성화]

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10대 협업과제는 하반기에도 추진 가속화

* (부산)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울산) 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	(경북)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경남) 기업이전·산학연클러스터 선도모델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광주·전남) 에너지벨리 조성	(강원)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충북)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	(제주)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TF」 운영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② 혁신도시 내 기업 입주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노력 지속

- 미분양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공간·일자리 연계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한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순차적으로 조성

*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 문화·여가시설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를 2개소 착공('21.12)하고, 어린이·가족 특화 생활 SOC 9개소에 대한 설계용역 착수('21.12)

* (복합혁신센터) 총 11개소 중 '20년 8개소, '21.상 1개소 既착공, '21.下 2개소 예정

[도시재생뉴딜 성과 본격 확산]

① 하반기 중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40여개소를 준공하고, 사업지 내 생활SOC(주차장·공원 등) 세부사업 300개 이상 추진

② 도시재생사업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주거정비사업과 연계 강화

- 노후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21~'25년, 약 8만호)

* 지자체·주민 제안, 공기업 자체발굴 등을 통해 선정된 선도 사업 후보지를 연내 확정

-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선정('21.12)

③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사업을 시범 추진('21.8)하고, 도시재생 모태펀드(총 625억원 조성)를 통한 투자 본격화

* 민간·지자체·주택도시기금이 사업기획·구상 단계부터 협업하고 공동출자·진행하는 형태

④ 각종 특구제도를 활용한 지역 혁신공간 창출 지원

- ① (규제자유특구) 기존 특구 내 실증사업을 안착시키고 저탄소·친환경,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신규 특구 지정·확대 추진
 - 하반기 특례기한이 종료되는 39개 실증사업*의 규제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사업중단 방지를 위한 임시허가 전환·특례연장 병행
 - * (1차: 7개특구) 24개 사업, '21.8월 종료 / (2차: 7개특구) 15개 사업, '21.12월 종료
 - 특구 실증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판로 등 연계지원 강화
 - * 예) 특구 실증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멘토링·정책자금(최대 5억원) 등 연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시행중
- ② (도심융합특구) 5개 광역시(대구·광주·대전·울산·부산)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착수
 - 도심에 적합한 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주거환경 개선, 문화공간 창출 등 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 마련('21.8~)
 - * 他 특구 사업과 연계한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등
- ③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등의 신기술 창출 및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해 신기술 실증특례 연내 5건 이상 지정('21.下)
 -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구 내 설립된 기업
 - '규제예측 지원단'을 구성('21.7~)하여 사전 규제예측 지원 및 실증특례 수요의 선제 발굴 추진 등 특구의 혁신여건 조성
- ④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법」* 하위법령 제정('21.下)
 -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6.15일 제정, 12.16일 시행
 - 현재 추진 중인 5대 선도분야* 외 추가 구축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담은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전략」 마련('21.12)
 - *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미래폐자원(폐배터리) ⑤자원순환(탈플라스틱)

6.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회복 지원

① 금리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 ① 既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21.4) 주요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
 - 가계부채 증가율은 '22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 복원을 목표로 금년 중 5~6% 수준으로 안정적 관리
 -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 취급관행 정착 등을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21.7~)
 - * (현행) (주담대) 투기지구 9억원 초과주택, (신용대출) 연소득 8천↑&1억원↑
(개선) (주담대) 수도권지역 6억원 초과주택, (신용대출) 1억원↑
 - 은행권 가계부채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21.下), 예금보험료를 차등화(‘22.1~) 등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 구축

② 금리상승에 대비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 조치 적극 추진

-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전환 및 신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 도입(‘21.9)

< 서민 우대 프로그램 도입(안) >

- ▶ (개요) ①기존의 민간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고정금리)을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대환 대출)하거나 ②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공급
- ▶ (요건)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 ▶ (금리)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bp 인하
- ▶ (기간) 우선 1년간 도입하고, 추후 금리 상황 등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재출시 유도(시중은행)
 - *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 상승시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 고정(금리상한형 주담대) 일정기간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
- 금리인하요구권*이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공시 및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원
 - * 취업·승진·재산증가 등 신용상태 개선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환경 조성

- ① 민간 자본이 구조조정 시장으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
 -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년 중 1조원 규모의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총 운용규모 3.2 → 4.2조원)
 - * 재정·정책금융기관·은행 등 출자하여 4,510억원 규모 3차 모펀드 조성(21.5)
 - 역량있는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신생·소형 운용사 전용의 1,250억원 규모 루키펀드* 도입(21.12)
 - * 모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750억원 출자 + 민간자금 500억원 매칭 → 1,250억원 규모 운용
 - 선제적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 내 부채투자 전용펀드(PDF) 투자대상을 사전적 구조조정 기업까지 확대(21.12)
 - * (현행)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예: 워크아웃, 회생절차)에 한정 → (개선) 사전적 구조조정 기업(예: 자본잠식, 과다부채 기업 등) 포함
- ② 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자산매각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사업재편 기업이 보유한 설비 등을 캠코에서 매입 또는 매입 후 재임대(S&LB) 지원(시범사업 실시, '21.9~)
 - * (현행) 기계거래소나 사설거래업체 등을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매각 → (개선)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캠코를 통해 매각
 - 매입 후 재임대(S&LB) 방식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보유 업무용 자산에 대한 심사기간 단축
 - * (현행) 기업별 동일한 심사절차 적용 → (개선) 신청기업의 상황(회생, 일반기업 등)에 맞게 심사 절차를 표준화하여 소요기간 단축
- ③ 채권은행 등이 선제적으로 부실징후 기업을 포착하여 경영정상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리스크 점검 체계 선진화
 -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저를 집중·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리스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등 개발(22년부터 본격 활용)
 - *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산업·금융 지표를 선별해 지수화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상반기 예정됐던 신용위험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하되, 평가시 업종별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
 - * 코로나 피해 업종에 한해 경영애로 및 회복전망 등을 평가시 감안할 예정

③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체감 가능한 공급성과 창출]

① 2.4대책(3080+ 대책) 6월 입법을 토대로 사업후보지(52곳, 7.1만호)의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후속법안 7개 국토위 상임위 통과(6.18)

- 도심공공복합사업 관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련법령 시행(‘21.9)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 추진

* 주민호응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 추진
↳ 현재 예정지구 후보지 21곳은 주민동의 10% 이상 초과 확보,
이 중 4곳은 본지구 지정요건(2/3 동의)까지 확보(6.23일 기준)

-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말 이후 순차 발표 추진
- 2.4대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담 완화 등 제도 보완노력 추진 지속

▶ 시행자·토지주에 대해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

- * 공공 매입형 사업 : (시행자) 수용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토지주)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주택 취득시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 감면(現 취득가 1~12% → 改 추가분담금 1~3%)
- * 소규모 주택정비 : (조합) 조합원 분양분 관련 소득·매출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비과세 (토지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매도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② 3기 신도시 등 핵심 공공택지 사전청약(‘22년까지 6.2만호)은 하반기 부터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실시하고, 2천호는 조기 제공토록 적극 검토

- 既 계획된 3만호에 대해 하반기 중 네 차례(7·10·11·12월)에 걸쳐 선호 입지에 대해 청약 기회를 차질 없이 제공

▶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 계획된 공공분양물량(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중 6.2만호 사전청약 실시

* '21년 일정 : (7월)4.4천호(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등), (10월)9.1천호(남양주왕숙, 인천검단 등), (11월)4천호(하남교산, 과천주암 등), (12월)12.7천호(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 '22년 사전청약의 구체적 계획은 하반기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 발표

③ 11.19 대책 등을 통해 추진되는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을 하반기까지 3.8만호, '22년까지 총 8만호 확보

- ▶ (신축 매입약정 : 4.4만호) '21년 약정 체결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 예정
- * 민간사업자로부터 2.3만호 신청받았으며, 3.8천호 약정체결 완료('21.5월 기준)
- ▶ (공공전세주택 등 : 3.6만호) 공공전세주택*(1.8만호), 관광호텔 등 비주택 리모델링(1.8만호)도 추진
- * 추진계획(약정체결 기준) : ('21년) 9천호 → ('22년) 9천호

④ 그 밖에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8.4대책에 포함된 신규택지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 도심내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태릉CC 등은 하반기부터 인허가 등 관련절차 착수하고, 과천은 공급물량을 계획대로 추진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단기 주택건설·건설투자 촉진]

① 서울·수도권의 신축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20~50% 공기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 공법” 확대 적용

* 모듈러주택 발주량 목표(호, '21.5월 현재): (~'20)709 → ('21)2,200 → ('22)2,500

- 모듈러 공법 적용 경과를 보아가며 RC(철근콘크리트) 방식의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물량 일부를 모듈러 방식으로 전환·조기 입주 추진 검토

② 제도 보완*을 통해 탈현장 시공(OSC, Off-Site Construction)을 적극 활용하여 주택건설 현장에서의 공기 단축 촉진

* 탈현장 시공(모듈러 등) 공법별, 업무단계별 원가기준 별도 마련 등으로 촉진 지원

③ 호텔 등 비주택 공실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등 규제는 완화*하고, 매입 대상은 미완공 건물 등으로 확대

* 주택 법정 용적률을 초과한 비주택이더라도 주택용 리모델링 전환을 허용

[부동산 투기·불공정 및 부패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

- ① '예방 - 적발 - 처벌 - 환수' 전 과정에 걸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을 차질 없이 추진
 - 공직자 재산등록, 농지취득심사 강화, 4대 교란행위 처벌 강화 등 관련입법 및 조치를 계획에 따라 이행
- ② LH가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내부통제, 경영혁신, 조직개편 등 차질 없이 추진
- ③ 정비사업 수주비리 등 3회 적발시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21.11월까지 도입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

- ①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대*(6→9억원 이하)
 -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 0.05%p 인하 既시행(21.1)
- ② 금융·청약제도 전반에 걸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주담대 LTV규제 서민·실수요자 우대 요건 및 혜택 확대(7.1일~)

구 분	현 행		개 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①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 미만	
② 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억원 한도(공통)			
▶ LTV비율	50%	60%	(~6억) 60% (6~9억 구간) 50%	(~5억) 70% (5~8억 구간) 60%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도 함께 확대(21.10)

* 민영주택 생초 특공비중(%): (공공택지)15→20 <+5%p> (민간택지) 7→10 <+3%p>
 [일반공급(%): (공공택지)42→37<△5%p> (민간택지)50→47<△3%p>]

▪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월세·모기지 대출 등 금융지원 강화

- ① 주금공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확대
* 1인당 한도 상향(7천만→1억원), 보증료 추가 인하(0.05→0.02%, △0.03%p)
- ②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을 5→7억원으로 현실화
* 현행 기관별 전세대출한도(주금공 2억원, HUG 최대 4억원)은 그대로 유지
- ③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7억원)
- ④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 상향
* (보금자리론) 3→3.6억원 (디딤돌대출) 2~2.6<2자녀 이상>→2.5~3.1억원

-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 - 초장기모기지(40년)' 연계 방안도 함께 마련

③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비용으로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누구나집, 지분적립형 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 적극 추진

▪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위한 부지확보 및 공모 등을 준비·시행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사업 추진(22년)

[위기요인 사전 포착을 위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체계 강화]

① 주택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 및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특이동향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서울·수도권 등 지역별·거래유형별 특이동향 감시기능 대폭 강화

② 국가승인통계(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등) 관련 민간전문가 참여, 주간아파트 표본 수 확대('20년比 3배 이상) 등 부동산 통계 개선

▪ 부동산 통계 이용자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R-ONE)의 공개대상 데이터 추가, 통계적 의미 안내 등 추진

▪ 주택가격·거래량 등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④ 대외신인도 및 외환시장 등의 안정적 관리

- ①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관리 및 우리경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국제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협력 강화
 - 신평사 연례협약*, 외국인 투자자 IR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코로나19 회복 동향 및 주요 성과 등을 적극 홍보
 - * '21.하반기 중 Fitch(7월)-S&P(미정) 연례협약 실시예정(Moody's는 3월 既 실시)
- ② 대외부문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외화자금시장 안정노력 강화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기존 리스크 점검 체계에 더하여 외환 관련 정보공유·협약 강화를 위한 「외환건전성협의회」 운영('21.6~)
 - * 기재부(차관 주재)·금융위·韓銀·금감원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
 - 비은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외화 조달·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규제 보완* 추진
 - * 신규 모니터링 3종지표(외화자금 조달 소요 지표, 외화자산-부채 갭 지표, 외화조달-운용만기 지표), 증권·보험업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신설 등
 - 위기시 단기 외화자금 수요 급증 등에 대비하여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증권사 대상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구축*
 - * 예) 한국증권금융 자체·시장조달 자금, 외환당국 등 → 한국증권금융 → 증권사
- ③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해 외환거래 인프라 개선
 - 고객(기업 등)이 전자주문시스템을 통해 원/달러 현물환시장 거래정보를 실시간 확인·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¹⁾ 도입방안 마련²⁾(‘21.12)
 - 1) (현행) 고객이 은행(달러)에 전화주문 → (개선) 전용앱을 통해 직접 호가확인·주문
 - 2)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자·외환당국으로 구성된 외환시장운영협의회 논의를 거쳐 도입일정, 시장 자율규제 여부, 법·제도적 보완사항 등 세부방안 마련
 - 원/위안 직거래 시장 활성화 및 결제통화 다변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 * 예) 은행간 거래실적 외에 대고객거래 실적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에 포함 등
- ④ 국채시장 체질 혁신을 위해 「국채시장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21.12)
- * 예) 계량모형을 활용한 연물별 발행량 배분모형 개발, 국고채 만기구조 분석 등
- ⑤ 국채 수요 다변화, 국민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21.12)
- * 발행방식, 가산금리 등 인센티브, 원리금 지급방식, 발행시스템 구축 등 포함

5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응

[주요 현안별 대응 강화]

- ① (공급망 현안 대응) 美 주도 공급망 재편에 대비, 우리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및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 강화
 - * (대외) 한미 공급망 TF, 4대 품목별 한미간 부처 협의체 등을 통한 협력 강화
(대내) 대외경제장관회의, 혁신성장BIG3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향 점검
 -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핵심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공동 R&D·인력교류 등 협력을 지속 강화
 - 중요 원소재 등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취약품목 중심으로 공급망 상황을 철저히 점검·대응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美·中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에도 선제적 대비
- ② (디지털 통상)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국제협력 강화
 - 연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¹⁾’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²⁾’ 가입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 추진
 - 1) 타결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20.6월 협상 개시 선언
 - 2) 디지털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체결한 협정(21.1월 발효)
- ③ (디지털세)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등 제도취지 및 우리 기업 영향 등을 고려하여 OECD·G20 등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

[국제공조 강화]

- ① (ASEAN+3) '21년 공동의장국(韓, 브루나이) 수임 계기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CMIM 역내통화 활용* 등 제도 완비
 - * (기존) 美달러만 지원가능 → (개선) 원화·위안화·엔화 등도 지원 가능
- ② (G20)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G20 논의 참여·주도
 -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세계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디지털혁신, 저탄소·친환경 경제 전환 논의에 적극 참여*
 -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 등 우리나라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적극 홍보

2.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 지원

① 고용시장 조기회복을 위해 긴급 고용지원 패키지 시행

- ① 일자리 여건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4대 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2차 추정)

일자리 조기회복	2~3만명	▶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
청년 고용촉진	2~3만명	▶ AI, SW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기반기업 채용지원 ▶ 체육·공연·관광 등 문화 분야 일자리 ▶ 멘토링 등 교육 분야 일자리
백신방역 안전대응	6~7만명	▶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지원 ▶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지원 ▶ 산재 예방 등 위한 안전 분야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보완	3~4만명	▶ 노인·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 예술인 일자리 지원

- ②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부문의 일자리 유지·복원에 총력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90일 연장(180→270일)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15개 업종

- 특히, 공연예술가·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채용 확대, 문화예술 아카이브 지원* 등 여행·공연·체육업계 일자리 확충(2차 추정)

* 예술작품으로 코로나 일상을 기록하는 예술가 지원

- ③ 구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 1%대 초저금리 생계비 용자 지원 확대(2차 추정)

② 직접 일자리 지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버팀목 역할 지속

- ① 직접일자리 104.2만개(본예산) 및 1차 추정 일자리 25.5만개 등 당초 계획된 일자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 직접일자리 참여 후 고용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¹⁾, 계층·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²⁾ 등 추진(21.11)

1) 직접일자리사업 평가지표에 '훈련·취업지원 연계율' 신설

2) 고학력 노인 전문성 활용 가능한 일자리 사업 발굴, 지자체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 등

- ②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하반기 공공기관 1.4만명, 지방공기업 0.2만명 신규 채용 추진('21.7~)
 - * '21년 연간 채용목표: (공공기관) 2.6만명, (지방공기업) 0.4만명
 - 체험형 인턴('21년 2.2만명 계획) 제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인원의 5%이상을 인턴 출신으로 채용 권고
- ③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지속
 - 돌봄,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코로나 이후 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하반기 사회서비스일자리 2.5만개 창출('21.7~)
 - '17~'22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청년·1인 가구·노인대상 서비스 등 신유망분야 지속 발굴
 - 하반기 현장민생공무원(경찰·소방·사회복지 등) 0.8만명을 충원하고, 비정규직의 신속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컨설팅 등 지속 지원

③ 주요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직접 일자리]

- 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운영시 '시민제안' 방식 도입
 - 금년 하반기 중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2년부터 일부 직접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 * 시민 제안 서비스를 토대로 지자체 주도 협의체(지자체+수행기관)를 구성, 시범 운영
↳①지자체 수요추합사업 건의 → ②부처 검토시범지역 선정 → ③시범사업 실시 → ④평가 후 확대
- ②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성실히 이수한 구직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가점 부여 추진('22년~)
 - * 집단상담취업특강채용박람회 참여 취업지원기관 알선 직장에 구직활동(면접 등)한 경우 등

[고용장려금]

- 기존 고용장려금 사업들을 목적별로 재분류하고, 목적에 맞는 적정 지원수준·주기, 타 지원과의 정합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21.下)
 - * 예) 고용촉진장려금과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은 취약계층 지원 목적은 동일하나, 지원수준(30-60만원/40-80만원)·지원주기(6개월/3개월)가 상이

[고용서비스]

- ① 기존 6개 정보망으로 분산 제공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일원화한 '고용24'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21.12~)

* (11월) 정보시스템 마스터 계획 수립 → (12월) '고용24 구축 추진단' 구성

- ② 민간 위탁으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기관 선정 내실화, 우수기관 인증 등 '민간위탁기관 통합 관리체계' 구축('21.12)

* 예) [1단계: 공통심사] 기관 물적(시설, 인프라 등)·인적(교육 참여 등) 자원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 심사 → [2단계: 사업별 심사] 사업별 전문성·특수성 등 반영 선정

- ③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활성화

- 기관별로 관리하는 우수 중소기업 정보¹⁾ 공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등 기업-구직자 간 매칭 지원²⁾('21.7~)

1) 중기중앙회(참 관찮은 중소기업), 중진공(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고용정보원(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2)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취업희망 구직자 발굴 및 우선 매칭 지원 (고용부) 전용 채용관(청년친화강소기업관)에 등록된 구인업체에 통합 채용서비스 제공 (중기중앙회) 잡코리아 등 민간 전문 매칭기관과의 협업 강화

④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노력도 지속

- ① 상생형 일자리 협약체결 지역 중 미선정 지역(구미, 신안)을 추가 선정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

< 패키지 주요 지원 내용 >

- ▶ (기업투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등
- ▶ (임대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임대전용 국가산단 입주 우대 등
- ▶ (근로환경·직업훈련) 어린이집·문화센터 건립, 일터혁신 컨설팅, 채용예정자 직무교육·훈련수당 지원 등

- ② 선정사업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상생형 일자리 관계부처 TF」를 통한 원스톱 결정·지원시스템 구축('21.4분기)

- ③ 기존 선정지역 1주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모델·상생요소 개발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규지역 추가 발굴 및 상생협약 체결 지원

* '21.6월 광주, '21.10월 강원·밀양

2.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극복 및 경영정상화 지원

① 소상공인 피해극복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대책 추진

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

- ▶ (대상)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α^*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신설예정)의 심의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확대 가능
- ▶ (금액) 조치수준, 기간, 소득, 규모 등 종합적 고려하여 심의
- ▶ (지급방식)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상액 산정, 온라인 신청

②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기간, 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차등 현금지원(2차 추경)

③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등 1%대 저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한도 확대·보증료 인하 등 제도개선 병행(2차 추경)

<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 주요 금융지원 현황 >

	공급목표 (조원)	주요 내용		
		금리	대출한도	지원방식
① 임차소상공인 융자	3.8	<방역조치 대상인 임차 소상공인 전용 대출>		
- 집합금지업종	0.8	연 1.9%	1천만원	소진공 융자
- 영업제한업종	3.0	연 2~3%대	1천만원	신보 보증
② 저신용자 대출	1.0	<저신용 등급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대상 대출>		
- 특별피해업종	1.0	연 1.9%	1천만원	소진공 융자

④ 소상공인 피해 발생시 더 두텁고 중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지원(2차 추경)

* 신규가입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공제부금 일정액 한시 보조

- 소상공인 경영애로에 따른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부중지 신청 기준도 한시 완화('21.8)

* (현행) 3회 이하 + 경영악화 사유로는 연속해서 신청 불가능

(개선) 4회 이하(특별횟수 1회 추가) + 경영악화 사유로 2회까지 연속 신청 허용

②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조치 보강

① 코로나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 (현행)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 가능 → (개선) '21년 결손금은 직전 2개년도('19~'20년) 납부세액에서 공제 허용

②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 납세자 대상 세정지원을 연말까지 지속 운영

- *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체납시 재산압류매각 최대 12개월 유예
- '20년 매출액 등이 급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지속 시행(~'21년말)하고 관세조사 유예(~'22.6월말)
- * (국세) '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관세) '20년 매출액 또는 수출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급감한 중소기업

③ 각종 임대료·사회보험료 등 감면·납부유예 조치 지원 연장

- ▶ (임대료)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등 공공부문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기간 6개월 연장('21.6월말→12월말)
- ▶ (고용·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고용)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 ▶ (국민연금)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유예 (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 ▶ (공과금) 7~9월분 전기·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유예
* (전기) 전국 소상공인 320만호 (추정) +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기구 157만호 (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72만호 + 취약계층 150만호

④ 음식점 등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검토('21년말→'23년말)

- * [공제율]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업) 8/108 → 9/109
[공제한도] (개인사업자) 매출액의 40~50% → 45~55% (음식점업 50~65%)

⑤ 코로나19로 인한 '20년 매출감소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한도가 축소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대출한도 산정기준 합리화('21.7~)

- * (현행) 「전년도」 매출 기준 → (개선) '19년·'20년 중 유리한 기준 선택 적용

③ 폐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재기 지원 강화

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대상인 임차 소상공인의 범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21.下 시행령 개정)

▶ (현행) 소상공인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 사업자등록 등 요건 충족한 경우 (개선)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고,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 추가

▪ 임대료 부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병행

* 3개월 이상 집합금지·집합제한조치를 받고 중대한 경제사정 변경으로 폐업 신고한 임차인에게 잔여 임대차 계약 해지권 부여

② 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요건 한시 완화*

* (현행) 연매출 1.5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 (개선) 연매출 3억원 이하(21년 한시)

③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브릿지보증' 지원 확대(2차 추정, '21.7)

④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2차 추정)

④ 피해기업·업종 경영 안정화 지원 지속

① 기간산업안정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금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 방안 검토

②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 경영 정상화 지원 지속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추가연장('21.6→'21.12)* 및 항공수요 회복시까지 항행안전시설 사용료·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유보 추진('21.7)

* 현재 착륙료(10~20%), 정류료(전액), 계류장사용료(전액) 등 감면 중('20.3~'21.6)

▪ 항공업계 지원 등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속·확대 되도록 공공기관 지원여력 확충 병행

▶ (인천공항공사) 민자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시설물은 공사로 현물출자 추진

* 항공화물창고('21.7), 기내식시설('21.10), 화물터미널('22.6, '23.3), GSE정비시설('22.3)

▶ (한국공항공사) 국유재산 사용료*를 '21년말까지 한시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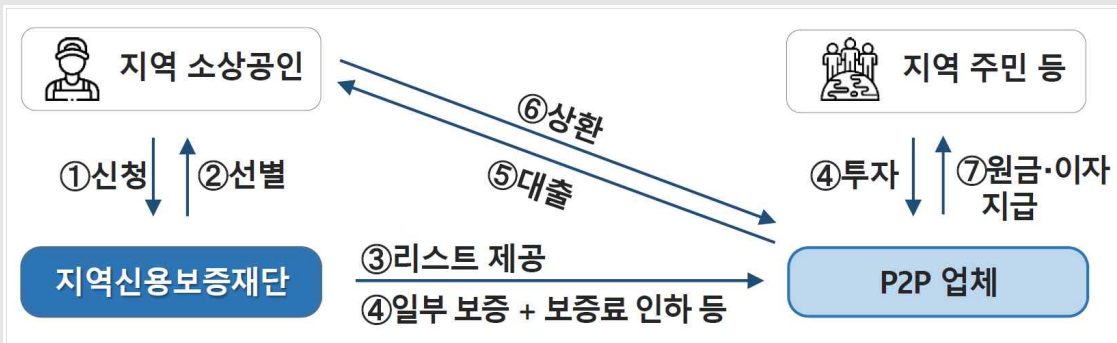
* (현행) 해당재산 장부가액 1% → (개선) 무상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1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우리동네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 시범 추진(21.11~)

<우리동네 주민 참여형 소상공인 크라우드 펀딩 조성(안)>

- ▶ (투자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1차 서류심사 후 지역주민이 선택한 소상공인
- ▶ (투자한도) 리스크 감안, 투자자 1인당 투자 한도 제한(예: 1인당 300만원)
- ▶ (투자방식) 지신보와 협약을 맺은 P2P 업체가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소상공인에게 투자(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대출) 방식)
- ▶ (정부지원) 리스크 완화를 위해 지신보가 투자금액의 일부 보증 + 참여 소상공인에 대해 지신보 보증료 인하 등
- ▶ (기대효과) ①기존 중금리대출에 의존하던 소상공인은 비교적 저금리로 자금 조달
 ②실제 소비자인 지역주민의 인지도 제고로 사업 성공 가능성 확대
 ③지역주민에게 지역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 제공



2 소상공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독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 온라인몰 등에 입점·판매 지원

- ▶ 백년가게·전통시장 상품의 밀키트화, 특산물 및 우수 소상공인 상품 꾸러미 구성 등 정기배송 적합 상품 발굴
 - * (밀키트 지원) 백년가게 30개, 지역특산물 20개, (우수 소상공인) 100개사
- ▶ 민간 온라인몰 등에 소상공인 전용 구독경제관(정기결제 시스템)을 개설하고 소상공인 입점(150개 내외) 및 판매 지원(기획전 10회)

3 업종별로 특화된 스마트상점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기술 도입 추진

- * 예) 무인 주문(키오스크 등), 로봇 기술(서빙, 치킨조리) 등

3.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응 강화

①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품목별 맞춤형 안정대책 추진

- ① (농산물) 기상이변 등 하절기 가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비축 등 수급안정대책 적극 추진
 - * 가격상방리스크에 대응하여 양파 10천톤, 마늘 2.5천톤, 봄배추 10천톤, 봄무 4천톤 비축
- ② (축산물) 계란 긴급할당관세 지원기한 연말까지 연장(現 6월말)
 - * 품목 : 계란 및 가공품 7종, 세율 : 기본 8~30 → 0%,
물량/기간 : (현재) 5만톤, 6월말 종료 → (연장) 3.6만톤, 연말 종료
- ③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총 6종)을 추석 등 수요급등시기에 시중가 대비 10~30% 할인하여 방출(최대 9,400여톤)
- ④ (식품·사료) 사료업체 등 법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검토('21년말→'23년말)
 - * 공제한도 : 매출액의 30 → 40%
 - 중소가공식품업체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원료매입자금 규모 확대
- ⑤ (철강·철근) 철강용 원자재 및 철근의 신속통관(24시간 통관, 수입 검사 최소화 등)을 지원하고, 업계와 협업하여 국내공급 확대
- ⑥ (비철금속) 조달청이 보유 중인 비철금속(6종)을 품목별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판매한도량 확대 및 할인 판매 지속 추진
 - * 구리, 알루미늄, 주석, 아연에 대해 1~3% 할인율로 1~5월 2.6만톤 판매
 - 비철금속 중장기 가격·수급관리를 위해 리스크 대응력 등을 감안하여 중기 목표 재고일수 및 목표 비축량 조정 추진('22년)
 - * 목표재고일수 : ('21년) 58일 → ('22년) 60일, 비철금속 보유량 230,733톤(21.5월말 기준)
 - 비철금속 비축 타당성 평가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21.下)하고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추진('22.上)
- ⑦ (석유) 국내외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수급차질 발생시 비축유 대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제정 등을 검토

②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 ① 경기회복에 따른 하반기 물가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분기별 주요 물가 불안요인*을 선제 점검하여 대응방향을 강구하고, 물가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
 - * 예) (3분기) 장마·태풍, 가뭄·이상고온, 추석 (4분기) 한파, 김장철, 연말요인 등
 -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주요 분야 유통구조 개선 등 중장기 과제도 발굴·논의
- ② 소비자물가지수 정기개편('15→'20년 기준, '21.12월 공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표물가와 현실물가 간 괴리 최소화
 - *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 소비지출 구조 및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 주기로 조사품목을 변경하고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정기 개편 중
 - 코로나 진행상황·소비패턴 정상화 추이를 보아가며 차기 가중치 조정*을 조기 시행(예: '23.12월 공표→'23.9월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
 - * 5년 주기 정기개편과 함께, 품목별 가중치를 0, 2, 5, 7자년 기준으로 조정 중

③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식료품·통신·주거비 등 생계비 절감 노력 강화

- ① (식료품비) 농축수산물 쿠폰 지원규모를 확대(2차 추정)하고,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 * 추석(9월), 김장철(11월)은 쿠폰 한도 상향 조정(1→2만원), 계란은 쿠폰 적용 품목을 확대(30구→전품목)하되, 할인율은 하향 조정(20→10%)
- ② (통신비)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통사·제조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통사의 eSIM 도입방안 마련('21.7~)
 - * eSIM(embedded SIM) : 기기에 내장된 칩의 가입정보를 이동통신사에 등록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의 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

※ eSIM 도입 기대효과

- ▶ (편의성 제고) 비대면 가입·개통 활성화 및 타 통신사로의 이동편의성 제고
- ▶ (선택권 확대) 듀얼심(dual-SIM)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다양한 통신사 요금제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통신비 절감 유도

-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21.7~)

* 알뜰폰에서 LTE는 2.5GB 등 1만원 이하, 11GB+소진시 일2GB, 100GB 등 3만원대, 5G는 12GB 이하 3만원대, 30GB 4만원대 등의 요금제를 제공중

- 이동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발표주기를 단축

▶ (대상 확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5G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5G 평가대상 지역¹⁾ 및 시설²⁾을 확대

1) (기존) 85개시 주요 행정동(1,500여개) → (개선) 85개시 모든 행정동(2,000여개)

2) (기존) 도서관, 공항 등 주요 시설, 고속철도·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

→ (개선) 주거지역(아파트 단지), 대학교(주요 건물 실내) 등 일상과 밀접한 시설 추가

▶ (주기 단축) 연 1회 발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중 전송 속도, 커버리지 등 5G 주요 정보는 연 2회(8월, 12월) 발표

-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의 가격·지원금 정보제공 기능 개선('21.7~)

* 예) 서비스 가격 등을 순위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개선, 단말기 지원금 관련 최신정보를 적극 수집·게시, 중고폰 가격 시계열정보 제공 등

③ (주거비)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통합 대기자 등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대기자관리 시스템 구축('22년)

* (현행) 단지별로 대기자를 별도 관리(단지마다 신청 필요) →

(개선) 공급주체, 단지와 무관하게 대기자를 통합 관리

(1회 신청으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지역, 평형 등 고려하여 맞춤형 공급)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출산 등으로 가구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원활한 이주 지원방안 마련('21.下)

* 예) 자녀출산, 노부모 부양 등 사유로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재신청하더라도 입주자 선정 시의 감점 배제

④ (도로점용료) 진·출입로, 노점·상품진열대 도로점용료 요율을 인하¹⁾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요율기준 신설²⁾('21.11)

1) (인하案) 진·출입로 2→1.5%, 노점·상품진열대 5→3%

2) 신재생에너지 시설,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및 모빌리티 시설 요율(1.5% 수준) 신설

3.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1.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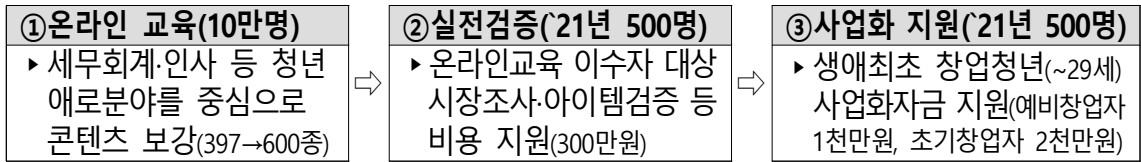
①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일자리 :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
 - 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발형 청년특례 유형의 재산기준을 상향(3→4억원 이하)(21.7~)하고, 취업경험 요건 폐지*(21.下)
 - * (현행)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
(개선) 소득·재산요건 충족시 취업경험 여부와 무관히 참가신청 가능
 - 직무능력 향상 및 대·중견기업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 참여 인턴십' 운영 등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21.7~)
 - *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해 기초직무능력 및 현장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 ②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21.7~)
 - *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20.12~21.12)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인당 월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
- ③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시기를 대학 4→3학년으로 앞당기는 등 지원 확대(2차 추정)
 -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예정(21.9)
 - 저소득 전문대 재학생 등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도 한시지원(2차 추정)
- ④ 현장실습 축소 등에 따른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21.7)
 - 18개 기능사 시험종목에 대해 추가 검정을 시행하고, 직업계고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비 지원(2차 추정)
 -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고교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활용(2차 추정)
- ⑤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연장 추진(21년→23년)
 - * 공공기관 등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34세 이하) 미취업자 고용의무 부과

⑥ 역동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계별 지원 강화

- (도전) 창업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과 실전검증·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창업도전 프로그램 지원('21.6)



- (성장)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2차 추경), 청년창업기업 4대 애로(인력·제조·자금·주거) 집중 지원도 지속('21.下)

- ▶ (인력)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¹⁾, 「SOS개발자」 프로젝트²⁾ 등 시범가동
 1) 만29세 청년 누구나(학력·전공무관) 신청가능한 스타트업 맞춤형 SI개발자 집중양성 과정
 2) 초보개발자를 스타트업이 인턴으로 채용 후 핵심 개발인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
- ▶ (제조) 전국 외주 생산업체 정보를 온라인으로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 (자금) '청년 테크스타 보증' 신설(연 2천억원) * (보증비율) 95→100% (보증한도) 3→6억원
- ▶ (주거)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

- (재도전) 재도전 응원캠프를 운영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 성실실패기업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90%→95%로 상향('21.下)

[주거 :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①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천호 수준 추가 공급(2차 추경)**

* 3천호(기정예산) + 2천호(추경)

- ②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 연장('21년말→'23년말) 하고, 가입요건도 완화(연소득 3,000→3,600만원 이하)('22년~)**

* ①금리우대(+1.5%p) + ②이자소득 비과세 혜택(2년 이상 유지시,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
 ↳ 총급여 3,000→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000→2,400만원 이하로 확대

- ③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지원 연장 및 제도보완 추진**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 연장('21→'23년말)

*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기간 6개월 연장('21.6→12월)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80%, 2억원 초과 70% 지원 중

-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 무이자대출(월 20만원) 지원 추진
 - 입학·취업 등 주거분리시 출생일에 따라 청년 주거급여 지급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연령기준 만19세를 출생일→출생연도로 조정
- * 만19세가 되는 해 1.1일을 맞이한 청년에 대해 지급

[자산 : 미래대비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

① 소득수준별로 3구간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 **【소득구간Ⅰ】**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비율 매칭 지원
- **【소득구간Ⅱ】** 청년 저축시 정부가 시중이자에 추가 지원
- **【소득구간Ⅲ】**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 도입

② 중소기업 재직청년, 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

- **【중소기업 재직자】** 금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 2만명 확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세부담 완화 방안 강구
- **【군 장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기본금리 5% 수준(추가금리 1%p 재정보조 예정)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납입한도 월 40만원)

※ 자산형성 지원 등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7월중 발표할 계획

[문화·생활 : 청년 '삶의 질' 개선]

① 청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 청년(기초·차상위계층)은 문화누리카드* 신청시 100% 발급 지원 추진('22~)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지급(6세 이상) / 1인당 연10만원 / 도서·음악·영화관람 등 사용

② 저소득 청년·대학생이 생활자금을 저금리(연 3~4%)로 조달할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 1천억원 확대(2,330→3,330억원)

- 햇살론 유스 내 '특정용도자금'의 연 대출한도 상향('21.9~)

* (현행) 최대 1,200만원 / 연간 600만원 한도 → (개선) 최대 한도 내 연간 900만원 한도

② 주요 부문별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 강화

[여성 : 경력단절 방지 및 성별격차 해소]

- ①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세제지원 강화
 - 현행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제도¹⁾상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완화²⁾하여 지원대상 확대(‘22년~)
 - 1)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인건비의 15~30% 공제
 - 2) 경력단절 기간 : (현행) 3년 이상, 15년 미만 → (개선) 2년 이상, 15년 미만
- ② 새일센터 등을 통한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기능 강화
 - 다양한 경력단절 사유를 고려하여 위기요인별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¹⁾하고, 고용유지지원 서비스²⁾ 시범 운영(‘21.10~)
 - 1) 일반형(업종특성 무관) + 특화형(고학력·전문직종 특성 반영한 경력개발모형)
 - 2) 인적자원관리 컨설팅, 노무법률·심리상담, 경력설계·관리, 돌봄연계 등
 - 직업훈련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운영(‘21.6~)
- ③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현장복귀 지원을 위해 민간·공공연구소 등 연구기관과의 일자리 매칭 및 경력복귀 연구과제 지원*(‘21년 450명)
 -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복귀단계별 교육·멘토링 및 연구비 지원
- ④ 성별격차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을 위해 여성 임금·근로실태 발표
 - ‘양성평등 임금의 날’ 최초 시행을 계기로 상장법인까지 포함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발표(‘21.9)
 -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의 성별 임원현황 조사·발표(‘21.8)

[문화·예술 : 코로나로 위축된 공연·예술 활동 회복 지원]

- ① 저소득 예술인이 다양한 장르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도록 창작준비금(3백만원) 지원 확대(2차 추경)
- ② 소규모 대중음악 기획공연, 청년 예술인, 연극·무용 등 공연 예술제 지원도 강화(2차 추경)

[교육 : 취약계층 학습결손 등의 신속한 복원 지원]

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반기 중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 지원사업을 집중 발굴·추진('21.7~)

* 중앙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세입증가분) 활용

※ 예시 :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또래활동 및 교외체험학습 지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실시 등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프로젝트 마련 추진('21.7~)

② 저소득·농어촌 초중고생의 기초학습 지도, 학습상담 등을 위해 대학생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 멘토링 실시('21.7~)

- ▶ (지원대상) 저소득·농어촌 지역 초중고생 ▶ (지원금액) 멘토 활동지원비
- ▶ (지원내용) 저소득·농어촌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멘토링 활동 지원

③ 원격교육 확대 등 교육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본격 추진('21.下)

- ▶ (초중등) 공공·민간 등에서 제작한 교육콘텐츠, 학습관리 시스템(LMS) 등이 실시간으로 유통·활용되는 'K-에듀 통합플랫폼'을 최대한 신속히 구축
- ▶ (대학) 대학·산업계·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 표준 교육과정 등을 개발·공유하는 '사이버 공유대학 사업' 확대

④ '21년 2학기부터는 초·중·고 전면등교를 목표로 등교수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가적인 정서·학습결손 최소화

* 방역인력 추가보강(5→^{최대}6만명, 교부금 등 활용) 등 학내 방역체계 철저히 구축

⑤ 디지털배움터* 과정 내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20% 이상)하고 교육 운영기간도 확대('20년 6개월→'21년 9개월)

* 주민센터·도서관 등에서 키오스크 사용·모바일티켓 예매 등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21년 1,000개소 운영 중)

[돌봄 : 코로나 이후 심화된 돌봄공백 해소에 초점]

① 시설보육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 추진

- 정부·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실태 파악을 토대로 민간 아이돌봄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리체계 구축방안 검토(22년)
- 코로나 상황 장기화를 감안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 특례¹⁾, 의료·방역인력 특별지원²⁾은 하반기에도 지속(21.3~)

1) 정부지원 특례 : (지원비율) 0~85% → 40~90%

2) 의료·방역인력 특별지원 : (지원비율) 0~85% → 60~90%

② 장애아동·청소년부모·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돌봄지원 강화

- 만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 확대(2~8천명, 연 720~840시간)(21.7~)
- 저소득 청소년부모 및 조손가족(6천가구)의 아이돌봄 비용 자부담 △5%p 완화(22년)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월10만원)를 지원¹⁾하고,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 양육비 지급범위도 확대²⁾(21.5~)

1) (현행) 생계급여·아동양육비 중복수급 불가 → (개선) 생계급여 수급자도 양육비 지원

2) (현행) 만24세이하 한부모 월 15만원 지급 → (개선) 만25~34세 한부모 월 5~10만원 지급

③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돌봄 공백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긴급돌봄체계 구축·확대

- * (현행) 11개 시도(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경기·충남·경남·전남)에서 긴급돌봄 운영 → (개선) 14개 시도(+울산, 전북, 제주)로 긴급돌봄체계 제도화 및 확대

[기타 격차 해소 노력 강화]

① 필수업무종사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 등 제도기반 조성노력 지속

- ▶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21.11)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및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 추진(21.下)
- ▶ 민간 돌봄서비스기관 정부인증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담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추진(21.下)
- ▶ 작업조건·거래구조 개선, 표준계약서 마련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6.22일)' 주요 이행사항 추진

②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지자체 건강검진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추진(21.下)

2.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①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주력

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안착 및 제도 내실화 지속 추진

-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I 유형 요건심사형 소득요건¹⁾ 및 재산요건 완화²⁾(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 '21.10)

1)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 → (개선) 중위소득 60% 이하

2) (현행) 3억원 이하 → (개선) 4억원 이하

- 금년 하반기 중 상반기 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발표('21.12)

*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내실화 방안 검토

②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에 따라 특고 고용보험('21.7~)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22.1~) 적용 세부방안 마련

- (특고*) 저소득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및 집중 홍보 시행('21.7~)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방과후학교강사(12개 직종)

- (플랫폼 종사자) 업계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하위법령 개정, 정보연계 전산망 등 관리체계 구축('21.12)

*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의무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도 검토

③ (한국형 상병수당) 하반기 중 적용대상 및 자격요건, 대상 질병 범위, 보장수준 등 시범사업 모델 구체화

* 연구용역('21.3~) 및 제도기획자문위원회 운영('21.4~) 등 차질없이 추진

④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노후화된 기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맞춤형·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

- 개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분석하여 수혜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단계적 시행*('21.9)

* ('21.9~) 기존 수급자 및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 대상으로 누락서비스 안내 → ('22~) 일반 국민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② 기존 사회안전망도 보다 빠르고 튼튼하게 확충

① (생계) 기초생보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지원 강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당초 계획('22년)보다 앞당겨 '21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21.10~, 2차 추정)

-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21.9월말까지 연장(2차 추정)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88억원 이하(대도시),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 (한시완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산기준 완화(대도시 1.88→3.5억원 이하), 지원사유에 '취약계층 소득상실·매출감소' 포함 등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 지원)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2차 추정)

* (현행) 신청가구 외 직계혈족배우자 소득 등 고려 → (개선) 신청가구 소득만 고려

②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등 보장성 강화

- (재난적 의료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로 지원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 마련

* (현행) 본인부담 의료비 50% 지원(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100~200%는 개별심사) → (개선) 지원비율 50%<중위소득 100~200%>를 하한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비율 상향

- (건강보험) 심장·척추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추진

- (실손보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 후 공동 시행령 제정 추진

- (요양보험) 수시방문형(일 2~3회) 재가서비스*를 개발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대(88→200여개)

* (현행) 1일 1회 → (개선) 1일 2~3회, 수급자가 필요한 시간에 방문요양·간호 제공

③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 노력 지속

-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저소득·저신용자 금융이용 축소 등 방지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확대

-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다변화하고,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2.4→2.7조원)('21.7~)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교육,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대출 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21.7~)
- *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등 금융교육 이수가 대출의 전제조건인 상품은 제외
- 정성 정보*를 감안한 ‘서민신용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한도, 금리 결정 등에 활용(‘21.7~)
- * 교육시간 이수 실적, 컨설팅 진단 및 이행 여부, 상담 내용 등

③ 주요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

- ① (교통약자)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 장착한 차량) 인프라 개선 추진
 - 지역 간 이동시에도 탑승 가능하도록 기초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등록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통합
 - 휠체어 사용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차*하고 휠체어 미이용자는 바우처택시 등 대체수단을 제공하여 편의성 제고(‘21.下)
 - * 현재는 탑승자의 휠체어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예약 시점의 근거리차량 배차
 - 증장기적으로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보급률 100% 달성 추진(‘20년 기준 83.4%)
- ②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학생 이하 학업 중단 청소년 정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강화*(‘21.9~)
- * 학교장이 의무교육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사후동의 전제로 제공 가능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20년 9→‘21년 15개소), 청소년 거리상담 전문요원(‘20년 108→‘21년 115명) 등 현장지원 인프라도 확충
- ③ (보호종료 아동)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대책」 마련(‘21.7~8)
- ④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고의로 미지급하는 경우 제재조치 강화*(‘21.7)
-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금지·명단공개, 감치명령 후 1년 내 미지급 시 형사처벌 등 근거 마련(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

3. 상생·연대·공정 가치 확산

① '기부·나눔 문화' 활성화 추진

①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 기부자 및 우수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 실시('21.12~)

* 기부주간 지정 등 기부금품 개정안 다수 발의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지원 실시

▪ 착한 기부자에게는 '아름다운 납세자' 수준의 혜택 부여 검토

* 예) 공항 출입국우대심사대 이용, 고궁 특별행사 초청(연 1회) 등

②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¹⁾하고, 기부문화 투명성 강화²⁾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21.7)

1) (기부자) 연말정산간소화자동반영 실시간 조회 / (기부단체) 관리비용 감축, 법정서식제출면제

2) 세법상 적격단체에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거짓영수증 발급 사전 방지

③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결과 등을 일반인도 쉽게 접근·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21.12)

* (현행) 회계감사보고서만 등재 → (개선) 감사안·감사의견 등 핵심사항을 연도별로 게시

④ 국민들이 기부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모금단체의 편리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 (현행) 행안부 기부금품 등록단체(250여개) + 국세청 의무공시 법인(1만여개) → (개선) 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 교육부(교육기부), 법무부(공익신탁공시)

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문제 해결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 사회공헌 역량분석, 기업-지역간 매칭 지원 등 강화

※ 주요 지원내용 예시

- ▶ 사회공헌 혁신스쿨을 활용하여 기업·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역량 분석 및 컨설팅 실시
- ▶ 지역문제 해결 사회공헌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언택트 공모전 실시 및 우수제안기관 시상
- ▶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온라인) 개최 파트너 매칭 상담창구 운영 등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 경쟁력 강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

- 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다각화를 위해 상품 다양화¹⁾, 온라인 판로개척²⁾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박람회'('21.7) 개최

1) 예) 정기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지원
2) 케이블 방송,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지원('20년 11개사 → '21년 50여개사)

- ②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R&D·금융지원 간 연계¹⁾ 및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²⁾ 강화 추진

1) 예) 컨설팅 수료시 사회적금융 지원 우대 + 사회적금융 지원시 컨설팅 참여 우대
2) 임팩트투자 운용사에 지역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공, 지역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 등

- ③ 성장지원센터(고용부)-혁신타운(산업부) 간 연계*를 통한 지역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추진('21.下 협의체 구성)

* 예) 혁신타운 입주기업 선정시 소셜캠퍼스 온 졸업기업 우대, 공동사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 ① 협동조합 특화분야로서 돌봄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 혁신형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 프리랜서가 협동조합의 직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단기 근로계약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 개발

- ②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판별기준 개선¹⁾,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사업 연계²⁾, 사회적가치 측정기반 마련³⁾ 추진

1) 예) 사회문제 K-SDGs 연계, 공공·민간 창업지원플랫폼 보육기업 반영 등
2)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예 : 컨설팅, 투자유치, 판로지원 등) 연계 지원
3) ('20) 2개 분야(고용, 자원순환) 지표 마련, 5개社 시범측정 → ('21) 7개 분야(교육접근성, 탄소배출저감 등 추가), 20개社 측정

- ③ 생협 연합회간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전국연합회 설립요건 완화¹⁾ 및 공동사업법인 운영근거 마련²⁾ 등 추진(소비자생협법 개정)

1) (현행) 전체 생협의 1/2 동의 → (개선) 유형별(보건의료형, 기타 유형) 1/2 동의
2) 여러 조합이 공동 출자를 통해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유통, R&D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공정 · 상생 가치에 기반한 포용적 경제생태계 조성**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의 공정한 거래 기반 마련**]

- ① 플랫폼기업-입점업체 간 자율적 상생·협력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제도기반 구축
 - *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및 변경 사전통지의무 부여, 분쟁조정협의회·동의를결제도 도입
- ② 플랫폼거래 등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추진
 - * 플랫폼의 거래관여도 등을 반영한 책임규정 정비,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제도 확충 등
- ③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진입장벽 강화 등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
 - * 감시·조사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표적 경쟁제한행위를 예시한 '온라인 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 연내 제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최소화**]

- ①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 창구를 오프라인(서면)에서 온라인으로 확대*(21.9~)
 -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21.하반기 중 국회 발의 추진
 - 피해신고에 따른 행정조사 결과를 향후 조정절차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결과의 조정절차 활용근거 마련
- ②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¹⁾을 위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의 신속한 개정²⁾에 주력하면서 하위법령 제·개정 방안²⁾ 사전검토(21.下)
 - 1) 비밀유지계약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기술탈취기업 공표제도 강화 등
 - 2)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행위에 대한 신고 및 사건처리 절차 반영
- ③ 기술 탈취 피해기업이 법적대응 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검토(21.下)
 - * '21년 상반기 중기부의 관련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 등을 결정

[**시장질서 저해행위 방지 · 공정 거래관행 착근 노력 지속**]

- ①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처벌을 위해 과징금 도입(21.下) 및 그 외 제재수단 검토
 - * 예) 자본시장법 위반 시 자본시장 참여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 ②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시 대금지급 방법·기일을 명시한 서면발급 의무화 추진('21.下)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추진('21.9월 입법예고, '21년 중 개정완료 목표)

- ③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또는 대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제도보완(「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개정)

※ 개정안 주요 내용

-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중 대기업 선제 진출(인수·개시·확장 등)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 권고·이행명령 등 근거 마련
-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대기업 귀책으로 파기 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기간이 경과했다라도 재신청 기회 부여

[대기업집단 등 규율의 합리성 제고]

- ① 국외 계열사 및 공익법인 관련 공시 기준 구체화¹⁾, 친족분리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²⁾ 등 대기업집단 규율 사각지대 해소

1) 대기업집단 동일인에게 국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 부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2) 친족분리 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내부거래 등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

- ② 경제력 집중우려가 높지 않은 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비상장사¹⁾의 경우 공시 면제²⁾

1)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사(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제외)

2)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면제

- ③ 감사환경의 변화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24년에 적용될 새로운 표준 감사시간* 마련('21.4/4, 한국공인회계사회)

* 감사업무 품질 제고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 하여야 할 적정 감사시간('19년~)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3년마다 재검토(외부감사법)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

- ① 기업의 불확실성 조기 해소 및 안전경영 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노사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

▪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감독 체계 정비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

- ②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본사 감독·특별 감독 등 관리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항을 엄중히 수사·감독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 목 차 >

4. 새 성장동력 확보	66
① 한국판 뉴딜 가속 추진	66
② 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	71
③ 주력 제조업 및 유망 서비스산업 혁신	80
④ 제2벤처붐 시대 지속 지원	87
⑤ 핵심 인력양성으로 생산성 제고	91
5.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98
① 친환경·저탄소경제 전환 대응	98
②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체계 구축	104
③ 인구리스크·저출산 대응 강화	108
④ 노동·재정·공공 등 부문별 구조혁신	111

4. 새 성장동력 확보

1. 한국판 뉴딜 가속 추진

① 하반기 가시적 성과 창출 위해 분야별 중점과제 집중

- ① (디지털 뉴딜) DNA·비대면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가속화 추진

< 그간의 디지털뉴딜 주요 성과 >

- ▶ (DNA 확산) AI 학습용데이터 구축(170종), 5.6만건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AI 클라우드바우처(약 3천건) 제공, AI 융합 실증랩 7개소 구축
- ▶ (비대면 경제)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5.3만개사), 닥터앤서 1.0 개발(심뇌혈관 등 8개 질환), 바우처(8만개사 대상) 제공
- ▶ (SOC 디지털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108개사),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170개소),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807개소)

- (DNA) 격오지 군병원 등(36개소)에 AI 개발 솔루션 현장도입(7월), 디지털집현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0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12월)
 - (비대면 산업) 초·중등 38만(누적) 교실 고성능 Wi-Fi 구축(12월), 스마트 상점 25만개 기술보급(12월),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12월)
 - (SOC 디지털화) 전국 33개 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12월), 주요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12월), 국가어항(3개) 지능형 CCTV 구축(12월)
- ②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 민간 확산, 신재생에너지·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가속화 등 탄소중립을 향한 녹색전환 본격 추진

< 그간의 그린뉴딜 주요 성과 >

- ▶ (녹색인프라) 공공임대주택 1만여호, 공공건축물 800여건 그린리모델링('20.12),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지역 선정('20.12) 등
- ▶ (녹색에너지) 전기차(15.5만대, 누적), 수소차(1.4만대, 누적) 등 친환경차 보급('21.4), K-RE100, K-EV100 등 신재생에너지 민간 확산기반 마련 등
- ▶ (녹색산업) 스마트그린산단 10개소 지정('20년 7개소, '21.3월 3개소 추가),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 선정('20.12),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12) 발간 등

- (인프라)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 구축('21.6~)* 및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21.7) 등 그린뉴딜 민간확산 촉진

* 그린리모델링 지원 지속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등('21.6~)

- (에너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구축 착수 및 연도별 의무 공급비율¹ 마련('21.12), 전력망 계통 보강² ('21.12)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 1] 의무공급비율(RPS) 상한 개정에 따른 연도별 비율 마련('21.下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
2] 계통접속 대기 중인 물량(3.3GW)의 72%(2.3GW)를 1년내 해소 추진

< 뉴딜 10대 대표과제 향후계획('21.下~) >

	과제명('20~'21 투자금액, 조원)	'21.하반기 이후 추진계획
디지털	① 데이터댐(3.5조원)	AI 학습용데이터 190종 구축, 빅데이터센터 30개 추가구축, AI 융합프로젝트 실증랩 3개소 구축
	② 지능형 정부(0.75조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12월~),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알림형 30종, 서비스 10종)
	③ 스마트의료 인프라(0.12조원)	AI의료 SW 학습데이터 수집, AI 알고리즘 개발(~12월) 호흡기 전담클리닉 450개소 추가 설치(12월)
융복합	④ 그린스마트 스쿨(0.4조원)	총 761동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확정(6월~)
	⑤ 디지털 트윈(0.33조원)	지하공간통합지도 전국 85개시 전체 구축(12월)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 11,670km 구축(12월)
	⑥ 국민안전SOC 스마트화(2.7조원)	철도 전기설비 IoT, 경부호남고속철 전 구간 구축(12월)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2,020개소 구축 완료(12월)
	⑦ 스마트 그린산단(0.75조원)	산단내 입주기업 에너지 관리시스템 140개사 보급(12월)
그린	⑧ 그린 리모델링(1.0조원)	공공임대주택 8.3만여호, 공공건축물 841동 추진
	⑨ 그린에너지(1.6조원)	RPS 연도별 의무비율 마련, 전력계통 수용성 확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2.6조원)	전기차 16.9만대(누적), 수소차 2.6만대(누적) 보급

③ (안전망 강화)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사람투자 강화에 집중하고,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선제적 경제구조변화 대응 추진

< 그간의 안전망 강화 주요 성과 >

- ▶ (고용안전망) 예술인('20.12), 특고('21.7) 등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1.1)
- ▶ (사회안전망) 노인, 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1),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 ▶ (사람 투자) 디지털·그린뉴딜을 선도할 인재양성('25년까지 30만명) 본격 개시, 디지털 배움터(1,000개소) 운영 등 디지털 격차완화 추진

- (안전망)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산업의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마련('21.7)

* 노동자 직무전환·직업훈련·재취업 지원, 지역고용 위기대응 지원 등

- (사람투자)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확대 및 최고 수준의 AI 인재양성을 위한 AI 혁신허브 신설*('21.8)

* 대학 중심의 산·학·연 컨소시엄(1개)을 선정하여 도전적인 협동연구를 지원

※ 한국판 뉴딜 1주년(7.14)을 계기로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안전망 강화 확대·개편 등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 발표 추진

② 재정투자, 법·제도개선 등으로 한국판 뉴딜 확산 뒷받침

[재정투자: '21년 22.5조원 차질없는 집행 및 '22년 계획 마련]

- ①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21년 예산 22.5조원*을 차질없이 집행('21.5월 집행률 59.3%)

* (디지털뉴딜) 7.7조원 (그린뉴딜) 8.1조원 (안전망강화) 6.7조원

- ② 하반기 중에도 국민체감 성과 극대화를 위한 신규 투자소요를 적극 발굴하여 '22년 투자계획도 조속하게 마련

-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온라인 토론(3~4월) 통한 제안은 부처 적격 검토후 '22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민간참여 활성화 도모

* (1~2월) 제안서 접수, (3~4월) 우수제안 심사·시상, (5~9월) 사업검토·예산반영

[법·제도개선: 10대 입법과제 마무리 및 현장규제 개선 노력]

- ①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31개 법률 中 입법완료 15건)는 조속한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국회 등과 적극 협력

* 국회계류중인 입법과제: 환경영향평가법,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 뉴딜 10대 입법과제 中 입법완료 과제 >

'20 (4)	산업집적법(改), 조세특례제한법(改), 고용보험법(改), 보험료징수법(改) * 남녀고용평등법(改)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1회→2회) 부분개정 완료
'21 (11)	국가공간정보기본법(改), 여객자동차법(改), 고등교육법(改) 기후기술개발촉진법(制), 환경기술산업법(改), 화물자동차법(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改), 신재생에너지법(改)(의무공급비율 상향) * 전기사업법(PPA 도입) 부분개정 완료 남녀고용평등법(임신 중 육아휴직)(改), 평생교육법(改), 디지털집현전법(制), 녹색융합클러스터법(制)

- ② 입법과제 후속조치 성격인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 14개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21.12)

< 핵심 제도개선 과제 현황 >

분야	과제	주관부처
디지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안	보호위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행령안 마련 등 세부 이행방안	교육부
	민간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복지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제도개선 방안	산업·중기부
	자율자동차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재설계	국토부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후속입법 등 세부이행과제	중기부
	데이터 기본법안 시행령 제정 등 세부이행방안	과기부

그린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	환경부
	에너지 전환 상생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산업부
	기후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후속입법 등 세부추진방안	과기부
안전망 등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방안	교육.고용부
	디지털 포용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과기부
지역 균형	지자체 주도형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행안부
	지역 균형뉴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행안.균형위

③ 경제계 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중심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 추진

* 그간 240개의 규제개선 과제 건의를 받아 191개의 개선방안을 마련·추진중
- (예시)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재택근무 등이 가능하도록 망분리 규제 합리화

- 투자지원 카라반을 통해 뉴딜관련 기업을 방문하여 투자 애로를 발굴하고 기업투자지원회의를 중심으로 신속히 해소

* 경제단체장 간담회,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애로 소통

③ 뉴딜 펀드, 정책금융 등을 통한 민간자금 유인 촉진

[펀드 추가 조성 등을 통한 국민참여 확대]

- ① 정책형 뉴딜펀드('21년 4조원 조성)는 자펀드를 조속히 결성* 하여 민간부문의 뉴딜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 수행

* (정시 출자사업: 3조원) 위탁운용사 선정('21.2), 펀드결성 완료('21.10)
(수시 출자사업: 1조원) 위탁운용사 선정(0.75조원, '21.6), 펀드결성 완료('21.12)

- '22년중에도 추가 4조원 조성을 목표로 '22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위탁운용사 선정절차 개시('21.12월말 공고)
- 뉴딜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일반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감안하여 하반기에 추가조성 검토('21.7)

* 국민참여 뉴딜펀드 2천억원(국민참여분 1,400억원) 출시(3.29일)후 판매 조기 완료(4.5일)

- ② 뉴딜 인프라펀드는 과세특례('22년 일몰예정) 보완을 위해 세법을 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21.5~)하여 펀드 결성 지원

* '22년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후 5년간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세법개정 추진('22년 이전 투자분도 적용)

- 활발한 펀드 조성을 위해 세제 혜택의 대상인 뉴딜 인프라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현행) 세제혜택을 받는 '인프라'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한정
(개선)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 도입
(세부방안 마련 후 관련 법령개정 검토)

[뉴딜 정책금융 17.5조원 + α 로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 강화]

- ① 한국판 뉴딜 정책금융은 '21년 공급계획인 「17.5조원+α」(5년간 100조원) 초과달성을 넘어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적극 지원

< 한국판 뉴딜 정책금융 공급 실적(21.5월말 기준)·계획(단위 : 조원) >

주요 프로그램	실적	계획
▶(산은) 뉴딜 특별자금 및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렌딩 신설 등	7.6	4.5
▶(수은)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등	4.2	5.0
▶(기은)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보증부대출 등	2.8	2.6
▶(신보) 뉴딜 신성장 분야 중점 육성 프로그램	5.9	5.4
합계	20.5	17.5

- ②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뉴딜 관련 펀드 조성·출자 추진

▶(수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ESG 펀드*」 조성(500억원 출자 → 6,200억원 규모 조성)

* ESG 개선효과를 보이는 투자에 대해서는 운용사에 인센티브 제공

▶(기은) 뉴딜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IBK 뉴딜펀드」 조성(2,000억원 출자)

[민자 투자 및 혁신조달을 뉴딜과 연계]

- ① (민자사업) 디지털·에너지·환경·안전 분야 등에 대해 포괄 주의를 활용하여 신유형 대상사업 발굴 확대

- 신기술이 접목된 전국단위 보급사업*, 수익 연계 인프라 확충 사업 등에 대해서는 민자 적극 검토

* 그린캠퍼스, 디지털 박물관, 스마트그린 산단 등

- ② (혁신조달) 민간 혁신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관련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구매 확산 추진(~'21.12)

- K-뉴딜 혁신제품 지정절차 정례 운영을 통해 뉴딜 관련 혁신제품을 연내 50개 이상 지정 추진

2. 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

(1) BIG3 성과 창출 가시화

① BIG3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

- ① 글로벌 공급망 경쟁중인 BIG3 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세제지원 실시

* 반도체 분야의 향후 10년간(21~30) 기업투자 규모는 약 510조원 이상(K-반도체 전략)

- (예산) '22년 예산(안)에서 BIG3 분야에 금년 예산규모 42조원 이상을 배정하여 BIG3 추진회의 의결과제(37개)* 등을 적극 뒷받침

* (미래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 (반도체) K-반도체전략 구체화, 현장애로 해소 (바이오) 임상 인프라 확충, 혁신의료기기 개발

- (세제) 반도체와 같이 배터리, 백신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지원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 ② 하반기에도 BIG3 분야 등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선정하여 금융지원을 확대

*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 관련 혁신기업 600개 선정 중 BIG3 분야 192개

- BIG3 분야의 중소·벤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대·중소기업, 부품·완제품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생태계 강화

② 전기·수소차 1등 생산국가 도약기반 마련

- ① (친환경차) 연내 전기차 23.9만대, 수소차 2.6만대 보급 목표 달성

- 수요 창출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¹⁾ 시범사업을 개시(21.8)하고 '22년 본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제도²⁾ 마련(21.12)

1) 대규모 수요자(렌터카·물류·운송·대기업 등)에 친환경차 구매목표(예: 10%) 부여

2) 친환경차법 개정(~21.12월), 친환경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 우대지원 검토

- 전기차 구매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통한 물량 재배정, 지방비 확보현황 지속 점검

-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도 추진(21.7)

- ② (자율주행차) '27년 세계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R&D¹ 및 테스트베드 고도화² 추진
- 1] 과기·산업·국토부 등 협업을 통해 센서, 자율주행 SW 등 집중 개발
2] K-City(경기 화성)에 첨단시험환경 구축, 중·소규모 테스트베드(충북 청주) 구축('21)
- 시범운행지구에서 셔틀·택시 등 유상서비스를 실증¹하고, C-ITS(실시간 교통정보 공유시스템)² 등 전국에 인프라 구축 착수
- 1] 서울·충북·대구·제주·경기('21.3Q~), 세종·광주 既착수
2] 전국 고속도로, 국도 등을 대상으로 구축 개시('21)
- ③ (생태계 구축) 미래차 투자펀드 신설 등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정비 생태계 구축 등 미래차 보급 기반 확대
- * 총 2,000억원 규모 미래차-산업디지털 투자펀드('21.2) 본격 투자 등
- 부품업체 전환지원을 위해 완성차-부품업체 협업 체계 구축 및 R&D, 금융, 인력양성 등 맞춤형 제공*으로 사업재편 유도
- * (R&D)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기술개발 지원('21년 신규 100억원)
(금융) 사업재편 지원펀드 신규 조성(500억원) (인력) 친환경차 R&D 인력양성 등
- 미래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배터리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 등을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21.7)

③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 ① (공급망 확충) 클러스터에 양산팹 연계 테스트베드,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구축 추진('21.11 예타 신청)
- ▶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기업성장 환경조성사업 추진 검토
 - ▶ (소부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위해 인허가, 기반시설 확보 등 지원('21.4Q)
 - ▶ (제조) EUV 기반 7nm 이하 첨단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대, '21년 중 5nm 양산 추진
- ② (인프라 구축 지원)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세액공제 추진
-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선제 반영, 전력 인프라 구축시 최대 50%(국비 25%, 한전 25%) 지원
- ③ (인재양성)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23~'32 3,500억원, 신규 예타신청) 등을 통해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6만명 육성

④ (생태계 조성) 미래차-반도체기업-IoT기업간 협력모델 기반으로 공급망 내재화를 지원¹⁾하고, 반도체 공정 탄소중립화²⁾ 추진(21.9)

- 1) ①미래차-반도체기업-IoT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지원(21.2월~), ②車 반도체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21), ③전주기 자립화 지원체계(설계자산 확보 등) 구축(22~)
2)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가스 개발 및 공정인증기술 예타 신청(21.3Q)

▪ 규제특례, 신속투자 지원¹⁾ 등을 위한 입법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기술 해외유출 방지²⁾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확대(21.12)

- 1) 美 공급망 행정명령(21.6월 발표)과 연계하여 추가지원 방안 등 적극 검토
2) '제4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2~24)' 수립 및 기술인력 관리 실태조사(21.下)

④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신성장동력化

① (신약·첨단 의료기기 지원) 차세대 유망기술 중점 지원을 위해 개발·임상·인허가 등 전주기에 걸쳐 집중지원

- 국가신약개발사업(예타 22조원 7월),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예타 6천억원 6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예타 1.2조원) 등 3대 협업사업 본격 시행

② (양산·사업화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완제의약품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위·수탁 제조능력 확대 추진(21.9~)

- 한국형 랩센트럴(K-바이오 랩허브) 구축(21.8 예타) 및 핵심 원부자재 및 생산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제약산업 스마트공장도 적극 육성

* 16개 핵심 소부장 R&D 지속 지원 및 지원 확대(백신 원부자재 등)

③ (수출 지원) K-방역 10대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전용 수출 바우처·금융 신설¹⁾ 및 중장기 수출경쟁력을 위한 R&D 확대²⁾ 추진

- 1) K-방역 전용 수출바우처: '21년 29.5억원, K-방역 전용 수출금융: '21년 100억원
2) 핵심 전략품목 R&D: '20년 105.5억원 → '21년 193.7억원 성능개선 R&D: '21년 신규 86억원

- 美 FDA, EU EMA 등 인증을 위한 컨설팅·모의실사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전략적 협력사 파트너링·e-커머스 플랫폼 연계 마케팅 강화

④ (인력·인프라 확충) 한국형 NIBRT(국제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시범운영하고,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신설 검토(21.10)

- 감염병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생물안전3등급시설(BL3),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 및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 추진

[2] 유망 신산업 육성

① D.N.A.를 활용한 新산업 · 新서비스의 확산체계 조성

[DNA 생태계 기반으로 新산업 발굴 및 혁신 서비스 제공]

- ① (Data) 의료기관에 분산 저장된 임상데이터를 공유·개방하여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구축하고, 활용체계 마련(7개 컨소시엄* 운영중)
 - * 부산대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병원(21~), 한림대병원(21~)
 -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2,580건을 지원하고 데이터 활용 교육·컨설팅 제공
 - 법원의 온라인 판결문 데이터 공개 확대 관련, 4차위 해커톤(6.22)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 모색 추진
 - *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비실명조치 수준 및 방법 합리화, 열람수수료 정책 재검토, 제공방식(現 이미지PDF) 개선 등 필요
- ② (Network) 5대 핵심 서비스(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를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 조기 확산
 - * 「5G+ B2B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마련('21.7월)
 - 6G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6대 중점분야(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 10대 전략기술 R&D 착수('21~)
 - * 6G 핵심기술개발사업('21~'25년, '21년 172억원), 상시적 보안품질 보장을 위한 6G 자율보안 내재화 기반기술 연구('21~'24, '21년 15억원) 등
- ③ (AI) 지역주력산업(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과 AI를 융합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AI 핵심자원¹⁾을 총집약한 집적단지²⁾ 착공('21.9)
 - 1) 핵심자원(데이터, 기술, 인력), 인프라(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 2) 광주 첨단3지구 내(4.7만㎡)
 - AI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개념 반도체를 개발¹⁾ 하고, 국내 개발 AI 반도체 기술·제품에 대한 실증 지원²⁾
 - 1)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및 저장연산 기능을 통합한 PIM 반도체 개발 추진('21~)
 - 2) 민·관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국산 기술·제품 실증 및 상용화 지원('21~)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인공지능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AI) 서비스 플랫폼으로 개편* 추진('22~)
 - * ('20) ISP 수립 → ('21) ISP 검토, 개편방안 마련 → ('22~'26)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데이터이동권을 통한 마이데이터산업 쏠 분야 확산]

- ① (법제 정비) 개인 주도의 데이터 전송권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서의 법적기반 마련*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1.12)

* (현행) 금융·의료·공공 분야 마이데이터 → (개선) 쏠 분야로 확대

- ② (인프라 구축)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를 연구하고, 이종사업간 연계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단* 구성('21.9)

* 기술표준 및 보안체계 등 인프라 구축, 이종산업 연계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등

- ③ (산업 활성화) 국민·기업 수요를 토대로 여러 분야의 서비스 발굴

- ▶ (금융)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및 본격 서비스 제공('21.下)
- ▶ (의료) '나의건강기록' 앱 구축·운영('21.2~) 및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22)
- ▶ (교통 등) 교통·생활소비 등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추진('21년 8개 과제)
- ▶ (공공) 본인의 행정정보 활용을 위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 구축('21.2~)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 ① (법제 정비)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명처리 기준 명확화 및 가명정보 결합절차 개선 추진('21.6~)

- ② (성과 확산) 결합시범사례 성과(5대분야 7개과제)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결합사례 발굴 및 지원('21.6~)

▶ (예시) 결합시범사례 추진현황

분야	시범사례	정보보유기관/대상정보	이용기관 (결합전문기관)
1.의료 +인구	①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암센터, 병원) 암 치료 임상정보 (건보공단) 진료정보 (통계청) 사망원인정보	국립암센터 (통계청)
2.금융 +보훈	② 국가보훈대상자 신용실태 연구	(보훈처) 생활안정지원 (신청원) 개인신용정보	국가보훈처 (신용정보원)
3.소득 +복지	③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사보원, 연금공단 등) 사회보장정보 (행안부) 주민등록정보 (국세청) 소득정보 등	사회보장위원회 (국세청)
4.통신 +유통	④ 불법스팸 실태연구	(인터넷진흥원) 스팸정보 (통신사) 스팸의심정보, 가입정보	인터넷진흥원 (삼성SDS)
5.레저 +건강	⑤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임업진흥원) 산림치유자정보 (건보공단) 의료정보	한국임업진흥원 (건보공단)

- ③ (지원체계 확충) 가명정보 활용기반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 대상 기술, 시설·장비, 전문인력 등 지원체계 확충('21.7~)

*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강원도, '21.6) 및 테스트베드 지원, 가명처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21년 510명), 가명처리 전문가 풀 구성·운영('21.7)

② 5대 유망신산업 육성 핵심 프로젝트 추진

- 기술급변에 대응하여 시장 수요가 큰 유망 신산업 5개 분야의 육성·지원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추진(신산업 전략지원 TF, '21.4~)
 - * ①클라우드 ②블록체인 ③지능형 로봇 ④디지털 헬스케어 ⑤메타버스
- 시장·기업의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문제해결형 대책'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21.12)

[클라우드: 공공부문 도입 및 이용 활성화]

- 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적극 활용을 위해 수요맞춤형 민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SaaS)* 개발·이용 지원 강화
 - * Software as a Service: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응용SW를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①행정·공공기관 대상 SaaS 수요조사, ②민간 SaaS 개발·보안인증 획득 지원, ③행정·공공기관 SaaS 이용 지원(이용료, 컨설팅 등) 실시
- ② 금융·제조·물류 등 5개 분야 대상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¹⁾, 5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²⁾ 추진('21.5~)
 - 1) 금융·제조·물류·에너지·교육 분야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서비스 개발·고도화 지원
 - 2)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전환비용, 이용료 지원 등

[블록체인: 차세대 기반·융합기술 확산]

- ①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및 국민생활 편익·인식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 보완 추진(~'21.9)
- ② 전문가, 업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해 블록체인 확산사업 대형화 추진 검토('22~)
- ③ 거래속도, 데이터 처리규모 등 기존 기술한계를 극복하는 핵심 기반기술*('21~'25) 및 AI, IoT 등과의 융합기술('22~) 개발 추진
 - * 참여자간 합의기술, 스마트 계약보안기술, 신원관리 기술, 데이터 관리 기술 등

[**지능형 로봇: 로봇 활용 서비스 생태계 조성**]

- ① 쇼핑몰 등 국민생활밀접 거점을 중심으로 다수·다종의 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 추진('21~)
 - 활용모델별 최적화된 로봇과 서비스 솔루션을 제시하고, 통합관계 시스템 및 로봇·통신 기반 데이터 수집 인프라 구축
 - 실증거점 공모('21.6~) 및 수요기관과 인프라 구축 착수('21.9~)
- ② 서빙, 조리, 교육 등 비대면·언택트 수요에 대응한 新비즈니스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창업 활성화 추진('22~)
 - 로봇 활용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설계 연구 추진('21.9~)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 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¹⁾, 임상정보·유전체 결합 바이오 빅데이터²⁾ 등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
 - 1) 공공기관, 의료기관에 분산된 국민 건강정보의 통합적 활용 지원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22)
 - 2) 100만명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예타조사 등 추진('21~)
- ②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검토, 서비스 인증제 도입방안 마련 등 추진('21.12)

[**메타버스: 개방형 플랫폼 구축**]

- ① 現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 등) 내 국내 관광지를 구현(한국관광 유니버스)하고, 다양한 간접경험* 제공을 통해 방한관광 유도
 - * (예) 가상공간 내 한국관광지에서 버추얼 팬미팅 및 콘서트, 가상공간 내에서 즐기는 한국관광 체험행사(한복입기, 야시장 체험 등) 개최 등
- ② 국내 주요명소의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 가상-현실간 서비스가 연동되는 메타버스 개방형 플랫폼 구축
- ③ 위치기반 AR 도시정보 서비스(길안내, 관광, SNS 등), 가상-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양방향 XR 서비스* 등 개발
 - * (예) 동일한 위치의 거울세계와 현실세계 사용자간 음성대화 및 상호작용 지원

③ 우주 산업 등 '뉴 스페이스'를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기업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본격화]

- ① (개발역량 제고) 출연(연) 중심으로 축적된 우주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기업주관 우주개발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
*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19~'25년, 3~5호), 다목적실용위성 8호('22~) 기업주관 추진
 - 발사체·위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 지원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을 기업 주관으로 지원
* '20.4월 예타통과, 총16개 세부과제, 총사업비 2,115억원, 사업기간 '21~'30년
- ② (인프라 구축)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계기로,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21~'24)을 통해 민간 주도 발사체 시장 활성화 지원
 - * 발사·통제 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나로우주센터 內에 발사장 설치 추진
 - 초소형위성,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추진 등 공공 목적의 우주개발을 확대하여 글로벌 우주기업 육성
- ③ (인력양성) 우주 전문인력을 산업체에 적기 공급하기 위한 「우주산업 인력양성 추진방안」을 수립('21.6)하고, 인적역량 강화* 추진
 - * 체계기반 도제식 실무교육, 우주분야 시설·장비 전문교육, 우주기술 전문연수 등
- ④ (법령정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국회제출, '21.12)을 통해 기술이전 활성화, 우주신기술 우선사용, 창업촉진 등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 유도

[드론 배송 상용화 및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 추진]

- ① (드론 활용) 드론 배송의 본격적인 상용화('23)를 위한 실증 지원* 및 운용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추진('21.12)
* 드론 활용 물품배송 등에 필요한 드론별 무게, 성능, 항속거리 등 세부기준 마련
- ② (도심항공교통)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¹⁾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 R&D²⁾ 등 추진('21.8)
 - 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미래의 도시교통 체계(도시 권역 30~50km의 이동거리가 비행 목표)
 - 2) 기술로드맵에 따라 교통관리·운항(자율비행), 인프라(고속충전) 등 전방위적인 중장기 R&D 추진('21.8월 예타신청, '23 착수 목표)

4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

- ① BIG3, DNA 등 혁신성장 분야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21년 57.3조원 목표)을 차질없이 추진

< '21년 혁신성장 관련 정책금융 공급계획(단위 : 조원) >

	산은	신보	수은	기은	기보	무보	중진공	농신보	합계
계획	20.0	12.8	12.0	5.5	5.0	1.6	0.28	0.07	57.25
하반기	8.7	5.0	7.0	3.3	0.5	0.69	0.10	0.04	25.33

- 既 마련한 공급 목표에 따라 하반기 25.3조원 지원

- ▶ (신보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지원)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분야 보증지원
- ▶ (수은 : BIG3 집중 지원) 「글로벌 핵심전략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우대지원 프로그램(가칭)」 신설 등 BIG3지원 확대('21년 2조원)
* 수은-현대차, 미래차 산업 글로벌화 업무협약('21~'23년, 3조원) 체결('21.4월)
- ▶ (무보 : 혁신성장기업 금융지원) 혁신품목 수출 창업·벤처기업 보증료 우대(△50%) 및 잠재력 위주의 심사* 지원
* 혁신 잠재력 보유 중소·중견기업 발굴 →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특례심사 진행
- ▶ (기보 :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지원)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성장분야 보증지원
- ▶ (중진공) BIG3 등 미래기술 육성자금 지원 및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전용 자금(금리△0.3% 우대, 대출기간 최대 10년 등) 운영 등

- 한국판 뉴딜 관련 시장수요, 「녹색산업분류체계」 등을 고려하여 신규 혁신품목 발굴 추진('21.8, 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

- ②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IGS)*을 활용

* Innovation Growth intelligence System : 혁신성장 정책금융 자금공급 현황 및 성과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정책금융 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ONE-STOP 통계·분석 플랫폼

- (인프라 확충) 우수 지식재산(IP) 보유기업 보증지원을 위해 간이 가치평가모형¹⁾ 개발(신보, 12월), 특허정보 지원체계²⁾ 고도화(기보, 12월)

1) 기술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기술 기여도 등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가치를 자동 평가
2) 특허평가시스템(KPAS) 내에 중소기업에 특화된 특허정보 콘텐츠(기술 경쟁상황, 출원현황 등)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 (IGS 활용 확대) 기업 단위 정보서비스('21.4월 개시) 활용, 지원기업 발굴 및 동일 산업/품목군간 지원효과 비교 추진

3. 주력 제조업 및 유망 서비스산업 혁신

(1) 제조업 경쟁력 고도화

① 친환경·스마트화 중심으로 제조업 전반의 혁신 강화

[친환경·저탄소 대응을 위한 산업 혁신 추진]

- ① (혁신전략) 친환경·저탄소 시대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조업 혁신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마련(‘21.12)
- ② (추진체계) 업종별 민·관협의회* 등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운영하여 업계와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
* 철강·석유화학 등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표준화전략 협의회 운영중
- ③ (R&D) 「2050 탄소중립 산업 R&D 전략」을 수립(‘21.9)하여 기술적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민간 주도 한계돌파형 기술혁신 본격 추진
* 분야별 핵심 저감기술의 개발일정·목표 및 탄소중립 R&D 민간투자 활성화
- ④ (민간투자) 민간의 자발적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연구개발·시설투자 부담 완화조치 시행 등 다각적 방안 마련
- ⑤ (중소기업) 중소기업 탄소 다배출업종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탄소수준진단, 컨설팅을 위한 바우처 지원(‘21.7~)
- ⑥ (국제협력) 유망기술·경험을 해외국가들과 적극 공유*하고, 청정수소 해외공급망 확보 등 국가간 협력을 확대
* 韓·美 CCS 기술협력, 한·러 친환경차 보급모델 개발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밸류체인 혁신 및 고부가가치화]

- ① (제도)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종합·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표준 등*을 마련(‘21.12)
* 산업데이터 계약시 이익배분 기준, 데이터 교환·결합 촉진을 위한 표준 개발·실증
- ② (플랫폼) 미래차, 조선 등 10대 업종별 산업 디지털전환 연대¹⁾ 활동을 통해 산업데이터 플랫폼²⁾ 등 대표 사업 확대
1) 협·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여 디지털전환 방향 제시(‘21. 10개 연대, 60개 이상 과제)
2) 업종내/간 협업기반으로 산업 공통과제 해결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21. 14개)

- ③ (인프라) 협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술·표준,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산업 디지털인력 양성 및 디지털혁신펀드(‘24, 4,000억) 확충 추진
- ④ (국제협력)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참여, 국제표준 선점 등을 통해 디지털 협력 강화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체결(8월),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16종 개발 등

[D.N.A. 기술을 통해 제조업 스마트화 가속화]

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및 제조업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1.12)

* 제조데이터 정의, 범위, 거래요건, 이익배분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¹⁾의 실증성과를 활용하여 최첨단 인공지능 스마트공장²⁾ 구현

1)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중소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제조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AI분석도구, AI표준모델(데이터셋), 컨설팅·교육, 실증 서비스 등 제공(‘20~’22구축)

2) ‘21년 스마트공장 보급예산 활용하여 시범사업 추진(200억원, 100개사)

②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확산을 통한 제조업 미래 비전 제시

- (디지털 클러스터) 전후방 가치사슬 기업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된 협업 선도모델을 지원하는 클러스터 본격 추진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개별공장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

- (K-스마트 등대공장)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된 업종별 대표공장 육성을 통해 모범사례(Use Case) 확산 추진

* 세계경제포럼(WEF)의 등대공장을 벤치마킹, 업종 대표 공장을 선정해 맞춤형 진단·설계부터 고도화 솔루션 패키지 지원(‘21.6, 10개사 내외)

- (탄소중립형) 탄소 배출이 높은 업종·공정을 혁신적 新공정으로 대체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설(‘21.7)

* 뿌리, 화학 등 고탄소 배출업종 중 지정공모형 방식으로 혁신공정을 발굴하여 전략적 지원(①탄소 감축효과, ②공정혁신 니즈, ③동종·유사업계 확장성 등 기준)

③ 스마트 제조혁신 3대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R&D를 통한 스마트제조 선도모델 확산 지원

* ①대·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첨단제조(가치사슬연계)기술, ②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위한 유연생산기술, ③현장 디지털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적용(스마트워크)기술

② 조선, 해운 등 주력 산업으로의 혁신 확산

[조선업 디지털·탄소중립화 집중 지원으로 세계 1위 수성]

① (디지털화)造船 공정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야드(예타 추진) 및 선박데이터 수집·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

- 자율운항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¹⁾하고, 선박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²⁾(~'22)도 추진

1) 지능형 항해, 기관 자동화 등 자율운항기술 육해상 테스트베드 착공

2) 스마트십 데이터 플랫폼 구축('21.下 프로토타입 개발, '22 실선 탑재)

② (친환경화) 수소·암모니아 등 無탄소 선박 기술개발¹⁾과 함께 LNG선 핵심부품 국산화²⁾를 통해 미래 시장 선점

1) 친환경선박 전주기 기술개발사업(산업부·해수부), 총사업비 약 2,540억원, '22~'31년

2) LNG 화물창 국산화('20~'22년) 등

- 시험·평가기반¹⁾, 국제표준²⁾ 등 산업기반 확충도 병행

1) 안전성 검증 육상 테스트베드 구축 2) 국가인증 先개발(연내) → 국제표준화

[친환경·스마트 해운 물류로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

① (친환경 전환) 친환경 선박('21년 28척 신조) 및 항만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LNG 병커링* 인프라 구축 등 추진

* 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방식

② (스마트화)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을 위해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구축 추진(인천·부산항 2개소)

③ (고효율선대 확충) 미주항로* 비용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효율·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추진

* 유럽노선은 초대형 '컨'선 20척 투입을 통해 고효율·저비용 구조 既 확립

-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대책 발표('21.6)

(2) 소부장 2.0 성과 가시화

① 소부장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및 미래 공급망 창출

- ① (핵심품목) 338+ α 개 핵심품목 공급안정화를 지속 추진하고, 100대 품목 중심 사업화 지원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장비 상세정보* DB화
* ('20년) 144종 → ('21년) 193종, 장비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축 확대
- ② (미래선도품목) 미래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선정한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65개* 대상으로 연내 단계적 R&D 지원 개시
* 주력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 등) 27개 품목 + 신산업(바이오·미래소재 등) 38개 품목
- ③ (장비고도화) 핵심장비 내재화를 위해 BIG3 등 新산업 장비 R&D 로드맵을 마련('21.12)하고, 제조장비 핵심부품 개발사업 추진

② 소부장 전문기업의 단계별 지원으로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 ① (으뜸기업)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소부장 으뜸기업”을 하반기 중 20여개를 추가로 선정(現 22개)하고, 전주기*에 걸쳐 밀착지원
* 기술개발(R&D) → 사업화(실증지원·자금지원) → 글로벌화(수출역량강화) 등
- ② (강소기업·스타트업) 기 선정기업(강소 100개사, 스타트업 20개사) 대상 R&D, 투자, 보증 등을 집중 지원하고 하반기 중 추가지정('21.12)

③ 특화단지·투자지구 운영을 통한 첨단산업 클러스터화 지원

- ① (소부장 특화단지) 5개 특화단지* 대상으로 R&D,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원방안('21.5, 경쟁력위 의결)을 차질없이 이행
* 경기(반도체),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전북(탄소소재), 경남(정밀기계)
- ② (첨단 투자지구) 산업집적법 시행('21.9)을 위한 하위법령을 완비하고, 후보지구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추진('21.9~)
*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특례(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 등

(3) 유망 서비스산업 혁신 가속화

① 디지털·新기술 기반의 서비스산업 육성 체계 구축

- ① (법적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하위법령 등 사전준비에 만전
- ② (추진체계) 법 통과 전, 4대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의 활로를 찾기 위해 「2기 서비스산업 혁신TF」 구성·운영
 - * ①코로나팬데믹 발생, ②신기술 발전, ③인구구조 변화, ④글로벌 경쟁 심화
 - 기초 인프라 전방위 혁신, 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 신규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고, 1기 TF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
 - * 서비스 표준화전략(21.4), R&D 활성화 전략(20.10),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방안(20.8) 등
- ③ (서비스 통계)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혁신전략 수립을 위해 통계 플랫폼 구축 등 「통계시스템 고도화 방안」 마련(21.11)
- ④ (서비스 스마트화) 중소기업에 대해 온라인 경제, 기업 혁신, 공공분야 등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25년까지 1,350개사)
 - * 온라인의료·교육, 비대면스마트워크, 로봇자동화, 물류·고객관리, 업종공통솔루션 등
- ⑤ (新직업) 미래 산업·직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지원, 자격증 종목 신설, 관련규제 완화 등 「新직업 활성화 방안」 마련(21.11)*
 - * 관계부처(기재부·과기정통부·고용부) 합동으로 연구용역 추진(21.下)

② 한걸음 모델 과제 합의 도출 및 제도화 추진

- ① '21년 상반기 추진과제*의 이해관계자간 상생합의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추진과제도 조속하게 선정 추진(21.9~)
 - *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 등 2개 과제
- ② 한걸음 모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新사업 진입촉진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상생방안 마련 제도화*
 - *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21.7)를 반영하여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설치·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③ 분야별 新 서비스산업 혁신 성과 창출 가속화

① (공유경제)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를 위해 기존 숙박업계와 플랫폼업계간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한걸음모델을 통해 합의한 상생협력 방안, 불법숙박 근절, 영업일수 등 논의

- 공유주방 이용업종 범위·성격,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 공유주방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21.12, 식품위생법 하위법령 개정)

② (관광) 숙박·교통·안전 등 쏠과정에 모바일·네트워크를 통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 확대

-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21.10)하고, 전국 4개소 해양치유센터 착·준공(21.12)

* (착공)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준공) 전남 완도

③ (금융혁신) 혁신적 디지털 금융서비스¹⁾의 출현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 및 금융보안 강화²⁾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

2) 이용자예탁금 보호 및 클라우드 사업자 등 제3자 리스크 감독 강화

④ (유통) 직거래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품목·유통경로별 맞춤형 저온 유통체계 마련 등 「수산물 콜드체인 구축 계획」 수립(21.12)

* 빅데이터를 통한 수요예측으로 주문물량을 사전에 파악·접수하여 각 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을 집하, 저온·냉동 보관, 포장·배송

⑤ (물류) 신규 조성도시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추진방안」 마련(21.12)

⑥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및 진료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 추진(21.12)

*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동의,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 고지, 질병명·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

(4) 문화강국 도약 기반 구축

① K-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소프트파워 선도국가 실현

- ① (콘텐츠)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AI, 5G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콘텐츠¹⁾ 개발·제작지원 및 「출판유통 통합 전산망」²⁾ 운영(‘21.9)
 - 1) 5G 휴대폰 카메라로 특정장소를 비추면 해당장소를 배경의 영화게임·웹툰 등이 재생
 - 2) 생산·유통·소비 데이터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출판유통 관리 시행
 - 비대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온라인 한류행사 개최(‘21.11) 및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Welcon) 고도화¹⁾, 수출 전문인력 채용지원²⁾ 실시
 - 1) 콘텐츠 온라인전시관 구축, 해외구매자와 상시 수출상담, 콘텐츠 수출정보 통합 제공 등
 - 2) 해외진출 콘텐츠 기업에 수출 전문인력(해외마케팅번역 등) 채용지원(1인당 월 180만원 최대 6개월)
- ② (1인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미디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 개소(‘21.8)
 - * 1인 미디어 전업 종사자스타트업을 위해 사무공간, 제작시설을 갖춘 전문 지원시설
- ③ (전통문화) 특화 인재양성을 위해 실무형 커리큘럼을 개발(‘21.11)하고, 전통문양 디자인 현대화(1,600건) 및 문화포털 공개(‘21.12) 추진
- ④ (게임)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21년 이후 2개소) 등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한중일 e-스포츠 대회 개최(‘21.9)
- ⑤ (인프라) 한류 확산을 위해 재외 문화원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문화축제 개최(‘21.10)
 -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¹⁾ 지원(‘21.7~)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체계 구축²⁾
 - 1) 중소기업 대상 법률컨설팅, 불법유통감시, 저작권 침해감정·조사, 소송비용 등 지원
 - 2) 해외 불법사이트 국제공조 수사, 저작권 침해조치 연구, 상시 수사공조체계 구축 등

②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확대

- ①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10만원) 지원인원 확대(2차 추경)
- ②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21.11)하고, 기본계획 수립(‘21.12)

4. 제2벤처붐 시대 지속 지원

① CVC, 복수의결권 등 벤처 육성 제도적 기반 확충

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벤처투자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¹⁾ 허용 시행(12월)²⁾**

- 1)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벤처캐피탈로 설립을 허용하되, 사전·사후적 통제장치(총수익가에 직접 매각 금지 등)를 마련하여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
- 2)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21.12월)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 완료

②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하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¹⁾ 제도 입법화²⁾ 추진**

- 1) 1주에 다수 의결권을 갖는 주식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예외적 허용
- 2)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중('20.12월 국회제출)

③ **제2벤처붐이 우리 경제에 안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 보완방안*」 수립('21.9)**

- * ①창업벤처생태계 우수인력 유입, ②개인·법인 등 민간 유동성의 투자시장 유인, ③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 마련
- **우수 인재의 벤처·스타트업 유입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 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개편* 검토('21.12 벤처기업법 개정 등)**
- * 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확대, 행사요건 합리화 등 활용성·인지도 제고 방안, 세제지원 확대 등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전반적 검토
- **벤처기업법 일몰기한(現 '27.12.31.)을 폐지하여 육성·지원 근거를 공고히 하고, 지원제도 등을 전면 재정비('21.12 개정안 마련)**

② 유니콘 등 미래 성장기업으로의 자금 공급 기반 확충

[상장제도 개선을 통한 미래성장기업 자금공급 활성화]

① 미래성장기업 상장 프로세스 전면 개편('21.5~) 본격 시행

- (맞춤형 심사) 미래성장기업 상장심사시 과거 영업성과보다는 예상손익, 기술력, 사업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반영하여 평가
- (신속 상장) 유니콘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거래소 전담 직원 배치 등)하고, **Fast-Track 방식의 신속심사 실시(예: 45→30일)**

② 기업공개(IPO)시 보다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21.12)

*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

[금융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①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용자제도*를 도입(‘21.12, 벤처투자법 개정)하여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자금공급 확대기반 조성

* 용자기관이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고, 후속 투자자금으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저리 대출

▪ 법적근거 마련 이후, 중진공 정책용자 시범사업으로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용자 전용자금 신설(‘21.12)

②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하여 한국형 실리콘밸리은행(벤처대출 전문은행) 육성하는 등 혁신기업 벤처대출 활성화(‘21.9)

③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운용목적(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 기준(일반·기관전용)으로 재편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규제 완화(‘21.10)

▶ 체계개편 이후 사모펀드별 운용주체 및 투자자 범위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주체	전문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GP, 非금융투자업자)
투자자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 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중 일부* * (안) 연기금, 금융회사 등(개인투자자 제외)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 가속화]

①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25) 비대면 분야 창업 촉진을 위해 비대면 스타트업 1000 지원규모 확대(‘21. 200 → 400개사)

②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하여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등 유망분야에 투자 본격화 (1조원*)

* 1차 출자사업(9월 결성): 약 0.9조, 2차 출자사업(11월 결성): 약 0.1조

③ (K-유니콘프로젝트¹⁾) 예비유니콘²⁾ 등 ’21년도 참여기업 80개사에 시장개척자금 등을 지원하고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IR 연계

1)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2) 아기유니콘(~1천억원) → 예비유니콘(1천억원~1조원) → 유니콘(1조원~)

▪ 예비유니콘·유니콘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규모 확대(2차 추정)

③ 新산업 등 혁신 분야에서의 창업 지원 확대

① (新산업 창업) 디지털 경제시대에 걸맞는 기술 융복합 기반의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해 창업지원의 세부 시행규정 마련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개정, '21.下)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 예정
 - "신산업" 등의 범위 설정, 성장 유망 창업의 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시

② (핀테크창업)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마련('21.12)

- *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을 포함한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안 마련

③ (콘텐츠 창업) 성장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 맞춤형 성장¹⁾, 해외진출²⁾ 등을 지원

- 1) 디지털 콘텐츠 관련 창업자의 투자유치, 판로개척, 홍보 등 지원
- 2) 글로벌진출 스타트업의 해외 마켓 참가, 현지 비즈니스 등 지원

- 영상 콘텐츠, 웹툰 분야의 유망 1인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미디어·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지정(2개, '21.12)

④ (제조창업) 메이커 공간*을 전문랩·특화랩 중심으로 확대하고, 메이커 공간의 자원·인력·프로그램을 연계할 종합플랫폼 구축('21.12)

- * 제조창작을 위한 장비시설을 갖추고 제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양산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
 - '22년까지 전문랩 12개→30개, 특화랩 9개→39개

④ 벤처·스타트업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아이디어의 실증지원 플랫폼 제공]

① 실증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벤처·스타트업의 신기술·제품을 실증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확산체계 구축

▶ 공공기관의 실증지원 운영 주요 사례

주요 기관(운영시기)	분야	실증지원 주요 내용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	■ 연구원, 댐·수도사업장 인프라와 전문인력 지원
한국도로공사	자율주행	■ 주행 시뮬레이터 등 지능형교통(ITS) 시험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주택	■ 스마트시티, 에너지절감 주택기술 등 실증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시공·설비 등 실증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	■ 디지털 유전관리, 탐사·개발 관련기술 실증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관제	■ 항공·물류분야 건설 등 신기술 시험·인증 지원

- 각 기관에 산재한 실증 인프라와 벤처·스타트업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시범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운영(~'21.12)

* '21.6월 'K-테스트베드' 시범운영 참여 공공기관 확정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통합 플랫폼을 구축¹하고, 참여기관 추가 및 실증확인 후 후속 인센티브 지원방안² 마련('21.12)

1] 기관별 테스트 가능한 시설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실증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관의 One-stop 서비스 실시(접수→제공→확인서 발급)

2] 공공조달(혁신제품) 지정시 우대, 해외실증 연계지원(한국무역협회 등)

②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D-테스트베드'를 제공('21.8~)

- 핀테크 기업에게 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데이터, 금융회사 데이터 등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환경을 적극 지원*

* (6월) 핀테크 기업이 시험할 금융과제 선정 (8월) 핀테크 20개사 테스트 진행 (11월) D-테스트베드 시연회 개최 및 기업평가 실시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촉진]

①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VC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 규모(現 2천억원 이상 조성 목표) 확대(2차 추정)

- 글로벌 펀드의 투자대상에 국내-해외 벤처기업간 조인트벤처*를 추가하고, 해외 벤처자본과의 매칭 등을 통해 후속투자 유도

*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경영방식으로, 참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주식·채무·무형자산 등)을 보유하는 기업 형태

②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과 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팅* 지원 확대(2차 추정)

* 제품·기술의 해외 실증에 필요한 자금조달, 거래처 확보 등을 지원

- 현지 시장 검증 및 회계·법률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해외투자유치, 플립(flip)* 등 벤처 해외진출 지원 방식 다양화

* 국내 회사의 형태는 유지하고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을 해외 법인에 출자해 해외 법인은 모회사·국내 법인은 자회사의 지위를 갖는 지배구조의 변경

5. 핵심 인력양성으로 생산성 제고

① AI·미래차 등 新기술 분야의 인력 집중 육성

[新기술 분야 인재양성 지원기반 구축]

① 新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협업예산을 통해 '22년 예산에 반영('21.10)

* ('21년) AI·빅데이터·스마트제조·첨단소재·바이오·클라우드 6개 분야, 30개 사업
→ ('22년) 미래차·시스템반도체·그린뉴딜 등 22개 新기술 분야로 확대

- 시장수요 대비 인력공급이 부족한 분야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과잉분야는 유사사업을 적절하게 조정

② 新기술 인재양성 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 위해 HRD-Net 시스템 개편¹⁾ 및 범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²⁾ 구축 검토('21.12)

1) ('21년) 모집정보, 요건 등 정보 연계 → ('22년) 배출인력의 취업률 등 성과관리

2) 각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과 이력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를 통해 시스템 구축 단계별 탑재 기능 구체화 예정('21년 ISP 진행)

[정규과정을 통한 新기술 분야 인력양성 체계 강화]

① (폴리텍) 대학 학과를 러닝팩토리*, 스마트공장 특화 캠퍼스 등 디지털·新기술 분야 중심으로 신설·개편(~'21.12) 후 인력양성

*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설계부터 제품 완성까지 전체 공정을 하나의 공간에서 체험·실습할 수 있도록 한 융합기술교육시스템

②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디지털·新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수도권-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혁신공유 대학 체계 구축

* '21년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총 8개 분야

- 산업체·연구기관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각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참여 학생 사회진출 지원

③ (특화 전문대학) AI·차세대반도체·미래차 등 9개 분야 12개 전문대에 신산업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 지원('21~'23)

[소프트웨어 · 반도체 · 의사과학자 등 특화인력 집중 육성]

① (SW) 중소·벤처기업의 SW인재 구인난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으로 SW 인재를 5년간('21~'25) 총 41.3만명+α 규모로 양성

- ▶ ①대학 등 교육과정을 통한 양성(11만명) + ②정부 인력양성 사업을 기업 주도형으로 개편(21.4만명) + ③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한 추가 양성(8.9만명*)

* 수준별 양성 규모: 초급인재(1.45만명) + 중급인재(7.26만명) + 고급인재(0.24만명)

< SW 인력양성 주요 프로그램 >

구분	인력양성 프로그램
단기 (2.1만)	▶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신설 ▶ 지역·산업계 주도 지역 수요 맞춤형 훈련 실시 ▶ 벤처·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현장훈련(S-OJT) 지원 강화
중기 (6.8만)	▶ 네트워크형 캠퍼스 SW아카데미 도입 ▶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인공지능 분야 융합혁신 인재양성 ▶ K-디지털트레이닝, AI-SW 핵심인재사업 등 기존 우수사업 확대·개편 ▶ SW중심대학,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등 정규교육과정 확대
인프라	▶ 군장병 대상 AI-SW 기초·심화교육으로 전역자 역량 강화 ▶ 선도기업 전문인력 등 양질의 교육훈련 인력(교·강사) 확보 ▶ SW영재학급('21년 30→'25년 70개), AI선도학교('21년 500→'22년~ 1,000개교) 확대

② (반도체) K-반도체 전략('21.5)에 따른 분야별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에 따라 10년간 3.6만명의 인력을 차질없이 양성('21~)

< 반도체 인력양성 주요 프로그램 >

구분	인력양성 프로그램
학사 인력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반도체 분과('21~'26) ▶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 신설 ▶ 채용연계형 반도체학과 확대, 조기취업형 반도체 장비학과 신설 등
전문 인력	▶ 민관공동투자 고급인력 양성사업 신설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인력 양성사업('21~'25), 반도체 소부장 기술인력 양성사업('19~'23), 차세대 전력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20~'24) 확대 ▶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 확대(3→5개), 대학 ICT 연구센터 확대(2→3개)
실무 인력	▶ 시스템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사업 신설,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사업 신설 ▶ 한국 반도체 종합교육센터 구축 추진

③ (의사과학자) 자체백신 생산 등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고령 사회·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의과학 인력 양성 지원체계 마련('21.12)

- 학위-임상수련-전문의 등 과정별 연구활동 지원, 임상-연구 양립환경 조성, 의과학자로의 연구·진로지원 강화 등

* '21.下 인재양성 방안 마련 및 세부 실행계획·추진체계 정비 → '22.上 본격 시행

② 혁신적인 디지털 인재 양성 시스템 도입

[K-digital 인재양성 지원체계 구축]

①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디지털 인재양성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수요자 친화형 포털 'K-digital Academy(가칭)' 구축*(21.12~)

* 기존 직업훈련포털(HRD-net)을 개편·고도화하여 디지털 분야 정보제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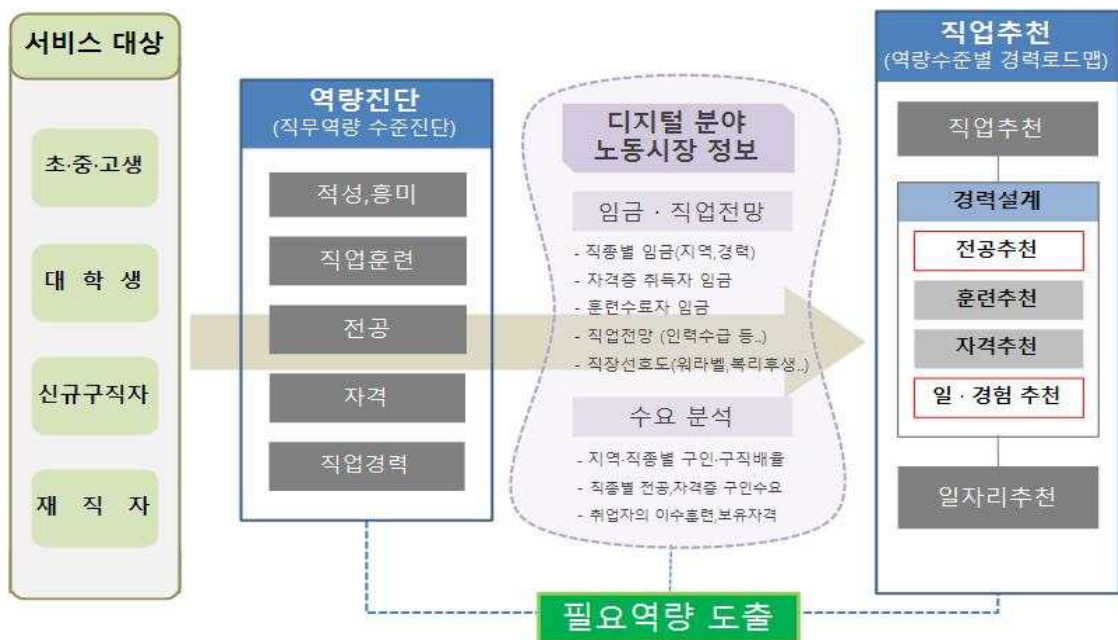
- 디지털·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사업, 직업훈련, 구인·구직 등의 서비스를 one-stop 방식으로 제공

② 빠른 디지털 산업구조 다변화에 대비하여 훈련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K-digital 경력개발로드맵(가칭)' 설계 추진(21.9~)

- 디지털 분야 유망직종 발굴, 직무 및 역량 분석 등을 강화하여 「진로탐색 - 역량분석 - 직업훈련」 각 단계별 상세정보를 제공

* (기존) 직종발굴, 직무분석, 정보제공 등이 NCS 중심의 전통직군에 집중 (개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新산업 분야 직종발굴, 직무분석 등 강화
↳ 디지털포렌식, 자율주행HW개발 등 디지털 분야 10개 NCS 신규 개발 (5.27 고시)

< K-Digital 경력개발로드맵 개념도 >



③ 'K-digital 인재양성 지원체계' 효율화방안 연구 추진(2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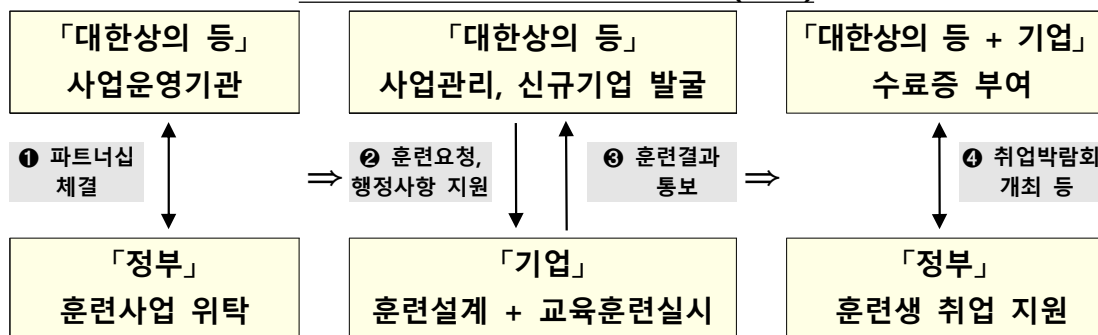
[기업 주도형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설 · 확산]

① 삼성(SSAFY), SK(하이파이브), 포스코(AI·Bigdata) 등 대기업이 설계·운영하는 「新산업 분야 우수 훈련모델」을 민간-정부 파트너십을 통해 확대(21.7~)

* (운영) 年 교육인원 1,000명 이상 추가 (추가훈련재원은 정부+민간 공동부담)
 (대상) 만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취약계층·지역인재 가점부여 등 우선선발)

- 기존 정부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한상의 등”이 사업운영 기관으로서 신규 참여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확대 추진
- “기업”은 교육과정을 설계·개발하여, 교육훈련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 기업 훈련프로그램 운영모델 (예시) >



▪ “훈련수료생”에게는 기존 기업자체 프로그램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

* 기업은 훈련프로그램 수수료증을 제공하여, 취업시 수료생을 적극 우대하고, 정부-기업 합동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수료생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지원

② 기업이 주도하고 대학(공동교육)과 정부(재원지원)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디지털 인재양성 체계 확산 지원

▪ (과정 도입형) 대학 內에 기업 교육과정을 도입

* (기업) 교육과정 설계운영 (대학) 교육장·기숙사 등 제공 (정부) 교육비·교재비 지원

▪ (과정 연계형)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기초 디지털(SW 등)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은 심화과정 제공 및 채용 연계

* (정부) 참여대학 발굴·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교육비 등 지원

▪ (공동 연구형) 고난도·도전형 연구를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고급전문가 양성

* (정부) 대학·기업 공동연구시 기업재직자가 대학교원으로 겸직 가능하도록 지원

③ 성과 중심으로의 직업훈련체계 개편 및 기관 자율성 제고

① (우수기관 유인) 디지털·그린 등 신기술 분야 HRD-net 강의 확충을 위해 민간의 우수한 훈련기관 유인 및 신규 훈련분야 보장(‘21.11)

* (현행) 훈련기관이 매년 한차례 직접 인증 신청시에만 심사를 통해 신규기관 등록 (개선) 직업능력심사평가원내 가칭 “훈련기관발굴팀” 조직하여 우수기관 발굴

② (훈련기관 관리) 운영성과에 따라 훈련기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부진기관은 집중 컨설팅을 통해 개선 지원

* ①BHA(Best HRD Academy) ②인증 우수훈련기관, ③일반 훈련기관

▪ 개별 기관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평가부담 및 규제 완화(‘21.11)

* ①분리하여 운영되던 기관 평가 및 과정 심사를 일원화(‘22년~)

②훈련 실시·변경·종료 관련된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③ (훈련비 체계) 성과기반 훈련비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훈련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성과에 집중하도록 유도

* (현행) 규제 기반의 시간당 단가 →

(개선) 자율성 기반의 1인당 단가 또는 취업률 등 성과에 기반한 훈련비 지원

▪ 훈련비 지원 기준을 대분류상 기준단가 기준으로 단계적 간소화 방안* 마련(‘21.11)

* (현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상의 세부직종별(소분류) 기준단가 →

(개선) 24개 대표직종(대분류) 기준단가 체계로 개편

④ (사업주 훈련) 기업의 수요 변화, 훈련방식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기업 실정에 맞는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훈련시간' 단축*(‘21.1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21.下)

(현행) 2일 이상·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일이상·8시간 이상) →

(개선) 일간 제한 폐지,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폐지, 4시간 이상

▪ 기업이 지자체·지역산단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하는 ‘기업 특화 일학습병행 모델’ 개발(‘21.12)

* 재직요건(1년 이내) 완화, 훈련시간·기간 자율성 등 추진

⑤ (채용예정자 지원)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시할 경우 훈련수당을 월 20→30만원으로 한시(‘21년) 인상(2차 추정)

④ 신산업 ·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산학연 협력체계 확산기반 구축]

※ '21.12월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단계 사업 기본계획 발표 추진(교육부)

① (수요연계 강화) 기업-연구기관-지자체 등 다양한 참여주체의 연구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22~)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시 협력 총괄기능을 하는 '허브대학' 지정 검토

* (현행) 개별대학 내 산업분야별 협업센터를 설치·운영(현 228개 운영 중)
(개선) 산업분야별 기업협업센터 네트워크 구축, 연구수요 공유 등 대학간 연계 강화

- 대학, 교수 및 지역 산업체 등이 자발적·실질적으로 산학연 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 활성화방안 마련

* (예) 기존 현장실습에 국한된 적립대상을 산학 공동연구개발(R&D), 기술이전, 공용장비 활용실적까지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확충

② (정보공유 확대) 산학연 협력 참여대학간 보유 장비 및 특허, 신기술 분야 교육현황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검토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국가기술은행 등 기존 플랫폼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안 검토

③ (성과창출 촉진) 산학연 협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편¹⁾ 및 기술이전·사업화조직 제도 개선²⁾ 등 추진

1) 3단계 LINC사업 개편시 결과(Outcome) 중심 성과관리 강화('22년~)

2) (예)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부담 완화(현 30%, 산학협력법 개정), 대학 보유기술 활용에 대한 기술지주회사의 직접 발명자보상 가능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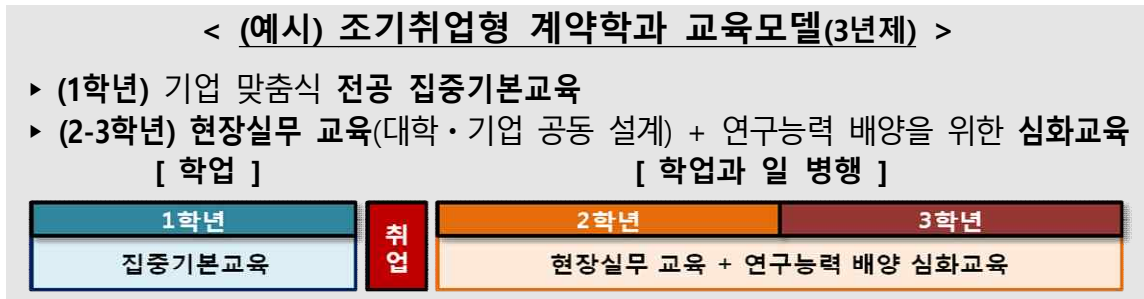
④ (선도형모델 확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모델 확산을 위해 기업 참여 인센티브 확대¹⁾, 기관별 역할분담 및 협력²⁾ 등 추진

1) 대학 연구자원(인프라 등) 개방·공유 확대, 학생 선발시 기업참여권 강화 등

2) (교육부) 신산업·디지털 분야 우수대학 발굴, (산업부·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도 교육청) 홍보 및 정보제공, (산업교육센터 등) 대학-기업 매칭

- AI, 소재·부품, 신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 ('21.7~)

* AI/SW융합, 반도체, 스마트 소재부품 등 계약학과 신설(학사 일정에 맞춰 순차적 설치)
- '20년 65개 → '21년 하반기 70개 목표



[**新기술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 ① 민간에서 사용하던 유휴 연구개발(R&D) 장비가 대학·중소기업 연구시설 등으로 활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민간의 유휴 연구개발(R&D) 장비를 대학·기업 연구시설 등에 이전할 경우 정부가 점검·이전·수리비¹⁾를 지원²⁾ ('21.7~)

1)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2) (기존) 국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된 장비를 이전할 경우에만 재정지원
(개선) 민간자금으로 구축된 장비를 이전할 경우에도 재정지원 가능

- 민간의 유휴 장비를 적정한 수요기관에게 매칭 지원하는 「장비활용종합포털(ZEUS)*」 운영 ('21.7~)

* 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장비 등록관리·공동활용·나눔·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 ② 인공지능, 초고성능컴퓨팅 등 신기술 연구를 위한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망 구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 전국 국립대학(38개교) 대상으로 전력공급 실태조사를 실시 (~'21.6월)하고, 전력 증설 등이 필요할 경우 보수비 지원 검토

- 「전력공급 여유정보 공개시스템*」을 개시('21.8)하여 대학·기업이 최적의 연구시설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345kV 변전소 기준 42개 권역별 여유 정보를 공개 예정

5.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1.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대응

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이행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세부 추진과제 마련]

- ①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21.5월 출범)에서 산업계·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우리 여건에 적합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21.6~)
 - * 경제여건, 기술·인프라 수준 등을 감안한 주요 전환과정과 ‘50년 미래상
- ② 이를 바탕으로 연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발표(‘21.11)
 - NDC 상향수준은 경제적 파급효과, 부문별 감축 잠재량 및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③ 과제의 시급성 및 사회적 수용도 등을 감안해 「탄소중립 3+1 전략」(3대 분야 10대 과제)의 주요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21.12)

3대 분야	10대 과제	주요 정책내용(잠정)	일정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①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4분기
	② 고탄소 산업 혁신	▶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4분기
	③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략」	4분기
	④ 도시·국토 저탄소화	▶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건물부문」 및 「해양수산분야」 2050 로드맵	3분기 4분기
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① 新유망산업 육성	▶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로드맵 2.0)」	4분기
	②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3분기
	③ 순환경제 활성화	▶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4분기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① 신산업 체계로 편입	▶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4분기
	②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현	▶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3분기
	③ 국민인식 제고	▶ 「탄소중립 학교환경 구성 및 지원 방안」	4분기
+			
제도적 기반 강화	① 배출권거래제 개선	▶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	4분기
	② 녹색금융 활성화	▶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성과 평가 및 개정검토	4분기
	③ 연구개발 역량 확충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로드맵」	2분기
	④ 국제협력 강화	▶ 「그린뉴딜 통합 ODA 추진 전략」	4분기

- 한편, 각 부처에서 既 추진중인 업무에 탄소중립 목표를 추가하여 전부처 정책 전환* 추진

* (예)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로 포함(공정위)
대체 단백질 식품 생산을 위한 배양육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식약처)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한 4대 핵심분야 적극 지원]

- ① 기후위기의 효과적 대응 및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지원 등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신설 추진

* 복수 부처에서 분절적·중복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에서 통합·조정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지원 도모

- 이를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안*」 및 「국가재정법」을 제·개정 하고, '22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마련(~'21.12)

* 기후대응기금의 설치근거, 재원 및 용도, 관리주체 등 규정

- ②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4대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

- (온실가스 감축지원) 기업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및 Net-zero 생산기반 마련

* (예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등

- (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기후대응 관련 新시장 선점을 위해 탄소중립 유망기업 지원 및 관련인력 양성 지원

* (예시) 탄소중립 관련 유망기술·기업의 사업화 지원,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등

- (공정한 전환 지원) 취약산업·지역 대상 맞춤형 공정전환 및 국민인식 제고 등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 (예시)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

- (제도·기반구축 지원) CCUS, 수소에너지 등 탄소중립 핵심 기술 R&D 지원 및 민간 참여유도를 위한 녹색금융 확대

* (예시)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상용화 기반구축, 석유대체 친환경화학기술개발 등

② 글로벌 ESG 확산에 대비하여 국내 ESG 인프라 고도화

- ①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공시·투자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평가 등 민간영역에 대한 관여 최소화
 - ESG 공시·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지표를 분석하여 범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마련('21.12)
 - * (1단계: '21년말)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핵심·공통 기준
→ (2단계: '22년) 산업별·기업규모별 차별화된 기준 마련
 - 녹색금융 기준제시 및 활성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금융·실물부문 영향분석 등을 통해 K-녹색분류체계(Taxonomy) 마련 추진
- ② ESG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을 집중 추진하며, 공공부문이 ESG 확산을 뒷받침
 -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국내·외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플랫폼* 구축('21.12)
 - * ESG 경영(ESG 관련 동향, 자가진단 툴 제공 등, 산업부·중기부) 및 투자(ESG 공시·채권정보 등, 금융위)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간 연계 추진
 -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 경영 컨설팅·교육을 강화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21.12)
 - *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재정사업 지원시 우대방안 마련 등 적극 발굴
 - 공공부문이 ESG 이행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ESG 공시항목 확대,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

③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 ① (수소전문기업) R&D, 기술사업화, 금융,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 프로그램으로 수소전문기업을 '40년까지 1,000개 이상 육성
 - * 수소법상 수소전문기업(개): ('21.6) 11(최초지정) → ('25) 100 → ('30) 500 → ('40) 1,000
- ② (수소도시*) 3개 시범도시(울산, 안산, 전주·완주)를 착공('21.7~)하고, 수소 사용기반(주택, 공공시설 등) 확충 및 그린수소 등 실증 추진
 - * 수소의 생산·이송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생활에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수소생태계 조성)되는 도시

③ (수소충전소)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기초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 보급 확대 및 안전성 확보 추진

* (현행) '21.5월 82기 운영 중 → (목표) '21년 180기 이상 구축

-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시 관련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 시행('21.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예정('21.7.14), 세부사항 관련 후속 하위법령 개정 추진중

- 개별 사업자의 상시 자체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소누출검지기 등 고성능 안전점검* 장비 지원

* 수소누출검지기(휴대용), 수소불꽃검지기, 접지저항측정기 등 4개 장비(약 800만원 상당)

④ (청정수소 활용 확산) 수소경제 쏠 분야의 청정수소 활용 기반이 될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 추진('21.10)

*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재생에너지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 블루수소(그레이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사용(CCUS)한 수소) 포함하는 개념

④ 재생에너지 사용,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저탄소화 지원

[新재생에너지 발전 확산체계 구축]

① 전북 서남해, 신안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집적화 단지¹⁾로 지정하여 적기 착공을 지원²⁾하고 인허가 제도개선 추진

1) 지자체 주도로 수용성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40MW 초과),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

2) 집적화단지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 가능(인허가 의제)

- 풍력 입지발굴에서 인허가까지 쏠과정을 지원하는 윈스톱샵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추진('21.12)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발의(김원이 의원 등 47명, 5.18일),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중(21.6~12)

② 해상풍력·태양광 등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수요 예측을 통해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절차 마련('21.10)

*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이 부족한 전북,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구축 등의 선제적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③ 기업의 탄소저감형¹⁾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 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구비한 자급자족형 산단을 조성²⁾

1) 기업 소비전력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19년 대기업·공기업 배출량 4,096만톤)

2) 현재 창원('20~) 및 반월시화('21~) 등 2개소에서 에너지 자급자족 산단 구축중

[민간의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산 유도]

①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유차량을 '30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을 선언하는 "K-EV100" 추진('21~)

- K-EV100 참여기업에 구매보조금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② 국내 기업의 글로벌 RE100 참여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국형 RE100(K-RE100)" 이행수단 완비 추진

* 글로벌 RE100: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캠페인(연 100Gwh 이상 소비 기업 등)
 한국형 RE100: 글로벌 RE100 대상기업 외 기업, 공공기관 등도 참여 가능
 → 다양한 RE100 이행수단 제공을 위해 전력구매계약 등 관련 규정 개정 신속 추진

< RE100 이행 지원체계 개요 >

이행수단	시기	개요
① 녹색프리미엄제	기시행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로 녹색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② 인증서 구매	'21.下	전기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RPS)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
③-1 제3자 계약	'21.下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
③-2 직접 계약	'21.下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직접 전력거래 계약 체결
④ 지분 투자	'21.下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전력거래계약 또는 REC 계약 체결
⑤ 자가 발전	기시행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③ '22년부터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생원료 사용 허용* 등을 통해 고품질 페트 재활용량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 추진

* '21년 하반기 내 관련부처(환경부, 식약처) 법령, 고시 개정 등 제도 완비

- 고품질 페트병¹⁾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페트병 규격·색상 등 통일화, 라벨 최소화 규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보증금제도²⁾ 확대 검토

1) 재활용 페트병(연 24만톤) 중 고품질로 재생산되는 비율은 약 10%(2만9천톤)로 일본 등에서 연간 2만2천톤 수입

2) '22.6월부터 회수율이 낮은(약 5%) 1회용 컵에 보증금제도 우선 도입하였으며, '20.12월부터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경과에 따라 페트병 보증금제도 도입 여부 검토

[국토·해양·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 추진]

- ① (국토) 중장기 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다핵-압축 구조'로 전환하고, 개발제한구역 등 탄소흡수원 보전·재생
- ② (해양)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60% 저감 및 2050년 제로화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 관리 강화
 - (발생예방)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의 친환경부표 교체 확대*,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추진('21.10)
 - * 보급률 목표: ('21) 38.7%(2,130만개) → ('22) 59.5%(3,273만개) → ('24) 100%(5,500만개)
 - (수거강화)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7척 건조 및 드론 신규 3대 추가('21.下), 해양쓰레기 분포도 작성을 위한 빅데이터 확보('21.12)
 - (거버넌스) 다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개시('21.10)
- ③ (도시) 탄소중립도시를 시범조성(새만금)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탄소 흡수원(공원 등) 확충 등 탄소중립 요소 반영

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비하여 대응전략 마련

- ① (대외) 우리 통상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탄소국경 조정제도 도입* 단계별로 예상 문제점을 적극 개선·대응
 - * EU는 '21.7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법안을 제출하고, '23년부터 본격 도입 예정
 - ▶ (다자논의) 무역장벽화에 대한 우려 표명, WTO 규범(비차별 대우 등)에 합치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마련 촉구, 면제·감면 최대 확보
 - ▶ (양자협의를) 제도 도입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
- ② (대내) 탄소저감 시설비용·R&D를 지원하고, 탄소량 증빙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¹⁾ 개선²⁾
 - 1)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한 성적표" 제출을 전제 → 환경성적표지 제도(환경부), 제품 환경발자국제도(EU)
 - 2) (현행) 환경영향 산정방법이 상이하며, 최신 데이터도 부족
(개선) 국제기준과 호환·통용될 수 있는 데이터 및 환경성적표지제도 개편
 - 배출권시장 관련 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유상할당 확대를 검토*하고, 탄소가격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추진(~'21.12)
 - * 既계획 제2차('18~'20년) 3% → 제3차('21~'25년) 10%

2.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체계 구축

①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관련 추진체계 및 제도 정비

① 기업의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 수요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전략적 수요발굴) 「사업구조 개편 파트너십¹⁾」을 구축(21.12)하여 제도간 칸막이 없이 다양한 유형의 사업구조 개편 수요를 발굴·선별²⁾

1) (구성) 관계 기관, 업종별 민간 협회·지자체·금융기관·VC 등

(기능)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 주기적 발굴, 사업재편 관련 실무 지침서 발간 등

2) 한계사업부문 축소 및 미래성장부문 확대 계획을 포함한 사업재편 계획수립 등을 검증하여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우 지원

- (맞춤형 지원) 기업별 특성·수요에 따라 사업재편·전환제도 (승인·지원) 또는 재정·금융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 저탄소·디지털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를 기반으로 설비투자 등 필요자금 지원

② 기업활력법(사업재편, 산업부) 및 사업전환법(사업전환, 중기부) 등 기존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 (사업재편) 개정된 기업활력법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등록면허세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재편 범위를 신산업 진출기업 등에게까지 확대* 추진

* (기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기업에게만 등록면허세 50% 감면
(개선)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에게도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8월)

- (사업전환) 중소기업 사업전환 승인 요건을 신사업 진출, 생산·경영혁신 등까지 확대* 추진(21.12 사업전환법 개정안 발의)

* (기존) 업종전환·추가 → (개선) 미래유망 신제품 생산, 생산시설 저탄소화 등

- (제도간 연계) 사업재편 추진 기업과 하청·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연계 지원하여 정책효과 제고

② 자발적 사업재편 및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산업혁신·재건 금융지원 프로그램 체계화]

① (전통산업) 사업재편·구조조정 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투자·보증·자산매입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체계화

- (대출)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3.0조원), 사업전환자금 융자(0.1조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금공급 추진
- (투자)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3.2→4.2조원) 및 버팀목펀드(0.2조원) 본격 운용하고, 사업재편 전용펀드(500억원) 신규 조성(’21.12)

- (자산매각*)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1조원, 부동산·선박), 설비 매각지원 프로그램(’21.9 시범운영)을 통해 유동성 확보 지원

* 사업재편·구조조정 등 이행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유휴 설비·부동산·선박 매각 등으로 사업재편·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

② (신산업) 신산업 분야로 전환하는 전통기업, 사업재편을 하는 신산업 기업에 뉴딜펀드 등을 통해 집중 지원

- 정책금융기관 융자 여력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 사업재편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하반기 집중 지원

- 미래 전략분야의 정부 R&D과제 성공기업에 대해 금리우대 대출, 연계 투자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사례 창출

* (각 부처) R&D 과제 성공기업 추천 →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 산업 혁신·재건 프로그램 체계화 >

유형	전통산업(9.4조원)	신산업(9.5조원)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3.0조원) ▪ 사업전환자금 (0.1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산업지원특별자금 (1.0조원) ▪ 대한민국 대전환(뉴딜) 특별자금(3.5조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구조혁신펀드 (4.2조원) ▪ 버팀목펀드 (0.2조원) ▪ <u>사업재편 전용펀드 (500억원)</u>^{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형 뉴딜펀드 (4.0조원)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부장 경쟁력 강화보증(0.8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융합보증 (1.0조원)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1.0조원) ▪ 설비 매각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 	

* 금액은 사업재편을 포함하여 해당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금액

③ (지원체계)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에서 산업 혁신·재건 프로그램 내 중복 지원 등 점검, 기업별 특성·수요에 대응하는 펀드·용자 매칭 지원

* 정책금융기관들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 집행관행 개선 및 지원체계 정비 역할 위해 既 설치(산은·신보·기은·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합동)

[중소기업·벤처기업의 M&A 지원 패키지 신설]

① (시장 외연 확충) 중소기업·벤처 M&A 시장에 마중물 공급을 위해 모태 펀드 내 M&A 펀드를 당초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0.1→0.2조원 수준)

②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벤처기업 M&A 대상 세제 인센티브 확대

- 이종 업종간 M&A 등 공동 사업재편¹⁾에 따른 자산양도시 자금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세이연 특례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²⁾ 축소(3→1년)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 사업재편

2)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기간

- 다양한 방식의 M&A 장려를 위해 기술혁신 M&A 법인세 감면 등 일몰예정인 M&A 세제혜택 적용기간 연장 검토(‘21.7)

③ (기업결합 신고부담 완화)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유형의 M&A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등 추진(공정거래법 개정)

- 중소기업창투사,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21.12)

* (기존) 중소기업창투사,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M&A를 진행하면서 임원겸임시 기업결합 신고 필요

(개선) 중소기업창투사, 벤처투자조합이 1/3 미만의 임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시 신고의무 면제

- M&A 전 기업인수 목적의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SPC(특수목적회사) 설립·출자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21.12)

④ (M&A 중개 활성화) 민관 M&A 중개 기관·플랫폼* 간 연계 강화 등 중소기업·벤처 M&A 중개 활성화 방안 마련(‘21.11)

* 중소기업·벤처 M&A 지원센터(기보·신보·IBK·VC협회 등), M&A 거래 정보망(중기부) 등

③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원활한 인력전환 지원

- ① (구조적 지원) 지역별 주력산업의 구조 개편과 지역 뉴딜 사업간 연계 추진 등을 통해 新 산업으로의 인력 흡수

▶ (예시) 지역주력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유도

지역	기존 업종	주력산업(연계)
대구	섬유	고효율에너지, 첨단소재부품,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울산	조선	그린모빌리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화학신소재
충남	내연차	친환경모빌리티, 스마트휴먼바이오, 차세대 디스플레이
광주	내연차	지능형가전, 스마트금형, 광융합, 디지털생체의료

- ② (교육·훈련) 신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시 근로자 역량강화 및 직무전환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확대·강화
-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근로자의 신산업 분야로의 직무 전환 지원 방안 검토

④ 사업재편 컨트롤 타워 신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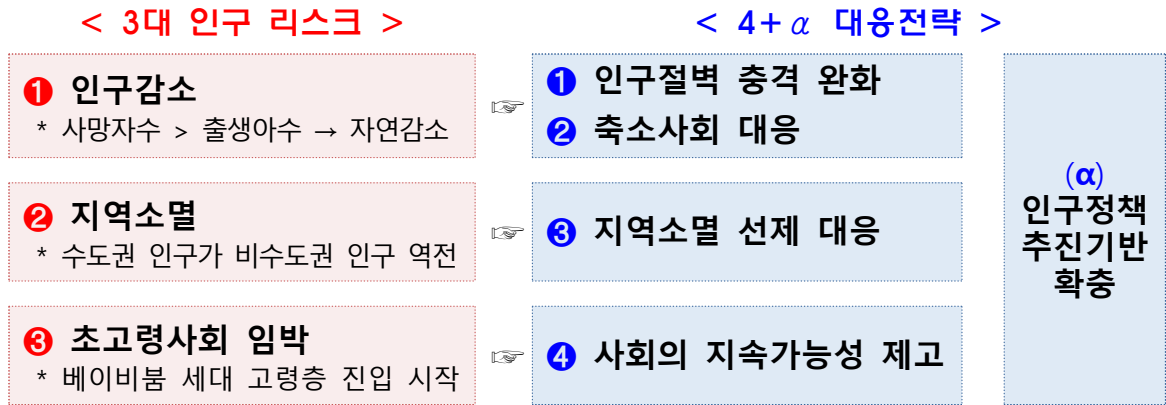
- ① (컨트롤 타워 정비) 광범위한 사업구조개편 추진 및 실물-금융 정책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21.12)

- ▶ (구성) 기재부 1차관 주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축, 상시 협력채널로 활용
- ▶ (기능) 전략적 수요발굴 시스템 구축, 효율적 지원프로그램 설계, 규제개선·애로사항 발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등

- ②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산업구조 변화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금융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1.12)
- ③ (실태조사)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해 기업별 재무·운영 상황, 개편 의지 등을 포괄하는 기업 실태조사 실시

3. 인구리스크 · 저출산 대응 강화

① 3대 인구리스크에 대비하여 「4+α」 전략으로 중점 대응



- ① (인구충격 완화)** ①여성·②고령자 노동참여 활성화, ③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 등 생산인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
 -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주체들의 노동활동 촉진
 - 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강화
- ② (축소사회 대응)**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숙련인력 고령화·청년층 진입기피 산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증가하는 1인 가구, 법률혼 외 다양한 가정형태 반영한 제도개편
- ③ (지역소멸 대응)**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①권역별 거점도시 집중 육성, ②소멸위기지역의 자립역량 강화 추진
- ④ (지속가능성 제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등 고령층 건강권 보장
- ⑤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인구통계 관리·분석,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② 인구TF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구체화

[인구 TF를 통해 인구리스크 대응책 지속 마련]

① 「제3기 인구TF(‘21.2~)」를 통해 핵심과제별 대책을 순차 발표

4+α 대응전략	핵심과제
① 인구절벽 충격 완화	▶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완화
	▶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속
	▶ 외국인력 부족문제 대응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마련
② 축소사회 대응	▶ 대학 경쟁력 강화 통해 학령인구 감소 대응
	▶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비 대응방안 수립
	▶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대응
③ 지역소멸 선제 대응	▶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 지방소멸 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
	▶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④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 급증하는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② 제1기(‘19년), 제2기(‘20년) 인구정책 TF 발표 과제(1기: 101개, 2기: 225개)* 이행상황을 점검(‘21.6월)하여 차질없이 추진 노력

- * (1기)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퇴직·개인연금 개편 등
 (2기)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청년 취업지원,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5대 지원 패키지 보강]

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바탕으로 한 저출산 극복 핵심 5대 패키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향후 이행실적 지속 관리

< 저출산 극복 핵심 5대 패키지 >

- 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①휴직자 최대 월 300만원(자녀 만0세 이내, 부모 모두 휴직 사용시) + ②中企 최대 월 200만원(자녀 만0세 이내, 3개월 이상 사용시) 지급
- ② (영아수당 신설) 0-1세 자녀 있는 가구에 '22년 월 30만원, 단계적 확대로 '25년 50만원
- ③ (첫 만남 꾸러미 도입) ①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100만원(확대)
+ ②첫 만남 바우처 200만원(신설) 지급
- ④ (공보육 확충)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 ⑤ (다자녀 지원 확대) ①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중위소득 200% 이하) + ②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등

② '22년 예산(안)에 저출산 패키지를 집중 반영(‘21.10)하여 본격 추진

[고령 사회에 대한 적응력 강화]

- ① (고용)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재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2~’26)」을 마련(‘21.12)
- ② (돌봄) 노인 대상 디지털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헬스케어·돌봄로봇 등과 연계방안 검토
 -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양로시설 IoT·AI 디지털 돌봄, IC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 ③ (산업)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분류체계 정비, 연구개발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마련(‘21.12)하고, 우수제품 우선구매* 지원
 - * 치매안심센터, 국공립 요양원·병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

③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인구 유입, 지역 활성화 방안 등 마련

- ①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 발굴*,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어촌지역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21.12)
 - * 귀어인 어선임대지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 귀어학교 개설·운영, 어촌관광활성화 등
 - 어촌뉴딜¹⁾ 신규 50개소를 선정(‘21.12)하여 낙후된 생활SOC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소멸대응형 시범사업²⁾ 계획 수립(‘21.12)
 - 1) (‘19) 70개소 → (‘20) 190개소 → (‘21) 250개소 → (‘22) 300개소
 - 2) (지역소멸시범사업 3+1) ‘소득·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삶의 질 개선’+‘안전’
 - 어촌가구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지급 완료(‘21.12, 2만여명)
- ②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필요기간 동안 적정 근로조건으로 활용 가능한 내·외국인* 파견근로자 활용 시범사업 추진(‘21.9)
 - * (내국인)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 농가에 부담되는 간접비(보험료·수수료) 지원 (1,000명, 6개월 동안 지원)
(외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농가 인력 부족 해소(무주 7월~)
 - 농촌의 노후주택과 빈집 정비, 축사·공장 시설의 난립해소를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5개 시군, ‘21.7~)
 - * 공간계획을 토대로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한 시군에 ①공간정비, ②주거·정주여건 개선, ③일자리·경제활력 제고, ④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스마트농업 인력·기술 등의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2개소(상주, 김제) 완공·가동(‘21.9)

4. 노동·재정·공공 등 부문별 구조 혁신

① 근로시간·임금 등 관련 노동시장 혁신 지원

[주52시간제 현장 정착]

- ① '21.7월부터 5인 이상 쉼 사업장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18.7월) 300인 이상·공공기관 → (20.1월) 50~299인 → (21.7월) 5~49인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등 재정지원 사업¹⁾ 및 정부 지원사업 우대²⁾ 등 지속 추진

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단축 1인당 120만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40~80만원)

2) 조기단축 기업,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고용부 확인서 발급→각 부처 우대지원)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 정책자금 대출, 외국인력 배정 등 우대지원

- 기업맞춤형 1:1 컨설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솔루션 제공 및 인력알선·재정지원 등 정부지원 연계

* (5~49인)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50~299인)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② 주52시간제 보완제도 확산 노력 지속

- 既 개편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 연구개발 선택 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3개월) 등 보완제도 확산노력도 지속

[채용·임금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 ① (채용 공정성)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확립을 위해 신규지정·소규모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 등 공정채용 지원* 지속 추진

* 밀착 컨설팅(블라인드 채용제도, 직무능력중심 평가 등), 면접관 Pool제 운영

-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으로의 공정채용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등에도 채용 컨설팅 지원(250개)

- ② (공무직 처우개선) 임금체계·구성항목·임금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 통일된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

②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혁신 노력 강화

[재정총량관리 및 지출 효율화]

- ①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전략 수립('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1.9)
 - 완전한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단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
 -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면서 계획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고 '25년 재정준칙* 시행에도 대비

*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제출('20.12월)
- ② 위기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의 질서있는 정비 등 과감한 지출 효율화를 통해 미래대비 실질 가용재원 확보
 - 관행적 출자·출연·보조사업의 원점 검토 및 재정사업평가 제도*를 활용한 유사중복·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정비

*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사업평가, 일자리지원사업평가 등 11개 평가 운영

 - 각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지출구조조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

* 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부처 핵심 투자부문의 신규·계속 사업으로의 재투자를 보장
②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우수부처는 기본경비 인센티브 제공 검토
- ③ 사업목적이 유사하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다부처 연계 사업군에 대해 부처가 공동 기획·요구·집행하는 협업예산 확대*

* 국산 백신개발 및 허브구축 협업예산 등 17대 중점과제에 대해 시행

[국민참여 기반 재정운용 강화]

- ① 찾아가는 국민제안, 정책고객 간담회,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 등을 통해 국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활성화
- ② 예산편성·집행·제도개선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활용

③ 혁신조달 확산, 계약제도 개편 등 공공조달 체계의 전략적 운용

- ① 공공부문 혁신구매 목표*를 상향 조정(물품구매액의 1%→1.2%)하고, 혁신제품 수도 지속 확대('20년 345개 → '21년 900개 이상)
* ('20) 4,173억원<'18년 물품구매액의 1.0%> → ('21) 5,477억원<'19년 물품구매액의 1.2%> ('20년 대비 +31.2%↑)
- ② 수요기관·조달기업의 혁신조달 업무 소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설립기반 마련(조달사업법 개정, '21.6 既 발의)
* 공공조달 수요 발굴, 혁신제품 지정, 수요기관·기업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 ③ 조달청·코트라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혁신조달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신설 등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 「G-PASS 지정제도」(조달청),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코트라) 등
- ④ 주요 국가과제 성과 창출에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조달 3개년 계획*」 수립('21.12)
* (예) ESG 도입 및 혁신조달 강화 등 조달계약제도 개선, 조달 통계 및 인프라 강화
- ⑤ 先시행-後제도화 방식 도입¹⁾ 등 혁신산업·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와 공공조달 소 생애에 걸친 성과관리²⁾ 방안 마련('21.12)
1)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先 도입하여 시범운영과 성과 점검 후 정규 제도화
2) 조달시장 성과목표 대비 운영 현황 수시 모니터링 및 개별 계약제도 심층평가

④ 국유재산 효용 극대화 및 국가채권 관리 강화 등 추진

- ① 개발주체, 자금조달 방식 등 국유재산 개발 다각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21.12)
* 민간 장기임대방식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간이 국유재산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국유재산법 개정 등)
- ② 국유재산 특례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 특례 사전심의, 既 운용 중인 특례 사후 존치평가 등 특례 가이드라인 마련('21.10)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무상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
- ③ 채권관리 사각지대 해소, 채무자 재산자료 요청근거 마련, 회수 위탁 실효성 제고 등 「국가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21.12)

5 공공기관 윤리경영, 재무관리 강화 등 경영혁신 노력 지속

1 (윤리경영)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혁신노력을 위해 경영평가 지표 중 윤리경영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내용·기준을 강화*

*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반영,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행위 발생시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

- 공공기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상향 조정
- '표준 윤리경영 진단모델'* 마련, 직무별·조직별 행동강령 세분화, 기관별 윤리수준 진단·이해충돌방지방안 제시 등 내부통제 강화

*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방안(가칭)」 연구용역 거쳐 개발

2 (재무건전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별 재무상황에 따른 차별적 관리체계 도입

* 부채종류별 증감전망과 그 근거, 상환재원의 조달방법시점 등을 부채관리계획에 구체화

-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기관¹⁾은 증원·출연 등을 제한하고²⁾, 재무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경영평가기준을 강화

1) 대상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자산 2조원 이상, 정부손실보전) 40개 기관

2) 연도별 출연예정 규모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총출연규모 관리 등

3 (보수체계) 직무중심 보수체계 점검결과¹⁾를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하고, 수용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지속²⁾

1) '20년 경영실적평가부터 직무급 도입준비·수준 평가 신설

2) 노동계·공공기관의 수용도 제고 위해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를 통해 노·정 대화 지속

- 기관별 임금피크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지속 확대

* (예) 과도한 임금피크 기간·인원, 퇴직 3~4년전 조기 현업배제 등 부적절한 운영 개선

4 (안전강화) '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은 개선계획 수립, 안전컨설팅 등 후속조치 시행

IV. 2021~2022년 경제전망

	2020년	2021년 ^e		2022년 ^e
		[수정]	[당초]	
■ 경제성장률(%)	△0.9	4.2	3.2	3.0
■ 취업자증감(만명)	△21.8	25	15	25
- 고용률(% , 15~64세)	65.9	66.4	65.9	66.8
■ 소비자물가(%)	0.5	1.8	1.1	1.4
■ 경상수지(억불)	753	770	630	660
- 수출(전년비, %)	△5.5	18.5	8.6	3.8
- 수입(전년비, %)	△7.1	22.4	9.3	3.0

1 2021년 경제전망

① (성장)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면서 4.2% 성장 전망

- 위기前 GDP 규모는 회복하겠지만 '20~'21년 평균성장률은 1.7%로 위기前 성장경로 복귀를 위해서는 정책노력 지속 필요
- 내수의 경우 거주자 국내소비 기준으로는 취약부문 보강을 위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위기 이전수준 회복 기대

* 민간소비(국내+해외소비) : ('19년) 894조원 → ('20년) 849조원 [△5.0%] → ('21년) +2.8%
 - 거주자 국내소비 : ('19년) 825조원 → ('20년) 802조원 [△2.8%] → ('21년) +2.8% 이상

② (고용) 최근 회복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금번 일자리 추가 지원 효과 등으로 취업자수 +25만명 증가 전망

- 연간으로는 작년 감소분(△22만명) 이상을 회복할 전망
- 월 취업자 수도 위기직전('20.2월, 2,751만명) 수준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노력 강화

* 취업자수(만명, S.A.) : ('20.2월) 2,751 → ('21.1월) 2,649 → ('21.5월) 2,731

③ (물가) 하반기 공급측 수급여건 개선, 물가안정 정책노력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1.8% 상승 전망

- 국제유가, 기상여건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하여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④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서비스수지도 개선되면서 작년보다 소폭 확대된 770억불 흑자 전망

- 수출(통관) 18.5% 증가(6,075억불), 수입(통관) 22.4% 증가(5,725억불)로 모두 역대 최대치(무역규모 1조 1,800억불) 갱신 예상

* 수출규모(억불) : ('17) 5,737 ('18) 6,049<역대 최대> ('19) 5,422 ('20) 5,125 ('21^e) 6,075

* 무역규모(억불) : ('17) 10,522 ('18) 11,401<역대 최대> ('19) 10,456 ('20) 9,801 ('21^e) 11,800

2 2022년 경제전망

① (성장) '22년에도 회복국면이 이어지면서 3.0% 성장 전망

- '20~'22년 평균성장률 2.1%로 위기前 잠재수준과의 격차 크게 축소

❖ 위기 이후 회복속도: 금번 위기가 '98년 외환위기 당시 역성장에서의 회복속도 보다 빠른 수준

▶ 성장률(%) : [코로나 위기]	('17)3.2 ('18)2.9 ('19)2.2	('20)△0.9 ('21)4.2 ('22)3.0
	<평균 2.8%>	<평균 2.1%, 위기전 대비 76% 회복>
[외환위기]	('95)9.6 ('96)7.9 ('97)6.2	('98)△5.1 ('99)11.5 ('00)9.1
	<평균 7.9%>	<평균 5.1%, 위기전 대비 65% 회복>

- 내수: 이연된 소비 분출이 본격화되면서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내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 : ('19) 2.1 → ('20) △5.0 → ('21^e) 2.8 → ('22^e) 3.5

- 수출: 신흥국 중심 글로벌 경기회복세 및 반도체 경기호황 지속 등으로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3.8% 증가 전망

*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6천억불 상회 예상

② (고용)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고용이 본격 회복되면서 '21년과 동일한 +25만명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감(만명) : ('18) 7.4 ('19)△5.6 ('20)△23.1 ('21^e)△22.5 ('22^e)△24.6

- 기저·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 감안시 '21년 보다 강한 개선흐름

③ (물가) 농축산물, 국제유가 등 공급측 상승압력 완화로 올해보다 오름폭이 둔화되면서 소비자물가 1.4% 상승 전망

- 다만,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본격적인 수요회복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서민 생활물가 관리 노력 지속

(전년동기비, %)

	'20년 실적	'21년 ^e		'22년 ^e
		1/4(실적)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	△3.3	-	6.0	4.4
Dubai 유가(\$/bbl)	42	60	65	64
실질 GDP	△0.9	1.9	4.2	3.0
민간소비	△5.0	1.2	2.8	3.5
설비투자	7.1	12.4	8.7	3.0
건설투자	△0.4	△1.8	1.2	2.8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0	4.2	4.0	3.8
경상 GDP	0.4	4.6	5.6	4.2
취업자 증감(만명)	△22	△38	25	25
고용률(15~64세, %)	65.9	64.9	66.4	66.8
소비자물가	0.5	1.1	1.8	1.4
경상수지(억달러)	753	228	770	660
상품수지(억달러)	819	196	753	770
수출(통관,%)	△5.5	12.5	18.5	3.8
수입(통관,%)	△7.1	12.1	22.4	3.0
서비스·본원·이전 소득수지(억달러)	△67	32	17	△110

* IMF World Economic Outlook('21.4월 기준)

1. '21.7월 주요 추진과제 - 58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신용회사채·CP 매입기구(SPV) 매입기간 연말까지 연장 추진 	기재부·금융위·한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사업자 햇살론' 대환자금 지원요건 합리화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 지원기준 완화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완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 추진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자는 마스크 착용의무·다중이용시설 인원기준 등 완화 적용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백신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개발·수급·통관인허가 등 집중 지원 	복지부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래블 버블 운영계획 확정 	국토부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코로나19 시대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 수립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반도체, ②배터리(이차전지), ③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안) 발표 ('2021년 세법개정안')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입주 시 수출액 비중(매출액 대비) 기준요건 완화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항로 임시선박 추가 투입·항공기 적재공간 확보 	해수부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화주에 우선 배정 	산업·해수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화주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선사에 '컨' 박스 신규확보 지원 추진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무역지역·경자구역 내 입주기업 임대료 30% 감면 6개월간 연장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마련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예측 지원단' 구성 	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금융위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주담대 LTV규제 서민·실수요자 우대 요건 및 혜택 확대	금융위
■ 하반기 공공기관 1.4만명, 지방공기업 0.2만 신규 채용 추진	기재부 행안부
■ 코로나 이후 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하반기 사회서비스일자리 2.5만개 창출	복지부 등
■ 우수 중소기업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등 기업-구직자 간 매칭 지원	중기부 고용부
■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정책자금 대출시 불이익이 없도록 대출한도 산정기준 합리화	중기부
■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기존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 지원 확대	중기부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및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유보 추진	국토부 기상청
■ 이동통신사의 eSIM 도입방안 마련 위한 협의체 구성	과기정통부
■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지원	과기정통부
■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의 가격·지원금 정보제공 기능 개선	과기정통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청년특례 재산기준 상향(3→4억원 이하)	고용부
■ '대기업 참여 인턴십' 운영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고용부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고용부
■ 현장실습 축소 등에 따른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	교육부 고용부
■ 하반기 중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 지원사업을 집중 발굴·추진	교육부 교육청
■ 만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 확대	복지부
■ 저소득 특고종사자·사업주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집중 홍보 시행	고용부
■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2.4→2.7조원)	금융위
■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시 서민금융 대출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금융위
■ 정성 정보를 감안한 '서민신용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한도, 금리 결정 등에 활용	금융위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양육비를 고의로 미지급하는 경우 제재조치 강화	여가부
■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	국세청
■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기재부
■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중기부 국조실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마련	고용부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추진	기재부
■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산업부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설	중기부
■ 가명정보 활용기반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 대상 기술, 시설·장비, 전문인력 등 지원체계 확충	개보위
■ 제3차(’22~’2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수립	과기정통부
■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문체부
■ 비대면 스타트업 1000 지원규모 확대	중기부
■ 대기업 주도 「新산업분야 우수 훈련모델」 확산	고용부
■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	중기부
■ 민간의 유허 연구개발 장비를 대학·기업 연구시설 등으로 이전 시 점검·이전·수리비 지원	과기정통부
■ 민간의 유허 연구개발(R&D) 장비의 대학·중소기업 연구시설 매칭 지원	과기정통부
■ 수소도시 3개 시범도시 착공(울산, 안산, 전주·완주)	국토부
■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지자체 인허가 의제제도 시행	환경부
■ 내·외국인 파견근로자 활용 시범사업 추진	농림부
■ ‘농촌공간계획’ 수립(5개 시군)	농식품부

2. '21.8월 주요 추진과제 - 16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 운용기준을 중소기업·서비스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개선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기금 성실상환 자영업자 대상 소액대부 한도 상향(최대 2천만원)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 개발·출시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 적기 투자 지원 및 재무건전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 시행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뉴딜 지자체 우수사업을 대상으로 특별교부세(3분기) 및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 배정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란우산공제회 부금 납부중지 신청기준 한시 완화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의 성별 임원현황 조사·발표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대책」 마련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랩센트럴(K-바이오 랩허브) 예타 추진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수준의 AI 인재양성을 위한 AI 혁신허브 신설 	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 개시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방안’ 수립 	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 및 R&D 추진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미디어 콤플렉스’ 개소 	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테스트베드’ 제공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형 SW인재양성 사업 기획 	과기정통부

3. '21.9월 주요 추진과제 - 24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유턴기업에 대해 조성원가 이하 분양 및 전용용지 입주 허용	산업부
■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 도입	금융위
■ 사업재편 기업 보유 설비 등을 캠코에서 매입 또는 매입 후 재임대(S&LB) 지원 시범사업 실시	금융위
■ 햇살론 유스 내 ‘특정용도자금’의 연 대출한도 상향	금융위
■ 상장법인까지 포함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발표	여가부
■ ‘복지멤버십’ 서비스 단계적 시행	복지부
■ 중학생 이하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강화	교육부 여가부
■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신고 창구를 온라인으로 확대	중기부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복지부
■ 반도체 공정 탄소중립화 추진	산업부
■ AI 핵심자원을 총 집약한 집적단지 착공	과기정통부
■ 데이터 표준화 연구 및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 구성	개보위
■ 지능형로봇 실증거점 공모 및 인프라 구축 착수	산업부
■ 로봇 활용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설계 연구 추진	산업부
■ 「2050 탄소중립 산업 R&D전략」 수립	산업부
■ 첨단 투자지구 후보지구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추진	산업부
■ 한걸음 모델 하반기 추진과제 선정	기재부
■ 「출판유통 통합 전산망」 운영	문체부
■ 한중일 e-스포츠 대회 개최	문체부
■ 「벤처 생태계 보완방안」 수립	중기부
■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	금융위
■ AI대학원·SW중심대학 신규 선정 대학 개소	과기정통부
■ 「K-digital 경력개발 로드맵(가칭)」 설계 추진	고용부
■ 중기 재정운용 전략 수립	기재부

4. '21.10월 주요 추진과제 - 17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물 운영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IR 개최 지원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內 지역뉴딜 등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위기요인별로 맞춤형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고용유지 지원서비스 시범 운영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요건심사형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완화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 ISP(정보화전략계획) 마련 	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문화원 소재지역 중심 온·오프라인 문화축제 개최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gital 인재양성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추진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마련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 추진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절차 마련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추진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 특례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5. '21.11월 주요 추진과제 - 4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융합특구 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 마련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 수주비리 등 3회 적발시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3진 아웃제' 도입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형 일자리 관계부처 TF」를 통한 원스톱 결정·지원시스템 구축 	기재부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입로, 노점·상품진열대 도로점용료 요율 인하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요율기준 신설 	국토부

6. '21.12월 주요 추진과제 - 13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현장민생공무원(경찰·소방·사회복지 등) 0.8만명 충원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분리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대기업집단 규율의 사각지대 해소 	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보완 추진 	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검토,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방안 마련 등 추진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웹툰 특화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지정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커 공간을 전문랩·특화랩 중심으로 확대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테스트베드 통합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실시·운영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gital Academy(가칭)」 구축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가격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F 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및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면제 	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자·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공정위

별첨 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 일반국민 1,000명, 경제 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조사(KDI)

◇ 국민들은 '민생경제 회복' 및 '포용적 회복'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성장 동력 확보'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응답

☞ '21년 하반기는 민생개선 및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과 동시에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 전환에 총력

1. 경제상황 평가 및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① (경제상황 인식)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

* 상반기 경제상황 : 전문가의 경우, 89.9%가 비슷하거나 좋아졌다고 평가(일반국민: 50.1%)
하반기 경제전망 : 전문가 95.2%, 일반국민 79.8%가 비슷하거나 좋아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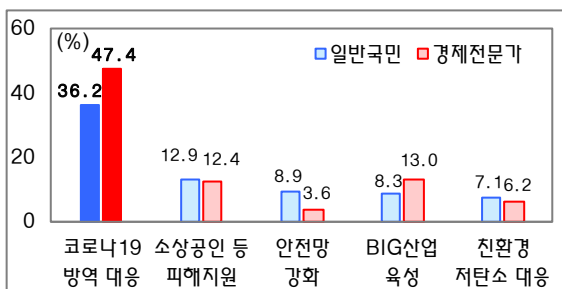
○ 대외적으로는 미중갈등 및 美 테이퍼링 가능성,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

* 대외리스크(% , 1위 답변) : [국민] 미중갈등(24.3) [전문가] 美 테이퍼링(24.6)
대내리스크(% , 1위 답변) : [국민] 부동산시장(27.0) [전문가] 부동산시장(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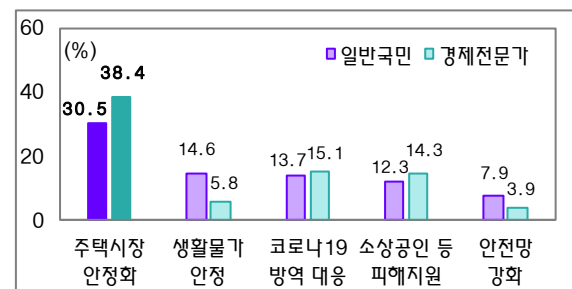
② (상반기 평가) 상반기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순으로 선정

○ 다만,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 부동산·물가 안정 등이 제기

상반기 잘한 정책(상위 5개)



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정책(상위 5개)



③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경제·포용적 회복을 우선순위로 인식하면서, "새성장 동력 확보"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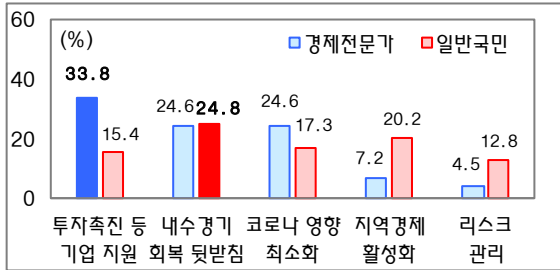
(%)	완전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 전환		
	더 빠르고 강한 회복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새성장 동력 확보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일반국민	17.4	32.5	27.3	11.7	10.2
전문가	27.5	16.8	31.1	19.5	3.6

2. 세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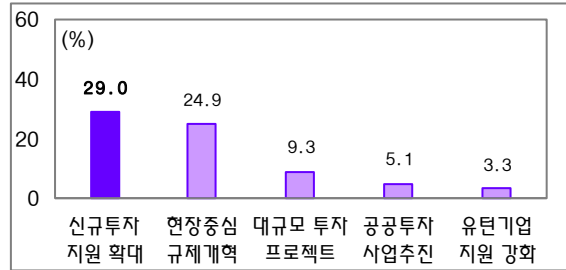
【 완전한 경제회복 】

- ①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중점정책으로 ‘투자 촉진 등 기업활동 지원’, ‘내수경기 회복 뒷받침’ 등이 우선순위로 지목
- 전문가들은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과제로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주문

더 빠르고 강한 회복 중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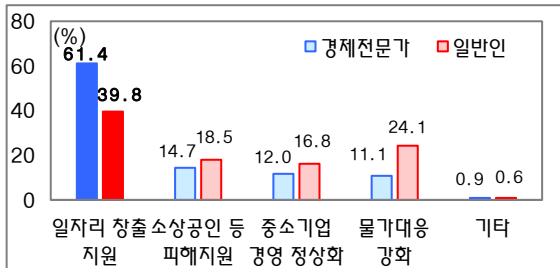
투자촉진을 위한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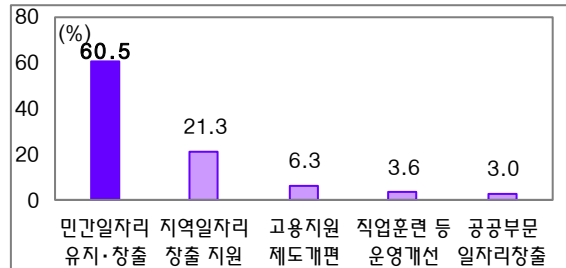
- ②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을 중점정책으로 응답

-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핵심과제로 민간일자리 유지·창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

민생경제 회복 중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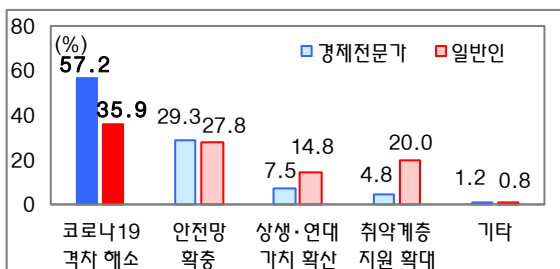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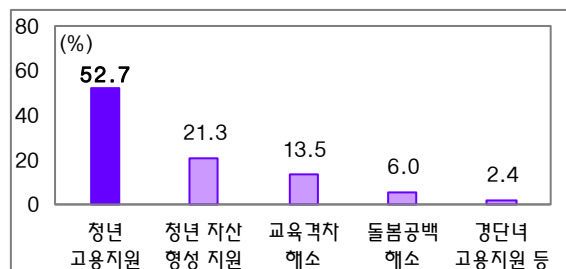
- ③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격차 해소’,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주요 정책으로 강조

-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은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 대상 고용지원을 최우선과제로 지목

포용적 회복 중점정책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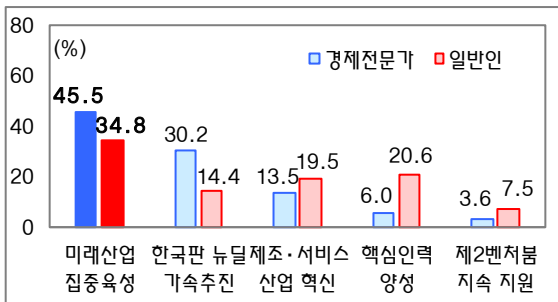


【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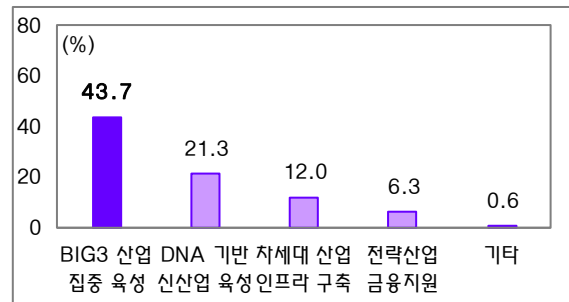
① “**새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점 분야로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가속추진’ 등 제기

- 전문가들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BIG3 산업 집중 육성을 지목하였으며, DNA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 차세대 산업 인프라 구축 등도 핵심과제로 언급

새성장동력 확보 중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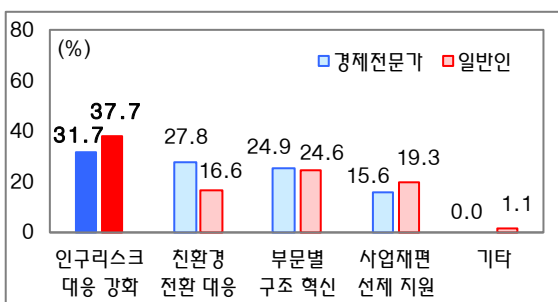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



②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의 경우 ‘인구리스크·저출산 대응 강화’와 함께 ‘친환경·저탄소 전환 대응’의 우선순위가 높은 모습

- 특히, ‘인구리스크·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일·양육 병행환경 조성,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하였으며,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중점정책



인구리스크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

